

주요국 예산안 2012

2012. 2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승현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권나현 (총괄)
 이종호 (총론)
 오정미 · 구윤모 (미국)
 채민희 (캐나다)
 김진아 (일본)
 신승희 (프랑스)
 김선미 (독일)
 이은희 · 권나현 (영국)
 최경진 (호주)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부 총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3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3
2. 세계 재정 전망	8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23
- 7개국 종합 -	23
1. 미국(FY 2013:2012.10 ~ 2013.9)	28
2. 캐나다(FY 2011:2011.4 ~ 2012.3)	31
3. 일본(FY2012:2012.4 ~ 2013.3)	33
4. 프랑스(FY 2011:2011.1 ~ 2011.12)	37
5. 독일(FY 2012:2012.1 ~ 2012.12)	40
6. 영국(FY 2011-12:2011.4 ~ 2012.3)	42
7. 호주(FY 2010-11:2010.4 ~ 2011.3)	45

제2부 각국 예산안 분석

I. 미국	51
1. 경제 및 재정 전망	54
가. 경제 전망	54
나. 재정 전망	55
2. 예산기조	58

3. 예산안 내용	59
가. 세입	59
나. 세출	61
4. 주요재정정책	65
가. 재정건전화	65
나. 성장잠재력 지원	66
II. 캐나다	69
1. 경제 및 재정 전망	73
가. 경제 전망	73
나. 재정 전망	74
2. 예산기조(Budget 2011)	76
3. 예산안 내용	78
가. 세입	78
나. 세출	80
4. 주요 재정정책	84
가. 재정건전화	84
나. 경기부양책	89
III. 일본	92
1. 경제 및 재정 전망	96
가. 경제 전망	96
2. 예산기조	99
3. 예산안 내용	100
가. 세입	100
나. 세출	102

4. 주요 재정정책	105
가. 「엔고의 종합적 대응책」 발표(내각부, 2011.10.21)	105
나. 「일본재생중점화조치」(재무성, 2011.12.24)	108
다. 「재정건전화에 대한 소고」 발표(재정제도분과회의, 2011.12.9)	110
 IV. 프랑스	112
1. 경제 및 재정 전망	116
가. 경제 전망	116
나. 재정 전망	118
2. 예산기준	122
3. 예산안 내용(LF 2012)	124
가. 세입	124
나. 세출	125
4. 주요 재정정책	130
가. 재정건전화	130
나. 복지지출 관리 정책	132
 V. 독일	136
1. 경제 및 재정 전망	140
가. 경제 전망	140
나. 재정 전망	141
2. 예산기준	146
3. 예산안 내용	148
가. 세입	148
나. 세출	149
4. 주요 재정정책	152

가. 재정건전화 관련	152
나. 특별예산: 에너지 및 기후 기금	152
다. 기타	154
VI. 영국	155
1. 경제 및 재정 전망	158
가. 경제 전망	158
나. 재정 전망	159
2. 예산기조	162
3. 예산안 내용	163
가. 세입	163
나. 세출	167
4. 주요 재정정책	172
가. 재정건전화	172
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74
VII. 호주	176
1. 경제 및 재정 전망	179
가. 경제 전망	179
나. 재정 전망	180
2. FY2011-12 예산기조	183
3. 예산안 내용	185
가. 세입	185
나. 세출	190
4. 주요 재정정책	194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94
나. 재정건전화	195

표 목차

제1부 총론

<표 I-1> 세계 경제 전망	5
<표 I-2> 국가별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	8
<표 II-1> 각국 예산안 일정	24
<표 II-2> 2011년 재정 전망	25
<표 II-3> 미국 경제 및 재정 전망	28
<표 II-4> 캐나다 경제 전망(2011년 11월 현재)	31
<표 II-5> 캐나다 재정 전망(2011년 11월 현재)	31
<표 II-6> 일본 경제 전망	33
<표 II-7> 일본 주요 재정지표	34
<표 II-8> IMF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37
<표 II-9> 프랑스 2011-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	38
<표 II-10> 독일 경제 전망	40
<표 II-11> 독일 재정 전망	40
<표 II-12> 영국 경제 전망 및 재정 전망	42
<표 II-13> 호주 경제 전망	45
<표 II-14> 호주 재정 전망	46

제2부 각국 예산안 분석

<표 I-1> FY2013 예산안 경제 전망	54
<표 I-2> FY2013 예산안 재정 전망	56

<표 I-3> 분야별 세입 전망	61
<표 I-4> 항목별 지출 전망	63
<표 I-5>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내역	63
<표 I-6> FY2013 예산안 전망 및 재정적자 감축추이	65
<표 II-1> 캐나다 경제 전망(2011년 11월 현재)	74
<표 II-2> 캐나다 재정 전망(2011년 11월 현재)	75
<표 II-3> 세입 전망	79
<표 II-4> 프로그램지출 전망	81
<표 II-5> 2007~2010년 1차 전략검토 효과	84
<표 II-6> 전략검토 절감분 전망	86
<표 II-7> Budget 2011 절감조치	87
<표 II-8> 캐나다 재무부의 FY2011-12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재정건전화 계획 ...	88
<표 II-9> 경기부양 2개년 계획 추진내역	90
<표 II-10> 경기부양 2개년 계획 - 기반시설확충 내역	91
<표 I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97
<표 III-2> 주요 재정지표 추이	98
<표 III-3> FY201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00
<표 III-4> FY2012 조세 및 인지수입	101
<표 III-5> FY2012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102
<표 III-6> 대응책의 규모	107
<표 III-7> 일본재생중점화조치 분야별 우선·중점사업	109
<표 IV-1>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116
<표 IV-2>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117
<표 IV-3> 프랑스 2010-2014년 재정 전망	119
<표 IV-4> 프랑스 2011-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	120
<표 IV-5> 프랑스 2009-2014년 부채비율 전망	121
<표 IV-6> 중앙정부 2012 예산안	123

<표 IV-7> 세계개편 현황	125
<표 IV-8> 2011-2012 미션별 세출 내역	127
<표 IV-9> 복지 관련 지출과 수입	132
<표 IV-10> 2012년 사회보장부문 예산	134
<표 V-1> 독일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141
<표 V-2>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2011~ 2015)	142
<표 V-3>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144
<표 V-4> 독일정부 총부채 규모(독일 재무부 전망)	144
<표 V-5> 독일정부 총부채 규모(IMF/EU 전망)	145
<표 V-6> 재정적자 감축계획	146
<표 V-7> 연방정부 2012년도 예산	148
<표 V-8> 2012년 독일연방 부처별 예산현황	149
<표 V-9>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153
<표 VI-1> 2011년 3월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158
<표 VI-2> 영국 경제 전망	159
<표 VI-3> 영국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161
<표 VI-4> 2011년 가을보고서 정책효과	162
<표 VI-5> 가을보고서 세입정책 효과	164
<표 VI-6> 경상세입 전망	165
<표 VI-7>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효과	169
<표 VI-8> 총관리지출 전망	170
<표 VI-9> 2010년 이후 재정건전화 총규모 전망	172
<표 VI-10> 인프라 투자 지출 규모	175
<표 VII-1> 주요 경제 변수	179
<표 VI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추이	181
<표 VII-3> FY2011-12부터 FY2014-15까지 예산의 주요 지출 계획	184
<표 VII-4> FY2011-12 예산안 재정수입 전망	186

<표 VII-5> FY2011-12 예산안의 재정수입 전망	187
<표 VII-6> FY2011-12 반기 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 전망	188
<표 VII-7> 반기 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 전망	189
<표 VII-8> FY2011-12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기능별지출 전망 비교 ...	190
<표 VII-9>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192
<표 VII-10>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실질지출증가율 전망	195
<표 VII-11> FY2011-12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실질지출증가율	196
<표 VII-12> 주요 예산절감 계획	197

그림목차

제1부 총론

[그림 I-1] 세계 경제성장률	3
[그림 I-2] 세계 실질성장에 대한 비OECD 국가의 기여도	6
[그림 I-3] 침체되고 있는 세계무역(CBI 세계무역지수)	7
[그림 I-4] 재정건전화 계획의 구성(2011-13년 총수지의 변화)	9
[그림 I-5]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11
[그림 I-6] 일반정부 총부채: 선진국 중 일부국가	14

제2부 각국 예산안 분석

[그림 I-1] FY2013 예산안 연방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전망	51
[그림 III-1] 국가별 GDP 대비 부채비율	110
[그림 IV-1] 재정지출 추이	131
[그림 IV-2] 2011-2012 복지 재정 지출과 수입 추이	133
[그림 IV-3] 의료비 지출 증가율 목표 추이와 전망	134
[그림 V-1] 독일 연방정부 재정수입 및 지출 추이	143
[그림 V-2] 독일 연방정부 2012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	151
[그림 VI-1] FY2012-13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규모	167
[그림 VI-2] FY2012-13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지출규모	171
[그림 VI-3] 2011 예산안과 2011 가을보고서의 재정건전화 목표 전망	174
[그림 VII-1] FY2021-22까지의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182
[그림 VII-2] FY2011-12 예산안의 재정수입 내역	188
[그림 VII-3] FY2011-12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재원 배분	193
[그림 VII-4] 실질지출증가율	196

제1부

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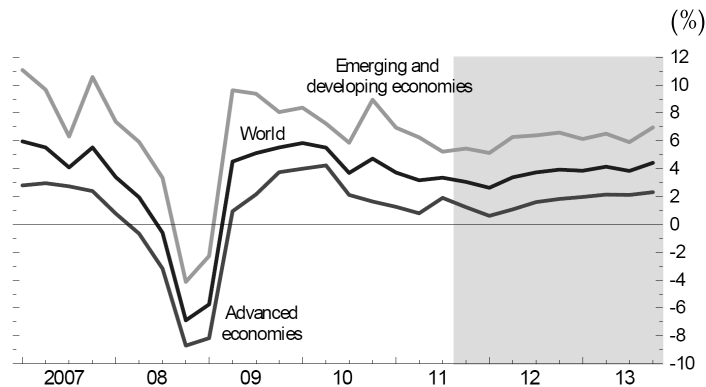
I. 세계 재정정책 흐름1)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2.1)에 따르면 유로지역의 국가부채 문제와 기타 지역의 취약함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어려울 것이며, 전반적으로 재정상태도 악화되어 경기 하방압력은 더욱 확대됨

- (선진국) 2012~2013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5%로 전망되며, 이는 2011년 9월 전망보다 0.75%p 약화된 수치
- (개도국) 2012~2013년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5.75%로 전망
 - 특히 아시아 개도국 및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률은 평균 6.48%로 전망
 - 다만 긴축 거시정책과 취약한 기초성장의 영향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그림 1-1] 세계 경제성장률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2.1)

1) 본 자료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1.9),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2.1), IMF Fiscal Monitor Update(2012.1), OECD Economic Outlook No.90(2011.11), European Economic Forecast(2011.10)를 발췌한 것임

□ OECD의 주요국 경제 전망(Economic Outlook, 2011.11)

- (미국) 2012년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2011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경기활동은 위축되고, 고용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2013년 말까지 약 8.5% 수준에서 높게 유지될 전망
- (유럽) 계속된 재정건전화정책과 노동, 주택, 신용대출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가벼운 경기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 생산은 감소하고 경영환경은 악화되며 실업률도 2013년 말 10% 정도의 높은 수준에 도달할 전망
- (일본)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회복속도는 점차 완만해질 전망
 - GDP 대비 2% 수준의 추가적 재정정책이 실시된다면 2012년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기타 선진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도 외부환경 악화로 인하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호주는 지진피해 이후 어려움을 겪었지만, 활발한 투자·수출과 광산분이 지속적으로 높은 환율과 재정건전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전망
- (중국) 단기적으로 기대했던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국내수요 회복을 통해 2012~2013년 평균 9%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전망

<표 1-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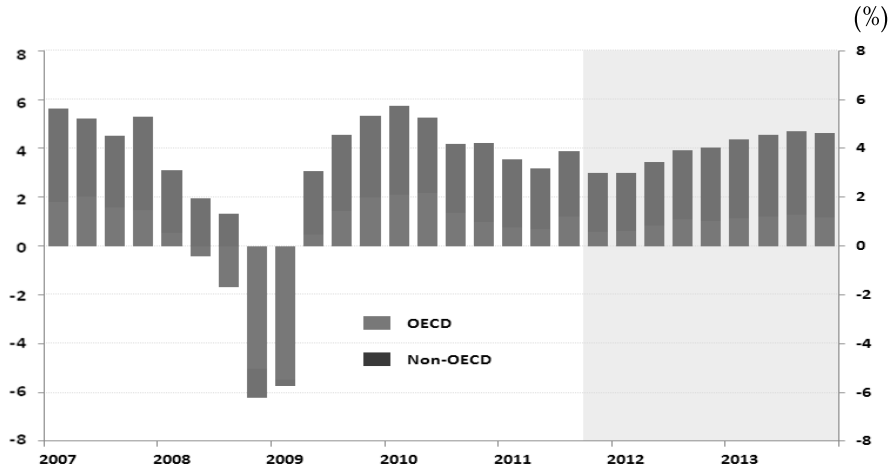
	실질GDP(IMF 전망)				실질GDP(OECD 전망)				실질GDP(EU 전망)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미국	3.0	1.8	1.8	2.2	3.0	1.7	2.0	2.5	3.0	1.6	1.5	1.3
유로지역	1.9	1.6	-0.5	0.8	1.8	1.6	0.2	1.4	1.9	1.5	0.5	1.3
일본	4.4	-0.9	1.7	1.6	4.1	-0.3	2.0	1.6	4.0	-0.4	1.8	1.0
캐나다	3.2	2.3	1.7	2.0	3.2	2.2	1.9	2.5	3.2	2.1	1.8	2.3
중국	10.4	9.2	8.2	8.8	10.4	9.3	8.5	9.5	10.3	9.2	8.6	8.2
인도	9.9	7.4	7.0	7.3	8.8	7.6	7.5	8.4	8.5	7.5	7.5	8.1
중남미	6.1	4.6	3.6	3.9	-	4.4	4.0	-	6.0	4.6	4.1	4.2
세계	5.2	3.8	3.3	3.9	5.0	3.8	3.4	4.3	5.0	3.7	3.5	3.6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2.1
 OECD, Economic Outlook No. 90, 2011.11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 Autumn 2011

- (인도) 국내시장의 신뢰회복과 완화된 통화정책 상황, 그리고 외부수요의 큰 증가로 2013년 8.25% 수준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기타 아시아) 2011년에 일부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향후 2년 내에 회복세에 들어갈 전망
 - 인도네시아는 OECD 국가들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중남미) 외부환경의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성장 둔화는 향후 2년 이내에 회복될 전망
 - 멕시코는 2012년 일시적인 성장둔화가 있겠지만 2013년에는 교역상대국들의 경기회복으로 2011년 성장수준을 회복
 - 브라질 또한 확고한 국내수요를 기반으로 연간 3.25~4%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

- 세계 실질성장 부문에서 비OECD 국가들의 실질GDP 성장률 기여도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그림 1-2] 세계 실질성장에 대한 비OECD 국가의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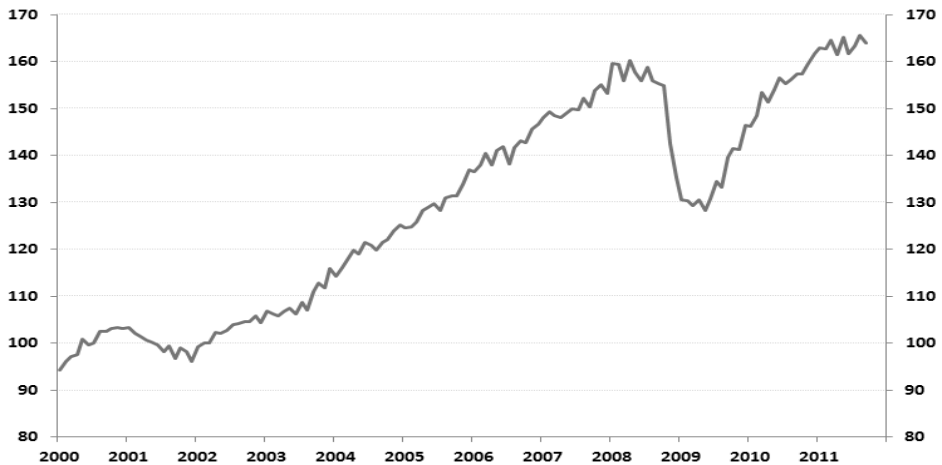


주: 명목GDP의 구매력평가에 기초한 이동 명목GDP의 가중계산법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90(2011.11)

- 세계 교역성장은 수출주문대장과 컨테이너 운송료 같은 무역지수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4사분기의 평균 3.5%에서 2013년 후반에 약 8%까지 증가하는 등 세계 GDP 성장과 비교할 때 정상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태국의 광범위한 홍수는 국제적 공급관계(global supply chain)에 혼란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일시적으로 성장을 침체시킬 전망
- 개도국의 원유 소비가 증가세에 있고 현재 원유 재고량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한 위험이 큰 우려로 남을 전망
 - 원유 공급은 리비아의 공급중단으로 감소되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OPEC 외부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

- 공급 중단이 완화되면 기본적으로 원유가격이 현재 수준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그림 1-3] 침체되고 있는 세계무역(CBI 세계무역지수)



주: Index2000=100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90 Presentation(2011.11)

- IMF 경제 전망(2012.1)에서는 상품가격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서서히 완화되고 있지만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비유가 품목에서는 공급의 증대와 수요의 하락이 가격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유가는 2011년 9월 전망치인 100달러보다 인하된 배럴당 99달러로 전망
 - 비유가 상품가격은 2012년에 1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이 2011년 2.75%를 고점으로 하여 2012년에 약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도국에서는 2011년 7.25%에서 2012년 약 6.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

2. 세계 재정 전망

- OECD Economic Outlook(2011.11)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는 재정 건전화 조치로 인한 효과를 넘어서는 개선이 예상되어, 2012~13년에 GDP 대비 0.75% 규모의 적자감축 전망
- OECD 회원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2011년 6.6%에서 2012년 5.9%로 감소할 전망이고 2013년에는 5.1%로 더욱 감소할 전망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는 2011년 100%를 초과하였고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IMF Fiscal Monitor Update(2012.01)에서는 G20 국가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2011년 5.1%에서 2012년과 2013년 각각 4.7%와 3.9%로 감소 전망

< 표 1-2 > 국가별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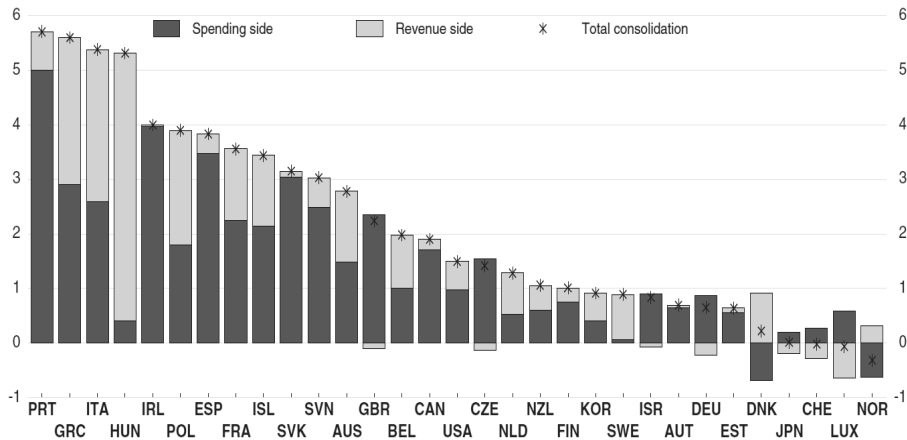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수지					
미국	-11.6	-10.7	-10.0	-9.3	-8.3
일본	-8.7	-7.8	-8.9	-8.9	-9.5
유로지역	-6.4	-6.3	-4.0	-2.9	-1.9
OECD 국가	-8.3	-7.7	-6.6	-5.9	-5.1
국가채무					
미국	85.0	94.2	97.6	103.6	108.5
일본	194.1	200.0	211.7	219.1	226.8
유로지역	87.6	92.9	95.6	97.9	98.2
OECD 국가	91.4	97.9	101.6	105.7	108.4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90, 2011.11

-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 재정건전화 계획들은 지출감축에 더 비중을 둔 상태에서 수입증대 조치들을 혼합하여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4] 재정건전화 계획의 구성(2011-2013년 총수지의 변화)

(단위: 잠재 GDP 대비 %)



주: 총재정건전화 규모는 기초재정수지(순이자지급을 제외한)의 전망 차이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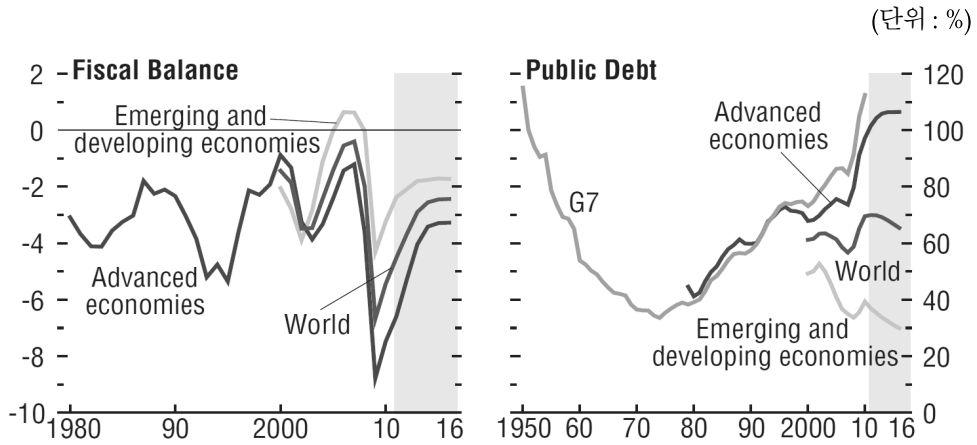
- OECD 국가들의 2013년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2011년 수준을 넘어설 것이고 특히 미국, 유로지역과 일본은 각각 11%p, 2.5%p, 15%p 증가할 전망
 - (미국) 향후 2년 동안 재정정책을 둘러싼 불확실한 상황 아래에서, 표준적인 가정에 따르면 기초재정수지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0.5%p와 1%p 증가할 전망
 - 현재 법안에 포함된 긴축정책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GDP의 약 2%와 3%를 예측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안한 경기 전망을 고려하면 과도한 전망임
 - (일본) 기초재정적자는 2013년에 GDP의 0.5%p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8월에 발표된 수정 중기재정계획은 2015년까지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 규모를 반(GDP 대비 규모)으로 줄이며,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이후 지속적인 공공부채비율의 감소를 목표로 함

- (유로지역) 발표된 정책들을 기초로, 유로 전반에 걸쳐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GDP의 1.5%와 1% 수준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할 전망
 -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IMF/EU의 프로그램하에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GDP의 2.75%와 1.25%에 가까운 감축이 예상됨
 - 프랑스는 2012년과 2013년에 GDP의 약 1.75% 수준의 재정긴축 추진 예정
 - 독일처럼 비교적 건전한 공공재정을 가진 일부 국가의 경우 GDP의 0.5% 이하 수준에서 재정건전화의 이루어짐
- (영국) 중기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라 2012년과 2013년에 GDP의 1.25% 수준의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5년 연동 후에는 경기조정 경상수지 균형에 도달할 전망
- (개도국) 개도국의 재정 상황이 OECD 대다수 국가에 비해 양호하며, 이는 높은 성장률이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경향 때문임
 - 중국은 특히 공공주택에 대한 예산외 지원(off-budget financing)의 증가 등 2013년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인도, 브라질의 재정건전화는 현재 진행 중이고 계속 최우선 순위를 유지할 필요

- IMF의 Fiscal Monitor Update(2012.1)에 따르면 2011년 많은 선진국들의 적자가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2년에 상당 수준의 조정을 계획하고 있음
 - 지속적인 조정은 중기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산출과 고용에서 적절한 성장을 지원하는 속도로 이뤄져야 함

[그림 1-5]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9

- (미국) 경기조정수지는 2012년에 GDP의 1.5% 정도 개선될 전망
 - 만일 의회가 2월 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소득세 경감과 장기 실업자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적자 감소 규모는 GDP 대비 2%p 이상으로 예상
- (일본) 지진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비용을 반영함에 따라, 2012년에 재정확대를 시행하는 유일한 선진국이 될 것으로 전망
 - 총복구비용은 GDP의 약 4% 수준으로 2011 ~ 2013년 예산에서 계획하고 있고, 우선은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
 - 채권들은 정부소유 주식의 판매, 향후 3년 동안의 한시적인 법인세율 인상과 개인 소득세율 인상(과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5년에 걸쳐 분산)으로 갚아나갈 계획
 - 중기재정계획의 일부로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10%로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채무비율을 감소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영국) 실질 및 잠재 GDP성장 추정치를 하향 수정하여, 총재정수지와 경기변동조정 수치 전망이 약화

- 경제의 추가적 침체를 방지하고, 보다 성장친화적인 경제개편을 위해 향후 3년간 약화된 경기조정 수지를 수용하고 자동안정화 장치의 자유로운 작동을 보장할 방침
- 경기조정수지 적자는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5년 안에 경기조정 경상수지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재정목표를 지키기 위해 2015~2017년 추가적 지출삭감을 발표할 예정
- (독일) 2012년 재정목표는 당초 예측보다는 강화될 것이며, 2011년 재정긴축 성과를 초과한 목표가 설정될 전망
- (기타 EU 국가) 많은 선진국들은 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음
- 스페인의 새로운 정부는 GDP의 1.1% 수준의 첫 번째 적자감축안(Package)을 발표했으며 2012년 예산안은 3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 예정
 - 지출삭감과 소득·자본·고부가가치 주택에 대한 일시적 세금증액을 포함하며 사회지출과 조세지출(모기지 공제)에서 제한적인 증액도 포함
- 이탈리아에서 12월에 승인된 재정긴축안은 2012~2014년 동안에 예상한 재정건전화 규모를 GDP의 1.25% 정도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2013년에 경기조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규모임
 - 7월과 9월 긴축안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GDP의 3.25%, 1.25% 수준
 - 12월 정책의 핵심은 주거주지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재도입과 연금개혁(조기퇴직 수급요건 강화, 연금급여 물가연동 축소,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가속화)을 포함
 - 7, 9, 12월의 긴축정책으로 연간 연금지출은 향후 20년 동안 GDP의 1.75%p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이탈리아는 연금 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이나, 위 전망은 선진국(평균 지출이 GDP의 1.25%p 정도 상승할 전망) 중에서도 탁월한 성과
- 프랑스는 지난 9월에 채택된 정책에 이어 2012~2016년 기간에 적용되는 GDP 대비 1% 수준의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발표했고(2011.11월), 이 중 GDP의 0.3%에 해당하는 정책들은 2012년에 발효될 예정

- 그리스는 정책 불이행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세입 및 지출 정책의 입법화 추진
- 포르투갈의 경우 2012년 예산에 지출삭감, 표준 세율에 따른 부가가치세원 확대, 조세지출 축소 등의 새로운 정책을 포함
- 아일랜드의 2012년 총재정수지 목표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성장률에 대하여 상당히 하향 조정
 - 경기조정 수지는 GDP의 0.7% 정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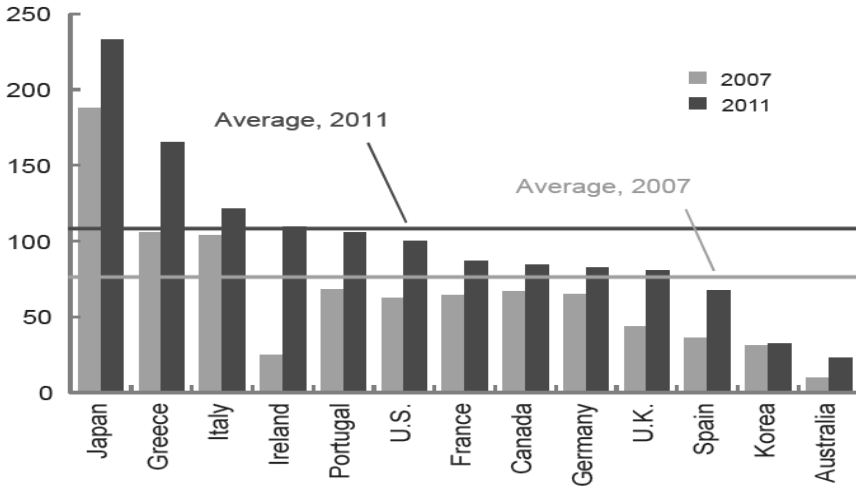
□ IMF Fiscal Monitor Update(2012.1)는 2012년에 재정건전화와 과도하게 급속도로 이루어지면 경기 하방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예측

- 많은 선진국에서 적자와 부채가 높는데, 2012년에 예상되는 재정건전화 속도는 취약한 경제 환경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
- 대부분 국가의 재정정책이 2011년 9월 Fiscal Monitor에서 예측했던 것에 비해 긴축적임
 - 이는 가용한 추가 용자(financing)가 부족한 일부 유로지역 경제들이 기존의 총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보다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했기 때문임
- 경기조정수지 적자의 추가적인 감소는 성장관점 뿐만 아니라 시장관점에서도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고 전망
 - 적자와 부채비율 감소는 차입비용의 감소로 이어져서, 빠른 성장률의 선진국들은 금융시장에서 현재 더 낮은 CDS spreads²⁾로 이득을 얻고 있음
 - 이는 저성장 환경에서 재정건전화와 지급여력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하강중의 추가 긴축정책은 성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통해 시장의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악화시킬 수 있음

2)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는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신용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가 일정한 수수료(premium)를 지급하는 대가로 신용위험을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에게 전가하게 됨. 국가부도 위험의 정도가 높을수록 CDS Spread (위험가중금리)도 높아짐

[그림 1-6] 일반정부 총부채 : 선진국 중 일부국가

(Percent of GDP)



자료: IMF Fiscal Monitor (2011.9)

- 여러 국가들은 단기 재정조정 속도도 주시해야 하지만 중기 재정건전화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함
 - 단기적으로 충분한 재정조정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불능력에 대한 우려가 적고 높은 적자를 용자로 해결할 수 있는 한 자동안정화장치가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하게 해야 함
 - 유로지역에서 일부 국가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 중에서, 매우 낮은 이자율 등의 요인들로 적정한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창출하는 국가들은 단기 재정건전화의 속도를 재고해야함
 - 높은 부채 수준은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각국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뢰할 만한 중기부채 감소계획의 실행이 우선시되어야 함
 - 미국의 중기부채 감소계획은 법정지출의 조정과 세입인상을 포함하는 조치들을 포함해야 할 것임

- 일본은 부채비율을 2015년부터 줄여가도록 하는 조정 계획이 필요함

-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건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자율은 매우 높은 상태임
 - 중기 재정건전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들에게 중장기에 걸친 재정목표를 지키도록 보장하는 신뢰할 만한 메커니즘이 있고,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와 유럽안정기구(ESM)를 통한 적절한 융자(financing)가 확보된다면 충분한 신뢰감 상승을 가져올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12월 초에 EU 국가들의 대다수가 동의한 신재정협약(the new European fiscal compact)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긴밀한 재정 통합을 향해 필요한 단계임
 - 신재정협약은 목표한 GDP 대비 적자비율에 편차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 감시체계가 작동하는 규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의 법률 시스템으로 규정되어야 함
 - 구조적 적자의 상한을 GDP의 0.5%로 설정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예산 계획을 보다 철저히 감사·평가하고 각국은 국채발행계획을 미리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포함
 - EU 회원국들은 협약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치들을 신속히 비준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유로지역의 재정 위험 공조를 위해 보다 긴밀한 재정통합과 지배구조(governance) 강화가 필요

- 개도국의 재정정책은 각국이 직면한 상이한 조건들과 위험들을 반영해야 함
 - 2011년 개도국의 적자는 GDP의 약 1% 정도 감소했고(in headline terms), 경기조정수지 적자는 약 0.75%가 감소함
 - 높은 원유 수익은 러시아의 경기조정 수지에 큰 증가를 가져왔고 멕시코에서도 다소 증가를 보였으며, 2011년 경기조정수지 적자의 감소는 모든 다른 주요 개도국에서 나타나고 있음

- 예상보다 느슨한 재정정책 기조로 2012년 일부 개도국의 경제 환경이 취약해지겠지만,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재정긴축을 강화하고 있음
 - 산출갭(output gap)이 가파르게 증가되고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일부 부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도국들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함
 -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서 높은 부채와 장기간 지속된 대규모 적자는 성장이 더 침체되는 경우 자동안정화장치의 작동외에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음
 - 상품 수입 및 외부 유입에 매우 의존적인 개도국은 자금원의 크고 장기적인 감소의 위험을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중국) 2012년의 정책은 대체로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하,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 투자 촉진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연기하고 재정지원을 유지
 - 2008년과 달리 재정지원은 투명성과 책임을 촉진하는 예산상(on-budget)의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 (브라질)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주요 경기대응 수단으로 통화정책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을 유지하는 정책 혼합을 채택
 - 2012년 GDP 대비 3.1%의 기초수지 흑자 목표 설정. 이는 GDP 대비 경기조정 수지에서 0.5%p 조정
 - 2011~2012년에 수요 진작을 위한 GDP의 약 0.2% 규모의 재정정책이 발표됨. 정부의 재정목표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재정조치들이 필요함
 - (인도) 2012년에 경기조정수지 적자는 GDP의 약 0.5% 정도 하락할 전망
 - 여전히 높은 적자와 부채로 인해,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완화 정책은 제한적임
 - 산출에서 큰 하락이 있는 경우, 재정확대는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야 하고 추가적인 보조금보다는 간접세, 자본 프로젝트 등 파급 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해야 함

<참고 1> 2011년 12월 8~9일 EU 정상회담 주요 합의 결과³⁾

- 새로운 재정 규약 합의: 회원국의 헌법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에서 규정됨
 - 일반 정부 예산은 균형재정이거나 흑자재정이어야 함
 - 원칙적으로, 연간 구조적 재정적자는 명목GDP 대비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자동적 감시 체계가 포함됨(위원회가 제안한 원칙에 따라 각국에서 결정됨)
 -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관할권을 인정
 - 과다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안에서 회원국들은 EU 이사회와 위원회에 초과 재정 적자의 효과적이고 항구적인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설명하는 경제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함
 - 프로그램의 이행과 그와 일치하는 연간 예산안은 이사회와 위원회에 의해서 감시받을 것임
 - 회원국들은 국가 채무 발행 계획을 사전 신고해야함
 - 과다적자 시정절차(EDP)는 유로지역 회원국들에게 강제됨(TFEU 조항 126)
 -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 EDP 자동 실행(다만, 회원국 중 과반 이상 반대시 무효)
 - 회원국들의 정부부채를 GDP의 60%로 제한하였던 부채 절감을 위한 1/20 협약은 강화됨
 - 2011년 11월 23일에 유럽위원회에서 제안된 새 협약을 위해 신속히 아래 사항을 조사함
 - 모니터링과 예산계획 초안의 평가와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과도한 적자의 수정
 - 유로지역의 재정 안정과 관련하여 심각한 어려움과 위협 속에 있는 회원국들의 경제 및 예산 감시의 강화
 - 위원회는 예산안 초안 중 재정 기조의 핵심 변수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이 예산안들을 의견으로 채택하지만, 안전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서 심각한 미이행을 발견할 경우에는 유럽의회에 예산안 초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Statement by the EURO area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EUROPEAN COUNCIL, Brussels, 9 December 2011

□ 안정화 장치 강화

- 지배구조 강화 등 장기적 개혁과제는 현재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즉각적인 조치와 병행되어야 함
- 11월 29일 합의한 EFSF 레버리지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로 결정하였으며, ECB의 참여를 환영함
-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협약의 진입 가속화에 동의
 - 협약은 회원국들의 90%가 동의하면 발효됨
 - 2012년 7월 ESM 발효를 목표로 함
- EFSF는 2013년 중순까지 유지됨에 따라 약 1년간 EFSF + ESM이 동시 운용될 전망
 - 현재 5,000억유로인 기금규모의 적합성은 2012년 3월에 재논의할 예정
 - IMF 추가 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를 10일 내(within 10 days) 결정하기로 합의, 추가 총당금은 약 2,000억유로까지 증액 전망
 - IMF의 재원 확충을 위한 추가 증액 방식은 기존 논의되어 오던 양자간 차입(bilateral loans) 방식으로 결정

<참고 2> 유럽 재정위기 관련 주요 일정

날짜	유럽연합	국가
12.09	<input type="checkbox"/> EU정상회담 ○ 재정통합 규약 합의 ○ ESM 조기출범 결정(2012년 7월) ○ IMF 재원확충 결정	
12.19	<input type="checkbox"/> EU 재무장관 비공식 긴급 회의 ○ EU 회원국들은 IMF 재원의 실질적 확대를 지지하며, 동 재원은 현재의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하여 IMF의 체계적 책임완수 능력을 제고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독일 중앙은행(Bundesbank)은 IMF 재원에 415억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발표 <input type="checkbox"/>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IMF 재원 확충에 각각 314억유로, 235억유로, 149억유로의 지원 발표

날짜	유럽연합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IMF 재원의 적정성 개선을 위한 폭넓은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유로존 회원국들이 양자대출을 통해 1,500억 유로의 추가 재원을 IMF 일반재원(General Resources Account)에 제공할 것임을 확인 □ ECB Mario Draghi 총재 유럽의회 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 채권시장 악화 전망 + 유로본드 발행에 재정통합 선행 필요 주장 ○ ECB 역할 확대에 부정적 입장 재차 강조 ○ 2012년 채권만기 집중될 전망에 따라 은행자금사정 악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은 내년 초 G20 framework 내에서 재원확대 참여분을 확정키로 하였음 □ 체코, 덴마크, 폴란드 및 스웨덴은 동 IMF 재원 확대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프랑스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독일 정상은 1월 내 재정통합 협상을 조기 마무리하기로 합의 ○ ESM 자금출자 조기 시행 검토: 2012년 7월 출범 예정인 ESM 자금 출자를 조기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 EFSF의 효과적인(effective) 운용을 위해 ECB에 자문 요청 ○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협약 + 민간채권단 채무 조정 협상 이행 촉구 ○ 금융거래세 도입 재차 강조: 메르켈 총리 지지 입장 표명

날짜	유럽연합	국가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메르켈 총리-IMF 총재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 전망 ○ 12월 9일 EU 정상회담에서는 구조적 재정적자가 GDP 대비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Golden rule)을 결정한 바 있음 ○ EU 국가들은 2012년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합의 ○ 한편, 헝가리 구제금융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 존재 ○ 헝가리 총리는 전제조건 없이 IMF-EU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협상 및 민간 채권단과의 채무조정에 대한 압박 전망 □ 독일-이탈리아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유로존 국가들의 협력에 관해 논의할 전망 ○ 마리오 몬티 총리는 EU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1월 5일 이후 재차 7%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 (10년 물 기준)

날짜	유럽연합	국가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B 통화정책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센서스상으로 기준금리 동결 의견이 우세한 상황 (1% 유지: 47명, 0.25% 인하: 5명, 블롬버그 기준) ○ 12월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드라기 총재는 성장 하방 리스크 + 인플레이션 약화 예상 ○ 한편, 12월 ECB는 은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지원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만기 장기자금공급조작 (LTROs) 정책 시행(12월 21일 부터 시행) - 담보로 사용되는 ABS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은행권의 담보 기준 완화 - 기준율(reserve ratio)은 기존 2%에서 1%로 완화 (1월 18일 부터 시행)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이탈리아-독일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재정협약 방안에 대한 조율 예상 ○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지지를 구할 것으로 전망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재무장관, 그리스 민간 채권단 요구 기각 ○ EFSF + ESM 가용재원 확대 논의 : 1월 30일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진전 전망 	

날짜	유럽연합	국가
1.30	<input type="checkbox"/> EU 정상회의 ○ ESM 출범 합의 ○ 유로존 신(新)재정협약 합의 ○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논의 지연 ○ 고용 및 성장 촉진 대책	
2.05		<input type="checkbox"/> 핀란드 대선 ○ 친유럽 성향의 재무장관 출신인 우파 경제전문가 사울리 니니스토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됨
2.13		<input type="checkbox"/>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유럽 국가 신용등급 조정 ○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의 경우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되 향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스페인은 'A1'에서 'A3'으로 신용등급이 두 단계 하락 ○ 이탈리아는 'A2'에서 'A3'으로 한단계 하락 ○ 포르투갈은 'Ba2'에서 'Ba3'으로 한 단계 하락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의 신용등급도 'A2' 또는 'A3'으로 한 단계씩 하락
2.14		<input type="checkbox"/> 그리스 ○ 긴축 재정안 의회 통과

Ⅱ.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 7개국 종합 -

- <각국 예산안 분석>에서는 주요 7개국 -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 의 2012 또는 2013년 예산안을 분석
 - 예산주기의 차이로 인해 캐나다, 호주는 2011년 봄에 발표한 FY2011-12 예산안을 분석
 - 경제·재정 전망의 경우 2011년 가을에 발표된 정부 보고서를 활용
 - 따라서 캐나다, 호주의 경우 2011년 1월 현재 시점에서 실제 정부의 입장이 FY2011-12 예산안 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
 - 영국은 사전예산안(Pre-budget)을 대체한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를 기준으로 분석
 - 예산안은 통상 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3월말에 발표되지만, 예산안 발표 3~4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정부정책을 담은 가을보고서를 발표
 - 반면 미국은 가장 빨리 FY2013 예산안을 발표하므로, 향후 경제 및 재정 전망 등 다른 국가들의 예산 편성에 기준이 되는 변수들을 살펴 볼 수 있음
 - 매년 2월 14일까지 대통령예산안(President's Budget)이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9월까지 예산편성 및 심의를 진행

<표 II-1> 각국 예산안 일정

국가	예산안	회계년도	예산안 발표 시기
미국	FY2013	2012.10 - 2013.9	2012.2.13
캐나다 ¹⁾	FY2011-12	2011.4 - 2012.3	2011.3.22
일본	FY2012/13	2012.4 - 2013.3	2011.12.24
프랑스	FY2012	2012.1 - 2012.12	2011.9.28
독일	FY2012	2012.1 - 2012.12	2011.7.06
영국	FY2012-13	2012.4 - 2013.3	2011.11.29 (가을보고서)
호주*	FY2011-12	2011.7 - 2012.6	2011.05.10

주: 1) 2011년에 발표한 FY2011-12 예산안을 분석하였음

- IMF의 Fiscal Monitor Update(2012.1)에 따르면 재정건전화 정책추진으로 주요 7개국에서 2011년 뚜렷한 재정적자 감소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2012년에도 상당 수준의 재정긴축을 계획하고 있음
- IMF는 2012년 지나치게 과도한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인한 경기하방 위험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고, 산출과 고용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
 - 캐나다와 독일을 제외한 5개국의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할 전망

<표 II-2> 2011년 재정 전망

국가	GDP 대비 재정수지 ¹⁾ (%)		GDP 대비 국가부채 ²⁾ (%)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미국	- 9.5	- 8.0	102.0	107.6
캐나다	- 4.9	- 4.4	85.5	86.7
일본	- 10.1	- 10.2	233.4	241.0
프랑스	- 5.7	- 4.8	87.0	90.7
독일	- 1.1	- 0.7	81.5	81.6
영국	- 8.6	- 7.8	80.8	86.6
호주 ³⁾	- 3.9	- 1.9	22.8	23.8

주: 1) General Government Balance

2)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3) 호주의 경우 IMF Fiscal Monitor(2011.9) 자료 이용

출처: IMF, Fiscal Monitor Update, 2012.1

- 주요국의 경제적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은 전반적으로 2011년에 이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와 경기부양·경제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편성
- (미국) 낮은 성장률과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재정건전화 정책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상대적으로 불안한 경기 전망을 볼 때 이미 발표된 긴축정책들의 효과 (2%('12), 3%('13))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FY2013 예산안(2012.2.13)에서는 국제기구에 비해 높은 성장률과 낮아진 실업률 전망 등 낙관론적인 경기 전망 발표
 - 재정적자 목표는 2014년부터 3%대, 2018년 2%대로 계획
 - (캐나다) 약화된 세계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여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향 조정하고, 재정적자 감축계획(The Deficit Reduction Action Plan)을 통해 FY2015-16 까지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 적자감축계획으로 1차 전략검토에 이은 전략운영검토를 FY2011-12에 수행하여 FY2015-16까지 총 110억캐나다달러 절감 목표 수립
- 반면 경기부양 2개년 계획으로 FY2011-12까지 총 603억캐나다달러 지출
- (일본) 2011년 4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지진과 원전사태의 여파로부터 빠른 회복을 나타내고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복구의 지원과 경기부흥을 위해 2012년 재정확대(GDP의 4% 규모)를 시행할 예정
 - 이를 위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인상, 정부소유 주식의 판매, 그리고 소비세율의 인상을 추진
 - 이러한 재원 확보의 노력에도, 채무비율을 감소시키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며, 경기회복 속도도 둔화되고 완만한 디플레이션이 계속될 전망
- (유로지역) 독일을 제외한 여러 유로지역 국가들은 적자목표 달성을 위해 주력하는 모습들을 보임
 - (프랑스) 세제혜택 감축 및 연금개혁을 포함한 2012-16 재정건전화 계획을 실행중
 - 프랑스는 금융위기사 실시한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07년 2.8% → '10년 7.1%)
 - 긴축재정을 통해 '13년에는 SGP 기준인 3%대로 줄이고, '16년에는 균형 재정 달성 목표
 - (독일) 기존의 예측보다 더욱 강화된 건전화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제한법에 명시된 GDP 대비 0.35% 미만의 신규차입규모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긴축정책을 유지
 - 단 성장지향적 측면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세금감면과 교육·R&D투자는 지속적 확대하고, 제도적으로는 top-down 예산제도를 도입
 - 2011년 12월 초에 협의된 새로운 유럽재정통합협정(New European Fiscal Compact)*은 앞으로의 재정통합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역할

* New European Fiscal Compact : 각국의 재정에 대한 지배구조의 강화를 위한 여러 항목들이 포함된 것으로, 각국 예산 계획에 대한 감시 및 국채발행계획을 미리 보고해야할 의무, 목표 GDP 대비 적자 비율의 편차가 발생시 자동적 감시체계 발동 등의 내용을 포함

- (영국) 지속적인 유로존의 위기와 세계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의 상승, 내수 침체로 인해 성장률의 하향 조정이 있었음
 - 예산의 중점을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경제성장 그리고 공정성에 둠
 -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임금인상 억제, 해외개발원조금 축소 등을 시행하였고, 경제 성장을 위해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정책을 도입
- (호주) 지진피해 이후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활발한 투자와 수출, 광산 붐으로 인해 높은 환율로 인한 효과는 충분히 상쇄. 실업률 하락과 소득 증가로 견고한 성장은 지속되겠지만 국제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경기부양을 위해 노동력 양성, 기술에 대한 투자,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
 -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출우선순위 재조정, 조세지출 축소 등을 실시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FY2012-13에 흑자전환을 목표

1. 미국 (FY 2013 : 2012.10 ~ 2013.9)

FY2013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을 통한 경기회생과 재정수지 건전화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에 장·단기 처방을 함께 제시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12년도 명목GDP 성장률은 2.7%, 2013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0.3%p 증가한 3.0% 전망 (calendar year 기준)
 - 2012년과 2013년의 명목GDP는 각각 4.5%, 4.7% 전망
 - 2013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3.0%)와 의회예산처(1.0%)의 전망 차이는 있지만, 2015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18년까지의 지속적인 실업률의 감소추이는 경기회복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재정 전망) 미국의 강력한 재정적자 축소 추진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계획

<표 II-3> 미국 경제 및 재정 전망

(단위 : %)

경제 전망 ¹⁾	2012	2013	2014	2015
실질GDP 성장률	2.7	3.0	3.6	4.1
명목GDP 성장률	4.5	4.7	5.3	6.0
CPI	2.2	1.9	2.0	2.0
실업률	8.9	8.6	8.1	7.3
재정 전망 ²⁾ (GDP 대비)				
재정수입	15.8	17.8	18.7	19.0
재정지출	24.3	23.3	22.6	22.3
재정적자	8.5	5.5	3.9	3.4

주: 1) 경제 전망: 1월 1일 ~ 12월 31일

2) 재정 전망: 10월 1일 ~ 9월 30일(회계연도)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3, OMB, '12.2월

□ 예산기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단기 부양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 해법 마련

- ① 세제(세율조정 및 부유세 신설)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 ②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구축 및 R&D지출확대
- ③ 일자리 창출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2013 세입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2조 9,020억달러로 전망
- (국방관련) 이라크 지역 작전종료 및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규모를 축소조정함에 따라 해외긴급작전(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에 소요되는 비용이 FY2012년도에 비해 23% 감소한 967억달러로 설정
- (교육관련) 35,000여개의 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해 300억달러 투자
- (R&D관련) 전분야에 걸친 R&D 장려 및 지원을 위해 1,408억달러 지원
 - 국방분야를 제외한 R&D 분야 예산은 FY2012보다 5% 증가

□ 주요 재정정책

- (재정 건전화) 재량지출 감축을 비롯하여 금융위기책임금 부과, 버핏세 등 소득세 인상 추진
 - FY2013 예산은 향후 10년동안 1조달러의 재량지출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예산절감법(Budget Control Act)을 기준으로 편성
 -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기 책임금(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을 부과
 - ‘버핏세’에 대한 내용 포함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세금인상 및 조정
- (성장잠재력 지원)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정부투자 확대
 -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사채용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
 - 무선광대역 통신망(wireless broadband network) 구축 등

- (일자리 창출) 재정건전화와 함께 당면한 2가지 경제최대 이슈로 일자리 창출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자리 만들기 지원과 관련한 다각적 노력 중
 - 시의적절한 조세지출이 현재의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성장잠재력 지원의 일환으로 투자되는 사회기반시설 예산(4,760억달러)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대

2. 캐나다 (FY 2011 : 2011.4 ~ 2012.3)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11년 11월 현재, 2012년 경제성장률은 2.1%,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p 하락한 7.2%로 전망
- (재정 전망) 재정적자 감축계획(The Deficit Reduction Action Plan)으로 FY2015-2016 까지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표 II-4> 캐나다 경제 전망(2011년 11월 현재)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2015
실질GDP 성장률	2.2	2.1	2.5	2.5	2.5	2.3	2.4
실업률	7.5	7.2	7.0	6.8	6.6	6.4	7.0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2.9	2.0	2.0	2.0	2.0	2.0	2.2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1.11), Table 2.1 일부 발췌

<표 II-5> 캐나다 재정 전망(2011년 11월 현재)

(단위 :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총세입	2,371	2,435	2,518	2,688	2,851	2,984	3,106
총지출	2,705	2,745	2,792	2,858	2,926	3,018	3,101
재정수지	-334	-310	-274	-170	-75	-34	-5
부채	5,503	5,852	6,127	6,297	6,372	6,406	6,400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1.11), Table 3.2 & Table 3.3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1-12 세입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2,435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4%)로 예측, 향후 5년간 연평균 5% 상승 전망

- (세출) FY2011-12 총지출은 2,430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4%)로 노인지원, 고용보험, 아동지원 등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을 삭감하지 않는 데에 집중
 - (노인지원) 취약계층 노인지원 및 경기부양에 관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인가구 소득보장지원금 확대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중 근로 및 최고 14주 시범사업」마감을 2012년 8월로 연장함에 따라 4억 2천캐나다달러 지원
 - (정부부문 기타이전지출) 2011년 9월 캐나다-퀘벡 주 통합판매세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22억캐나다달러 지출

□ 재정건전화

- 1차 전략검토(Strategic Review)가 완료되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4억 2,300만캐나다달러 절감
- 캐나다정부는 FY2011-12 1년간 적자감축계획인 전략운영검토(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를 수행하여 총 110억캐나다달러 절감 목표 수립
- 캐나다 재무부는 2011년 6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FY2011-12 재정건전화 계획 발표
 - 기존 재정건전화 정책 모니터링 및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조세시스템 개편

□ 경기부양책

- 경기부양 2개년 계획(Canada's Economic Action Plan : CEAP)은 FY2011-12 까지 경기부양지출로 총 603억캐나다달러 투입
 - 실업자 지원 82억캐나다달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148억캐나다달러 등
- 동 계획은 FY2010-11까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인프라 투자 관련 약 13억캐나다달러가 FY2011-12으로 연장됨

3. 일본 (FY2012 : 2012.4 ~ 2013.3)

□ 경제 및 재정 전망

- 2012년도 일본경제는 본격적으로 부흥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꾸준한 수요의 증대와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국내수요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하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엔화 강세와 유로존 위기 등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2012년 일본의 성장률은 2% 내외로 전망
 - 일본 중앙은행(BOJ) 2.0%, 국제통화기금(IMF) 1.7%, 세계은행(WB)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
- 2012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8.4%를 기록할 전망
- 2012년도 GDP 대비 국채비율은 219.1%로 전망되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

<표 II-6> 일본 경제 전망

구분	2010	2011	2012	전년 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0		2011		2012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479.2	470.1	479.6	1.1	3.1	△1.9	△0.1	2.0	2.2
실업률(%)	5.0	4.5	4.3						

자료: 내각부,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 2011.12.22

<표 11-7> 일본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적			추정	전망
재정수지 ¹⁾	△3.3	△9.3	△8.1	△8.8	△8.4
재정수지 ²⁾	△3.9	△10.5	△9.0	△9.7	△9.4
국채 비율	174.1	194.1	200.0	211.7	219.1
국채의존도 ³⁾	39.2	51.5	44.4	51.9	49.0

주: 1) OECD, *Economic outlook 90*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수치

2) OECD, *Economic outlook 90*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수치

3)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총재정지출

자료: 재무성, 「平成23年度予算政府案」, 2011.12.24

□ 예산기조: 2012년도 예산은 중기 재정 프레임에 준수하면서, 동일본 대지진 및 원자력 재해의 신속한 복구재건과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에 직면한 경제 사회의 재선에 중점을 두고 구성

- 2011년도 추경 예산 등과의 일체적·연속적인 편성
- 일본 경제 사회의 재생을 위한 노력 (「일본 재생 중점화 조치」)

□ 예산안 내용

- FY2012 세입규모는 지난해 대비 2조 777억엔(2.2%) 감소한 90조 3,339억엔 수준
- FY2012 세출은 '11년에 비해 2.2% 감소한 90조 3,339억엔 편성
 - 재정건전화를 강화하고 중기재정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세출은 2011년도에 비해 감소할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엔고의 종합적 대응책」 발표(2011.10.21)

- 일본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엔고 및 디플레이션 방지를 추구하기 위해 경기 하락 및 산업공동화의 위험을 초래하는 엔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발표
 - 대응책의 5가지 기본원칙
 - ① 외환시장의 단호한 조치 및 적절한 금융 정책, 재정규율의 유지, 국제 신임 확보 등을 통한 시장의 안정 유지
 - ② 엔고와 공동화에 대처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시책을 엄선
 - ③ 엔고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는 한편, 장점을 극대화
 - ④ 진행관리를 통한 성과 창출
 - ⑤ 새로운 성장을 위한 노력의 강화
- 엔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엔고에 따른 고통의 완화’ 및 ‘위험에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경제 구축’, ‘엔고 장점 적극 활용’ 등을 제시
- 본 대응책으로 ① 실질GDP 0.5% 상승 및 ② 약 3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일본재생중점화조치」발표(2011.12.24)
 - FY2012 예산안의 핵심내용으로 일본의 재생을 위해 4개 분야에 대한 중점화 조치를 추진
 - 「일본재생중점화조치」의 대상이 된 4개 분야
 - ① 새로운 국경 및 신성장 전략
 - ② 교육·고용 등의 인재 육성
 - ③ 지역 활성화
 - ④ 안심·안전 사회 실현
- 「재정건전화에 대한 소고」발표(2011.12.9)
 - 일본의 재정 현황: 국제적으로 재정건전화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본의 재정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
 - 재정건전화 방안

- 2010년대 중반까지 소비세율을 10%까지 높여 재정운영전략에 정해진 2015년도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도모
- 2015년도까지 매년 비슷한 속도로 기초재정수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추진
-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 및 강한 의지로 재정건전화를 실행에 옮길 필요성 역설

4. 프랑스 (FY 2011 : 2011.1 ~ 2011.12)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IMF의 2012년 세계경제 전망*을 두고 대부분 국가의 GDP 성장률이 지난해 보다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
 - * 2012년 1월 25일 세계경제 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프랑스의 2012년 기준 전망치는 0.3%로, 유럽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11년 대비 경기 상황 급하강 전망

<표 II-8> IMF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2011	2012년		
		기준 전망치	상반기	하반기
세계 ¹⁾	3.8	3.5	4.0	2.9
유로	1.6	0.2	0.6	-1.0
프랑스	1.6	0.3	0.5	-0.9
독일	2.9	0.8	1.0	-0.8
이탈리아	0.6	-0.6	-0.3	-1.4
스페인	0.7	-0.1	0.3	-0.5

주: 1) PPP 환율기준 GDP를 기준으로 한 국가별 가중평균임

- (재정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부양책* 실시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큰 폭 증가('07년 2.8% → '10년 7.1%, LF 2012)
 - * 경기부양책은 '09년 383억유로, '10년 96억유로 규모
- 채무비율은 경기침체, 높은 재정적자와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2011년 GDP 대비 86.2%에서 2012년 87.4%로 증가할 전망

<표 II-9> 프랑스 2011-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

(단위: 10억유로)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대비 세출	24.6	22.1	21.1	20	19.1
GDP 대비 세입	16.9	16.1	16.5	17	17.1
GDP 대비 재정수지	-7.7	-6.0	-4.6	-3.0	-2.0
재정수지	-150.9	-88.5	-73.1	-55.1	-45.1
GDP 대비 국가부채 ⁴⁾	82.9	86.2	87.4	86.8	85.3

자료: LPFP 2011-2014(2010.9)

□ 예산 기조

- 2012년 예산법안(LF 2012)은 긴축예산을 통해 지난해 GDP 대비 6.1%였던 재정적자를 2013년 안정 및 성장협약(SGP⁵⁾: Stability and Growth Pact) 기준인 3%로 줄이고 2016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LPFP 2011-2014(2010.9)에서 '12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4.6% 전망하였으나, 프랑스 정부는 4.5% 달성을 목표로 정함

*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GDP 대비 %)

('10) 7.1 → ('11) 6.1 → ('12) 4.5 → ('13) 3.0 → ('14) 2.0 → ('15) 1.0 → ('16) 0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2년 조세수입은 2,888억유로로 2011년 수정 전망 대비 4.8% 증가, 경기침체로 인해 주요 과세기준을 확대하고 2011년 1, 2차 재정적자 감축 계획으로 인한 세입의 174억 유로 증가

4)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5) EU는 현재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정부 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을 두고 있음(마스트리히트 조약)

- (세출) 재정적자 감소를 주요목표로 지출을 통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분야별 지출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거의 유사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2012년 예산에서는 제로증가율 원칙에 따라 연평균 0.6%의 지출 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시행되는 174억유로에 달하는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
- (2012년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안) 80억유로의 새로운 재원마련과 지출을 통제할 예정으로 2008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던 재정적자는 2012년 179억유로까지 감소를 목표
 - 의료 관련: 의료지출의 통제 강화 (의료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고가 진료환자의 보험료 반환)를 통해 2012년 의료보험지출 목표(ONDAM)를 2.5%로 전망

5. 독일 (FY 2012 : 2012.1 ~ 2012.12)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독일중앙은행 발표 기준 2012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0.6%로 2011년과 비교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며, 실업률은 7.0%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 전망) 2012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3,062억유로, 신규차입은 약 261억유로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될 전망이며, 재정수지는 GDP 대비 -0.9%로 당분간 2011년에 이어 적자재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표 II-10> 독일 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경제 전망 ¹⁾	2011	2012
실질GDP성장률	3.0	0.6
실업률	7.1	7.0
CPI	2.5	1.8

자료: 1) 경제 전망 : 독일중앙은행: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2011.12

<표 II-11> 독일 재정 전망

(단위: 10억유로, %)

재정 전망 ¹⁾	2011	2012
재정지출	305.8	306.2
재정수입 중 신규차입	48.4	26.1
재정수지 ²⁾	-1.1	-0.9

자료: 1) 재정 전망 : 독일 재무부, 2011.12

2) 재정수지 : IFO(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Economic Forecast, 2011.12

□ 예산기조

- 부채제한법에 명시된 GDP 대비 0.35% 미만의 신규부채 규모 달성(2016년)을 위해 2011년에 이어 긴축정책을 유지하며, 신규차입 감소를 위해 Top-down 예산 방식을 도입함
- 중·소 소득층 중심의 세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성장지향적 측면을 가미하며, 사회안정, 교육 그리고 연구 분야를 중점 지원함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2년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신규차입은 대폭 감소하여 총 재정수입은 3,062억유로로 전년 대비 0.1% 증가
- (세출) 총 재정지출은 3,062억유로로, 전년 대비 0.1% 증가한 규모이며,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41.3%)이 가장 큼

□ 주요정책

- (재정건전화) 대내적으로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의 제4차 회의 결과 2012~2016년 적용될 재정 평가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신(新)재정협약 초안이 타결됨
- (에너지정책)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로 연간 약 33억유로의 수입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원전폐쇄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할 예정
- (감세) 2013~2014년에 걸쳐 소득세 면세점을 8,354유로로 인상하고 부유세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
- (기타) 양육지원금 인상, 사회보장보험 분담금 인상, 고능력 취업 이민의 간소화에 관해 합의

6. 영국 (FY 2011-12 : 2011.4 ~ 2012.3)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지속되는 유로존의 위기와 세계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내수 침체로 인해 2011~2012년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전망
 - 2011년 경제성장률을 당초('11.3월) 1.7%에서 0.9%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2.5%에서 0.7%로 하향 조정
- (재정수지) FY2012-13 재정적자(공공부문 순차입)는 GDP 대비 7.6%로 전년 대비 0.8%p 개선되고, FY2016-17까지 GDP 대비 1.2%로 감소할 전망
 - FY2012-13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1.3월 전망치에 비해 약 1.4%p, FY2013-14와 FY2014-15의 경우 2%p 상향 전망
- (국가채무) 2013.3월 기준 공공부문 순부채(PSND) 규모는 GDP 대비 73.3%로 전년보다 5.8%p 증가
 - 공공부문 순부채는 2015.3월 기준 GDP 대비 78.0%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표 II-12> 영국 경제 전망 및 재정 전망

경제 전망	실적치	전망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실질GDP 성장률(%)	1.8	0.9	0.7	2.1	2.7	3.0	3.0
실업률(ILO)	7.9	8.1	8.7	8.6	8.0	7.2	6.2
재정 전망 (GDP %)	실적	전망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공공부문 순차입	9.3	8.4	7.6	6.0	4.5	2.9	1.2
공공부문 순부채	60.5	67.5	73.3	76.6	78.0	77.7	75.8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 Report(2011.11), Table 1.1, C.1, C.6에서 발췌

□ 예산기조: FY2012-13의 예산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를 비롯하여 경제성장과 공정성을 기조로 함

- (재정건전화)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등 금융·유로 위기와 물가상승충격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도모
- (경제성장) 인프라 투자와 기업활동 지원, 교육 투자 확대와 주택경기 부양 등 성장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공정성)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금융부문 규제 강화, 청년 취업 장려 등의 정책 시행

□ 세입 및 지출

- (세입) FY2012-13 경상세입은 GDP 대비 37.7%로 전년보다 0.1%p 감소
 - 경제성장률 하락, 소비침체 및 소득감소, 유가하락 전망 등으로 2011.3 예산안 시점에 비해 253억파운드 감소한 5,944억파운드로 전망
- (지출) FY2012-13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은 전년보다 약 0.9%p 하락한 45.3%로 전망
 - '11.3월 예산안 전망보다 약 57억파운드 감소한 7,145억파운드 규모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FY2011-12~FY2016-17까지 총 5,29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건전화 추진
 - (세액공제) FY2012-13부터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계획 취소
 - (공공부문 임금) 공공부문 임금동결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 2년 동안 공공부문 임금인상을 평균 1%로 억제
 - (해외원조) 해외개발원조 규모를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에 따라 축소
 - (연금) 2026.4~2028.4까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여 FY2026-27~FY2035-36까지 현재가치로 600억파운드 절감

- (경제성장) FY2012-13~FY2014-15까지 약 47억파운드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도입
 - 국가 인프라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 2011) 중 50억파운드의 자본 투자 추진
 -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 10억파운드 증액
 - 2012.4월부터 투자지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제공하는 기업투자촉진 세제감면제도(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개시
 - 국가대출보증제도(National Loan Guarantee Scheme)를 도입하여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제공 등

7. 호주 (FY 2010-11 : 2010.4 ~ 2011.3)

□ 경제 및 재정 전망

- 실업률 하락과 소득증가 등으로 호주경제는 견고하게 성장
-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5월 발표된 예산안(Budget)보다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 FY2011-12의 예산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폭이 감소하여 FY2012-13에 흑자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재정여건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

<표 II-13> 호주 경제 전망

(단위 : %)

	전망(Forecasts)					예측(Projections)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경제성장률 ¹⁾	2.25	4.00	3.25	3.75	3.25	3.00	3.00	3.00	3.00
실업률	5.00	4.75	5.50	4.50	5.50	5.00	5.00	5.00	5.00

주: 1)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자료: Budget 2011-12, 2011. 5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11

<표 II-14> 호주 재정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2010-11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11-12		2012-13		2013-14		2014-15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재정수지	-51.5	-20.3	-32.4	4.0	4.7	3.2	4.2	8.5	6.4
GDP 대비 비율	-3.7	-1.4	-2.2	0.3	0.3	0.2	0.3	0.5	0.4
예산수지 ¹⁾	-47.7	-22.6	-37.1	3.5	1.5	3.7	1.9	5.8	3.1
GDP 대비 비율	-3.4	-1.5	-2.5	0.2	0.1	0.2	0.1	0.3	0.2
순채무	846	106.6	132.6	1046	133.3	105.3	135.7	100.9	134.1
GDP 대비 비율	6.1	7.2	8.9	6.7	8.5	6.4	8.2	5.8	7.7

주: 1) Underlying cash balance :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자료: 1) Budget 2011-12, 2011.5
 2) Final Budget Outcome 2010-11, 2011.9
 3)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11

□ 예산기조: “전 호주 국민을 위한 건실한 경제(A Stronger Economy for All Australians)”

라는 기조 아래 6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 호주 미래를 위한 노동력 양성
- 인프라 구축(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장벽 제거)
- 건강 증진(주정부의 병원 증설 지원)
-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 지원 확대(1년간 저소득층 세액공제)
- 지역사회 및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예산안 내용 (세입·세출 내역)

- FY2011-12 예산안의 총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수준인 3,500억 호주달러로 전망
- FY2011-12 반기재정보고서 재정수입은 예산안의 재정수입에 비해 59억호주 달러 감소를 전망

- FY2011-12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준인 3,658억호 주달러로 전망
- FY2011-12 반기재정보고서 재정지출은 예산안의 재정지출에 비해 159억호 주달러 증가를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호주정부는 미래를 위한 노동력 양성계획을 발표
 - 기술에 대한 투자와 노동참여율의 제고가 포함
- 재정건전화
 - FY2011-12 예산안 발표에서 실질지출 증가율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재정규율 강화
 - FY2011-12 반기경제재정보고서에서는 실질지출 증가율을 3.7%로 전망
 - 정부는 흑자재정 달성을 위하여 향후 추계기간동안 약 220억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

제2부

각국 예산안 분석

I. 미 국

□ FY2013: 2012.10 ~ 2013.9

□ 출처: Fiscal Year 201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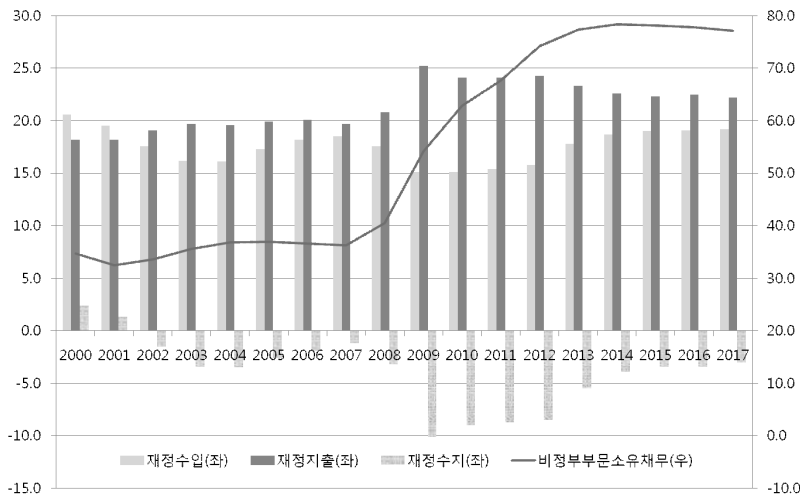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CBO, 2012.2

□ 환율(2011년 평균): 1USD = 1,108.11원

□ 경제규모: 2010년 정상 GDP 14조 4,471억달러(우리나라의 10.2배)

[그림 1-1] FY2013 예산안 연방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1) 재정수입 · 재정지출 · 재정수지,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회계연도 기준

2)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채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는 연방 정부 공공채무(public debt)는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 빌려오는 채무(누적개념)라는 의미에서 연방부채 판단시 유의미한 개념

3) 2000~2011년: 실적치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12년 실질GDP 성장률은 2.7%, 명목GDP 성장률은 4.5%로 전망 - 2013년 실질GDP 성장률은 3.0%, 명목GDP 성장률은 4.7%로 전망
- (재정 전망) 미국의 강력한 재정적자 감축 추진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계획

◇ 예산기조:

- ① 세제조정 및 신설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 ②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구축 지출확대
- ③ 일자리 창출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2013 재정수입은 전년(2조 4,690억달러) 대비 17.5% 증가한 2조 9,020억달러(GDP의 17.8%) 전망
- 총 3조 8,030억달러 규모의 FY2013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확고한 경제발전과 일자리 만들기를 최상의 목표로 두고 있음
- FY2013 예산안은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추진을 동시에 보여주는 투 트랙(two-track approach) 접근법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재정정책

- 재정적자 감소 추진
 - 이라크 지역의 작전종료 및 군사철수 계획발표와 함께 국방비 감축
 - FY2013 국방 총예산은 FY2012(6,883억달러)보다 2.23% 감소한 6,729억달러 편성
- 국가 성장잠재력 증진
 - 도로, 교통 등의 사회간접자본확충 및 광대역 네트워크망 연결사업
- 일자리 창출의 재정적 지원
 - 국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및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0.7	정부계약 관행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성과 발표	재정동향 3호
2010.7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 발표	재정동향 4호
2011.4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의 FY2012 예산방침 발표	재정동향 6호
2011.4	오바마 대통령, 향후 12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2011.5	미 연방정부 부채; 법정한도인 14조 2,940억달러에 도달	재정동향 7호
2011.6	백악관 직속 일자리/경쟁력위원회; 향후 2년내 100만개 일자리 만들기 방안 제시	
2011.8	부채 상한선 조정 합의안 상/하원 통과; 사상초유의 채무 불이행 사태 모면	
2011.8	S&P, 미국 연방정부 신용등급 'AA+'로 하향조정	
2011.9	FRB 'Operation Twist' 실시 결정	재정동향 8호
2011.10	FY2011 결산발표	
2011.11	수퍼위원회 재정적자 감축협상 합의 실패	
2011.11	Fitch,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2012.2	오바마 대통령 FY2013 예산안 발표	재정동향 9호 수록예정
2012.2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 계획안 발표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⁶⁾

- 경기낙관론 증가, 경기평가 상향 조정 등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될 전망
 - (경제성장률) 2012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 이는 2011년 9월 전망보다 0.1%p 상향된 수치임
 - 2013년 3.0%, 2014년 3.6%로 전망
 - (실업률) 실업률은 2012년 8.9%에서 2013년 8.6%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며, 2017년 이후 5%대 실업률 유지 예측
 - (금리) 경제지표 호조, 그리스 구제금융안 결정 기대감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며 국채금리 상승

<표 1-1> FY2013 예산안 경제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질GDP ¹⁾	1.8	2.7	3.0	3.6	4.1	4.0	3.9	3.2	2.7	2.5	2.5	2.5
명목GDP ¹⁾	4.0	4.5	4.7	5.3	6.0	5.9	5.7	5.0	4.5	4.4	4.3	4.3
CPI(CPI-U) ¹⁾	3.2	2.2	1.9	2.0	2.0	2.1	2.1	2.1	2.1	2.1	2.1	2.1
실업률 ²⁾	9.0	8.9	8.6	8.1	7.3	6.5	5.8	5.5	5.4	5.4	5.4	5.4
금리												
국채 91일물 ³⁾	0.1	0.1	0.2	1.4	2.7	3.8	4.1	4.1	4.1	4.1	4.1	4.1
국채 10년물	2.8	2.8	3.5	3.9	4.4	4.7	5.0	5.1	5.1	5.1	5.3	5.3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2) 연평균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자료: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3, OMB, 2012.2

6) 미국의 경제 전망 부분에서 표시된 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나타내고, 그 이외의 부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국의 회계연도를 의미

나. 재정

- (재정수입) FY2013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약 2조 9,020억달러(GDP의 17.8%) 전망
 - 최상위 소득계층 개인소득세율 인상, 자본소득세율 인상,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소득층에 최저세율로 30% 적용, 연소득 25만달러 이상(부부합산)와 20만달러 이상 개인에 대한 감세혜택 폐지 등으로 세수 증대 계획
 - FY2012 재정수입은 FY2011보다 7.2% 증가한 2조 4,690억달러(GDP의 15.8%)로 전망
 - FY2014 ~ FY2022 기간 동안 재정수입은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재정지출) FY2013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3조 8,030억달러 전망
 - 일자리 증대를 위한 단기 조치(3,500억달러),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정부투자 확대(4,760억달러), 학생·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청정에너지 개발, 제조업 R&D 지원 등의 재정지출 계획
 - FY2014~FY2022 기간 동안 재정지출은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 FY2013 재정적자는 9,010억달러로 GDP 대비 5.5%로 추정
 - FY2012 재정적자(1조 3,300억달러)의 GDP 대비는 8.5%로 추정하여 지난해 9월 적자규모 전망(9,560억달러)에 비해 상향 조정함
 - 3,500억달러 규모의 단기 일자리 부양책, 4,760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단기부양책과 버핏세 도입 등 세수확대 및 정부지출 삭감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계획

- (국가채무) FY2012의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11조 5,780억달러로 GDP 대비 74.2%, FY2013에는 12조 6,370억달러로 GDP의 77.4%에 이를 전망
- FY2014~FY2022 기간 동안 국가채무는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표 1-2> FY2013 예산안 재정 전망

(단위 : 십억달러, GDP 대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총량											
수입	2,469	2,902	3,215	3,450	3,680	3,919	4,153	4,379	4,604	4,857	5,115
지출	3,796	3,803	3,883	4,060	4,329	4,532	4,728	5,004	5,262	5,537	5,820
재정적자	1,327	901	668	610	649	612	575	626	658	681	704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11,578	12,637	13,445	14,198	14,980	15,713	16,404	17,137	17,897	18,678	19,486
예산총량											
수입	15.8	17.8	18.7	19.0	19.1	19.2	19.4	19.5	19.7	19.9	20.1
지출	24.3	23.3	22.6	22.3	22.5	22.2	22.0	22.3	22.5	22.7	22.8
재정적자	8.5	5.5	3.9	3.4	3.4	3.0	2.7	2.8	2.8	2.8	2.8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74.2	77.4	78.4	78.1	77.8	77.1	76.5	76.4	76.5	76.5	76.5

자료 :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3, OMB, 2012.2

<참고> CBO 경제 및 재정 전망('12.2월)

- (경제 전망) 2012년 실질GDP 성장률은 2.0%, 실업률은 8.9%로 예상
 - 2012년 세금감면*이 일몰되면 2013년 경제성장은 세금 인상과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둔화될 것이며, 2013년 실질GDP 성장률은 1.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고소득자에 대한 2001년, 2003년 세금감면 조치만료
 - 경기활성화로 2013년 실질GDP는 증가하지만, 2018년까지 잠재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경제 전망

(단위 : %)

	2011	2012	2013	2014-2017 평균	2018-2022 평균
실질GDP ¹⁾	1.6	2.0	1.1	4.1	2.5
CPI-U ¹⁾	3.3 ⁴⁾	1.4	1.5	1.9	2.3
실업률 ²⁾	8.7 ⁴⁾	8.9	9.2	5.6 ⁵⁾	5.3 ⁶⁾

주: 1) 전년 4/4분기 대비 변화율 2) 4/4분기 3) 연평균
 4) 2011년 확정치 5) 2017년 전망치 6) 2022년 전망치

자료: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CBO, 2012.2

- (재정 전망) FY2012 재정적자는 세수 확대와 정부 지출 감소의 영향으로 FY2011보다 약 2,000만달러 감소한 1조 1,000억달러(GDP 대비 7.0%*)로 전망
 - * FY2012 재정적자는 FY2011 GDP 대비 8.7%보다 1.7%p 하락
 - 다만 4년 연속(FY2009~FY2012) 재정적자 1조원대를 기록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2001년, 2003년 세금감면 조치가 만료되면 재정적자 문제가 대부분 해결 될 것으로 전망
 - 세금감면 조치 후 FY2013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FY2017에는 GDP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예측

재정 전망¹⁾

(단위 : GDP 대비 %)

	2011 ²⁾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재정수입	15.4	16.3	18.8	20.0	20.2	20.5	20.5	20.5	20.6	20.7	20.9	21.0
재정지출	24.1	23.2	22.5	22.1	21.8	21.8	21.6	21.5	21.8	21.9	22.0	22.4
재정수지	-8.7	-7.0	-3.7	-2.1	-1.5	-1.6	-1.1	-0.9	-1.2	-1.2	-1.2	-1.4

주: 1) 현재의 정책 유지를 가정
 2) 확정치

자료: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CBO, 2012.2

2. 예산기조

※ 예산기조의 세부내용은 주요 재정정책 참조

□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단기 부양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 해법 제시

- ① 세제(세율조정 및 부유세 신설)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 ②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구축 및 R&D지출확대
- ③ 일자리 창출

□ 총 3조 8,030억달러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확고한 경제발전과 일자리 만들기를 최상의 목표로 두고 있음

- 부유세 증설 (Buffet Rule) 및 세율조정을 통해 세입확대
- 또한 세제 간소화 등을 통해 비효율적 비용을 줄여 재정적자 감소
- 중소기업에 세제특혜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추진

□ 향후 미국 경제발전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재정건전화(세제조정 포함)를 가장 기본 단계로 설정

- FY2013 예산은 향후 10년 동안 1조달러의 재량지출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예산절감법(Budget Control Act)*을 기준으로 편성

* 예산절감법 : 정부부채 한도확대와 연계하여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법안으로서, 재량 지출(discretionary spending)에 한도(cap)를 설정함으로써 최대 지출규모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FY2011 GDP의 8.7%를 차지하였던 재량지출을 FY2013에 7.7%로 감소계획
- FY2022까지 재량지출을 GDP 대비 5.0%로 축소

□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잠재력 증진

- 고속도로, 다리, 철도, 활주로 등의 기반시설 구축
- 도로, 교통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한 경제발전 기여

□ 일자리 관련 - 수동적 지원 형태인 실업지원(unemployment system)에서 적극적 지원 형태인 재취업지원(re-employment system) 방향으로의 전환 구상

- 2008년도 금융위기 발발 후, 2009년도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에 상응하는 미국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통해 일자리 마련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이후 다시 한 번 이번 예산을 통해 실업률 감소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Alan Krueger)은 이번 예산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2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평가
 - 또한 이번 예산을 통해 2012년 대선기간 전까지 실업률을 8%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3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2조 9,020억달러 (GDP의 17.8%) 전망

- 세입 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및 기타급여세(payroll tax)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될 전망
- 관세, 재산 및 증여세는 전년도 대비 각각 6.4%, 18% 증가 전망

□ FY2013 주요 세제개편안⁷⁾

- 대형금융기관(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에 부과금 부여
 - 대형은행들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기 책임금 (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10년(FY2013-2022)동안 610억달러 세입재원 창출
- 석유(oil), 휘발유(gasoline), 탄광회사(coal company)등에 제공했던 12가지 세금우대조치(tax breaks)를 제거
 -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410억달러의 세입재원 창출
- 조세체계 단순화 및 비효율적 세금우대조치 삭제
- 부유세 증설(Buffer Rule)의 내용이 담긴 소득 상위층에 대한 세금인상 및 조정
 - 연간 개인소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경우 최저세율로 30% 적용 계획
 - 연소득 25만달러 초과 부부와 20만달러 초과 개인의 기부행위시 세금공제 비율의 최고한도를 28%로 조정
 - 2013년 최상위소득계층의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36%에서 39.6%로 인상
 - FY2013 기준, 230억달러의 적자감소 예상
 - 부유세율 조정(upper-income tax provisions)을 통해 향후 10년간 최상위층 으로부터 징수할 세금을 합할 경우 1조 4,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7) 미 행정부는 FY2013 예산안 발표 9일후(22일) 법인세 인하(기본세율 35%→28%)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 동 내용은 본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계간 KIPF(통권 9호)』에 수록 예정

<표 1-3> 분야별 세입 전망

(단위: 10억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인소득세	1,091	1,165	1,359	1,476	1,617	1,763	1,912	2,052	2,184	2,319	2,459	2,605
법인세	181	237	348	430	445	455	473	480	485	494	507	520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사회보장 급여세	566	572	677	742	781	833	881	936	987	1,034	1,093	1,150
의료보험(Medicare) 급여세	188	203	214	226	240	257	273	290	306	321	339	357
실업보험	56	57	58	59	75	79	75	73	65	64	66	67
기타 퇴직연금	8	9	10	11	12	12	13	13	14	14	16	17
소비세	72	79	88	99	104	106	112	120	136	142	150	159
유산세 및 증여세	7	11	13	23	25	27	29	32	34	37	39	42
관세	30	31	33	36	38	39	41	44	46	48	50	52
연방준비제도 이익금	83	81	80	61	46	36	36	38	40	42	43	45
기타 수입 (연방준비제도 이익금 제외)	20	24	21	52	68	71	74	77	83	89	95	101
총 재정수입	2,303	2,469	2,902	3,215	3,450	3,680	3,919	4,153	4,379	4,604	4,857	5,115
GDP 대비 %	15.2	15.6	17.6	18.5	18.7	18.8	19.0	19.1	19.3	19.5	19.7	19.9

자료: Fiscal Year 201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2.2 (Table S-5)

나. 세출

- FY2013 대통령예산안은 안정적 생활을 위한 중산층 지원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한 노력, 전문분야 최고의 교육 및 숙련 노동자를 위한 세출계획 등이 담겨 있음

- 최첨단 교통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 개발
- 범산업적 R&D 연구장려
- 효율과 효과성이 조화를 이룬 건강보험 지출을 통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구축
- 미래를 위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FY2011에 이어 향후 10년간 10만명의 과학, 수학교사 양성
- 노동자를 위한 고도의 교육과 숙련된 기술배양 지원
- Clean Energy를 위한 기술연구 지원
- 지역경제를 이끌 혁신 프로젝트 등의 사업지원 (2억 2,000만달러 예정)

□ 결론적으로, ① 튼튼하고 안정적인 경제(strong economy)를 지향하면서 ② 불필요한 재정소요 부문을 과감히 줄여(cutting waste, reducing the deficit) ③ 미래를 위한 개발에 투자(investing in our future)를 원칙으로 함

<표 1-4> 항목별 지출 전망

(단위: 10억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재량지출 프로그램: 안보	838	868	851	768	749	757	771	786	803	820	837	856
비안보	462	450	410	393	385	386	390	397	405	415	420	430
재량지출 프로그램 합계:	1,300	1,319	1,261	1,160	1,135	1,143	1,162	1,183	1,208	1,236	1,258	1,287
법정지출 프로그램 :												
사회보장	725	773	820	867	918	970	1,026	1,085	1,149	1,216	1,287	1,361
메디케어	480	478	523	551	569	619	633	654	716	767	822	908
메디케이드	275	255	283	338	370	399	423	450	479	510	542	578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	-38	35	12	8	5	2	1	*	*	*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631	711	654	644	665	705	712	716	750	775	821	826
법정지출 프로그램 합계	2,073	2,252	2,293	2,409	2,527	2,695	2,796	2,905	3,094	3,269	3,472	3,673
순이자 (Net Interest)	230	225	248	309	390	483	565	631	692	748	798	850
재해복구 및 구호비용	*	*	2	5	7	8	9	9	10	10	10	10
총재정지출	3,603	3,796	3,803	3,883	4,060	4,329	4,532	4,728	5,004	5,262	5,537	5,820

자료: Fiscal Year 201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2.2 (Table S-5)

<표 1-5>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내역

(단위: 10억달러)

	2012 승인규모	2013 예산요청	후속년도(Outyears)			
			2014	2015	2016	2017
기관별 재량지출 재원:						
안보 기관:						
Defense(DOD)	530.5	525.4	533.6	545.9	555.9	567.3
Energy -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11	11.5	10.8	11	11.2	11.4
Homeland Security(DHS)	39.7	39.5	39.8	40.5	41.2	41.9
Veterans Affairs	58.5	61	63.1	64.2	65.5	66.9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43.7	48	48.9	49.8	50.8	51.9
Intelligence Community Management Account	0.5	0.5	0.6	0.6	0.6	0.6
안보기관 예비비	1.8	-0.4	0.3	1
안보 기관 합계	684	686	698.4	711.6	725.3	741

<표 1-5>의 계속

(단위 : 10억달러)

	2012 승인규모	2013 예산요청	후속년도(Outyears)			
			2014	2015	2016	2017
비안보 기관 :						
Agriculture	22	21.4	22.6	23.1	23.5	24
Commerce	7.7	8	8.3	8.6	8.9	9.4
Census Bureau	0.9	1	1.2	1.3	1.5	1.8
Education	67.4	69.8	70.3	71.2	72.2	73.3
Energy(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제외)	15.3	15.6	16.3	16.6	16.9	17.3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78.3	71.7	79.8	81.3	82.9	84.7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38.2	35.3	39.2	40	40.8	41.7
Interior	11.3	11.4	11.8	12.1	12.3	12.6
Justice	26.8	17.9	27.7	28.3	28.8	29.5
Labor	13.2	12	12	11.3	11.5	11.8
State and Other Int'l Programs	0.1	0.1	0.1	0.1	0.1	0.1
Transportation	13.7	13.8	14.1	14.4	14.7	15
Treasury	13.2	12.6	13.7	14.1	14.5	14.9
Corps of Engineers	5	4.7	4.8	4.9	5	5.1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8.5	8.3	8.5	8.7	8.9	9.1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1.0	-0.8	-1.2	-1.3	-1.3	-1.4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17.8	17.7	18	18.4	18.7	19.1
National Science Foundation	7	7.4	7.5	7.6	7.8	8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0.9	0.9	1	1	1	1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8.8	9	9.2	9.4	9.5	9.7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1	1.1	1.1	1.1	1.1	1.1
Other Agencies	18.2	18.9	19.3	19.6	20	20.4
비안보기관 예비비	-21.1	-20.3	-20.5	-20.8
비안보 재량지출 예산권한 합계	373.6	356.8	363.3	370.1	377.3	385.5

자료 : Fiscal Year 201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2.2 (Table S-12)

4. 주요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재정적자 감소 추진을 통해 향후 10년 안에 GDP 대비 재정적자를 2.8%로 축소
 - 재정적자가 FY2012까지 증가하다가 FY2013부터 9,000억달러대로 진입 전망
 - FY2018부터는 재정적자 규모 감축 목표를 GDP의 3% 이하로 설정
 - 불필요한 행정비용 삭제 또는 조정 및 중복되는 예산 프로그램 합병
 - 국가 행정비용의 20%를 감축하는 내용의 2011년 11월 대통령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을 포함하여 FY2013에는 약 80억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전망

<표 1-6> FY2013 예산안 전망 및 재정적자 감축추이

(단위 : 10억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총량(10억달러)												
수입	2,303	2,469	2,902	3,215	3,450	3,680	3,919	4,153	4,379	4,604	4,857	5,115
지출	3,603	3,796	3,803	3,883	4,060	4,329	4,532	4,728	5,004	5,262	5,537	5,820
재정적자	1,300	1,327	901	668	610	649	612	575	626	658	681	704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0,128	11,578	12,637	13,445	14,198	14,980	15,713	16,404	17,137	17,897	18,678	19,486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5.4	15.8	17.8	18.7	19.0	19.1	19.2	19.4	19.5	19.7	19.9	20.1
지출	24.1	24.3	23.3	22.6	22.3	22.5	22.2	22.0	22.3	22.5	22.7	22.8
재정적자	8.70	8.50	5.50	3.90	3.40	3.40	3.00	2.70	2.80	2.80	2.80	2.80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67.7	74.2	77.4	78.4	78.1	77.8	77.1	76.5	76.4	76.5	76.5	76.5

자료 : Fiscal Year 201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2.2 (Table S-1)

□ 국방예산 감축

- FY2013 국방 총예산은 전년도(6,883억달러)보다 154억달러 감소한 6,729억 달러 전망
- 최우선 순위의 프로그램(예-무인위성정찰기, upgrade된 전술차량을 개발) 선택과 집중있는 투자를 위해 불필요한 합동타격전투기(Joint Strike Fighter) 또는 공수작전 항공기(C-27 airlift aircraft) 등의 규모 감소 계획
 - 새 국방시스템 전략예산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4,870억달러의 재정절감 효과 기대
- 이라크 지역 작전종료 및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규모를 축소조정
 - 이에 따라, 해외긴급작전(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에 소요되는 비용이 FY2012(1,265억달러)에 비해 23% 감소한 967억달러로서 300억달러 절약

□ 세제간소화

- 오바마 대통령의 'Fair Shot'과 'Fair Share'를 기초로 한, 부유세 신설과 세율 구간 조정을 통해 재정재원을 확충하고, 중산층 및 그 이하 소득층으로의 자원배분이 적절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 자세한 주요세제 개편안 내용은 예산안 내용의 세입부분 참조

나. 성장잠재력 지원

□ 일자리 창출

-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주거 및 상업지역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발전 지원
 - 전년도 대비 3.2% 늘어난 448억달러 투자
- 500억달러를 투자하여 노면교통 재정리
 - 이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

- 2013년중에 완료될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Program)의 연장을 위한 11억달러 예산배정

□ 세계 흐름에 맞는 각 분야 전문가 양성

- 오바마 대통령의 “Investing Our Future” 기조하에 숙련된 노동자 양성을 위한 주정부와 전문대학(communitary college)의 파트너쉽 장려 및 지원
 - 총 125억달러 소요예정

□ 교육투자 확대

- 최소 35,000개의 학교 시설 현대화 300억달러 투자
-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교사 채용 및 유지비용으로 300억달러 지원
- 1인당 최대 10,000달러 최장 4년까지 ‘고등교육비용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를 지원
 - 위 제도로, 90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미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비지원금인 Pell Grant 장학금제도 유지
 - 최대수혜 금액 5,635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지속

□ 인프라 구축

- 6년 동안 총 4,760억달러에 달하는 노면교통재정리 예산을 도시간 수송레일 로 확대적용
 - 도로교통 안전 및 경제발전의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예산배정함
 - 도로, 철도, 활주로 등에 즉각 투자될 500억달러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
 - 본 예산의 주된 재원은 이라크 지역 군사주둔의 종료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운영비 감축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 충당
- 55가지 종류의 중복되는 고속도로 프로그램(highway programs)을 5가지로 통폐합

- 관련 재원은 전국사회간접재투자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Bank)에서
기금조성
-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해당사업의 관리 및 운영상황을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함
- 무선 광대역 통신망 구축
 - 본 사업을 위해 100억달러의 기금조성 계획

□ 연구개발(R&D) 및 제조업 지원

- 총 1,408억달러를 들여 전분야에 걸친 R&D 장려
 - 국방분야를 제외한 R&D 분야는 전년도보다 5% 증가한 예산배정
 - 특별히 다음 세 주요연구기관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배정
 - 1)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연방정부의 과학진흥 기구)
 - 2) Department of Energy's Office of Science(가칭 : 에너지과학부)
 - 3) 미국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Laboratories)
 -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질병관리 개선 연구비용으로
FY2012와 동일한 307억달러 예산배정
- 제조업계의 장기적 경쟁력을 위한 연구지원으로 총 22억달러 배정
 - FY2012 대비 19% 증가한 금액으로서, 정부와 사기업(private companies) 간
의 파트너십을 통한 smart system 연구/개발 촉진

Ⅱ. 캐나다

□ FY2011-12 : 2011.4~2012.3

□ 출처

- Budget 2011(2011.3.22)
- Budget 2011(updated version⁸), 2011.6.6)
- Supplementary Document to the Department's 2011-12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RPP)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2011.6)
- Supplementary Estimates (A) 2011-12 (2011.6)
- Supporting Vulnerable Seniors and Strengthening Canada's Economy Act (2011.6.26)
http://law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1_15/page-1.html
- Supplementary Estimates (B) 2011-12 (2011.11)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1.11)

※ 캐나다의 예산안은 통상 매년 2~3월에 발표되며 FY2012-13 예산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따라서 『주요국 예산안 2012』 중 'Ⅱ. 캐나다'의 내용은 2011년 예산(Budget 2011) 및 2011년 11월에 발표된 경제 및 재정 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 환율: 1캐나다달러 = 1120.26원(2011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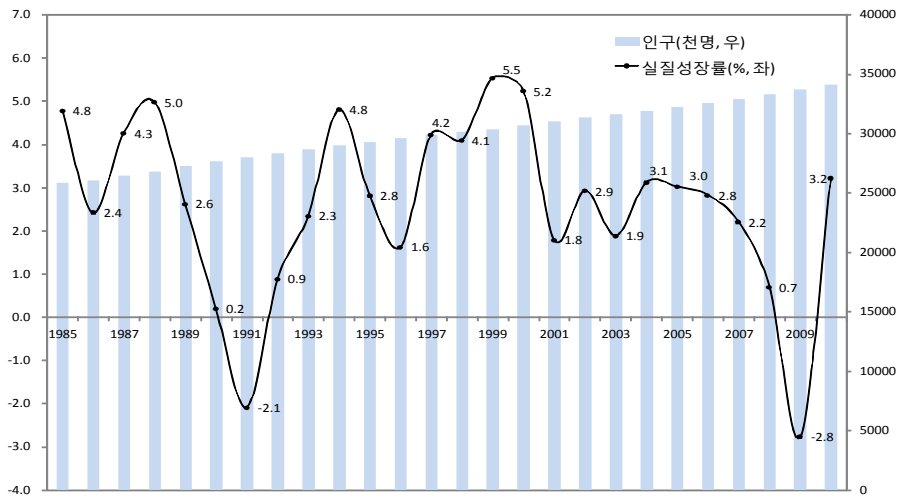
□ 경제규모: 2010년 경상GDP 1조 3,326억원 달러(우리나라 0.94배 수준)

8) Budget 2011은 2011년 3월 22일 하원에 상정되었으나, 2011년 3월 26일 국회 해산 전에 채택되지 않아 2011년 5월 31일 국회 개회 후 2011년 6월 6일에 일부 수정된 Budget 2011이 상정됨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2010년 기준 60.7%(우리나라는 102.0%)

□ 인구:3,411만명(2010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11년 11월 현재, 2012년 실질GDP 성장률은 2.1%,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p 하락한 7.2%로 예측
- (재정 전망) 재정적자 감축계획(The Deficit Reduction Action Plan)으로 FY2015-16까지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 예산기조

- Budget 2012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2012년 2~3월 발표 예정)
- Budget 2011은 고용창출 지원,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 혁신과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 재정우위 입지 유지에 대한 계획 수립

◇ 예산안 내용(2011. 11)

- (세입) FY2011-12 총세입은 전년 대비 124억캐나다달러 증가한 2,435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4.4%)까지 연평균 5.0%씩 상승 전망
- (프로그램지출) FY2011-12 총지출은 2,430캐나다달러(GDP 대비 14.4%)로 예측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된 1차 전략검토가 완료되어 4년간 재정지출 총 14억 2,300만캐나다달러 절감
- (경기부양정책) 경기부양 2개년 계획(Canada's Economic Action Plan)은 FY2011-12까지 경기부양지출로 총 603억캐나다달러 투입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1.1	경기부양책(Canada's Economic Action Plan) 제7차 보고서	재정동향 5호
2011.3	Budget 2011 발표	재정동향 6호
2011.6	일부 수정된 Budget 2011 재발표	재정동향 7호
2011.6	추경(A) 발표	
2011.10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법안 발표 (Keeping Canada's Economy and Jobs Growing Act)	
2011. 10	결산(Annual Financial Report)	
2011.11	추경(B) 발표	
2011.11	경제 및 재정 전망 조정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1. 경제 및 재정 전망⁹⁾

가. 경제 전망¹⁰⁾

- (실질GDP 성장률) 2012년 실질GDP 성장률은 약화된 세계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여 Budget 2011 전망치보다 0.7%p 낮은 2.1% 전망
 - 2012년 실질GDP 성장률은 2.1%로 전년 대비 0.1%p 하락하였으나, 2013년에는 전년 대비 0.4%p 상승할 전망

- (명목GDP 증가율) 2012년 명목GDP 증가율은 4.1%로 전년 대비 1.2%p, Budget 2011 전망치 대비 0.9%p 하락 전망
 - 명목GDP 증가율은 2013년에 전년 대비 0.4%p 상승이 전망되나 2016년까지 201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실업률) 약화된 세계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2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p 하락한 7.2%로 Budget 2011과 동일하게 전망
 - 실업률은 향후 5년간 매년 0.2%p 하락하여 2014년부터는 6%대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1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0.9%p 하락한 2.0%로, 2016년까지 매년 2.0%를 유지할 전망
 - Budget 2011은 201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2.1%로 전망하였으나, 설문조사 결과는 0.1% 감소한 2.0%를 전망

9) 본 장의 내용은 캐나다 재무부의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1. 11)를 위주로 작성
10) 재무부는 2011년 11월, 민간부문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조사(2011. 9) 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경제 전망을 발표

<표 11-1> 캐나다 경제 전망(2011년 11월 현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1 ~ 2015
실질GDP 성장률							
Budget 2011	2.9	2.8	2.7	2.5	2.5	-	2.7
September 2011 survey	2.2	2.1	2.5	2.5	2.5	2.3	2.4
GDP 인플레이션							
Budget 2011	2.8	2.1	2.1	2.0	2.0	-	2.2
September 2011 survey	3.0	2.0	2.0	2.0	2.0	2.0	2.2
명목GDP 성장률							
Budget 2011	5.8	5.0	4.9	4.5	4.5	-	4.9
September 2011 survey	5.3	4.1	4.5	4.5	4.5	4.3	4.6
실업률							
Budget 2011	7.5	7.2	7.0	6.7	6.5	-	7.0
September 2011 survey	7.5	7.2	7.0	6.8	6.6	6.4	7.0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Budget 2011	2.4	2.1	2.0	2.0	2.0	-	2.1
September 2011 survey	2.9	2.0	2.0	2.0	2.0	2.0	2.2
U.S. 실질GDP 성장률							
Budget 2011	3.1	3.1	3.2	3.3	3.2	-	3.2
September 2011 survey	1.6	2.0	2.4	2.9	2.9	2.8	2.4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1. 11), Table 2.1 일부 발췌

나. 재정 전망

- (재정 전망)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계획(The Deficit Reduction Action Plan)으로 FY2015-16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 (재정수지) 재정적자 감축계획에서 설정한 절감 목표액 감안 시 FY2015-16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 예상

- 절감 목표액 미반영시 FY2015-16 재정적자 규모는 34억캐나다달러 전망
- 2011년 11월 현재 재정적자 감축계획은 국가재정위원회 내 특별설치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결과는 Budget 2012에서 발표할 예정
- (부채) FY2012-13 GDP 대비 부채비율은 35.0%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FY2016-17 30.3%까지 하락 전망
- FY2016-17 GDP 대비 부채비율 30.3%는 FY2008-09 29.0%에 근사한 수치로, 2016년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을 안정화 또는 감축한다는 2010년 6월 G-20 정상회의 합의 목표 달성 기대

<표 II-2> 캐나다 재정 전망(2011년 11월 현재)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총세입		2,371	2,435	2,518	2,688	2,851	2,984	3,106
프로그램 지출		2,396	2,430	2,474	2,525	2,576	2,653	2,724
이자지출		309	315	319	333	350	365	377
총지출		2,705	2,745	2,792	2,858	2,926	3,018	3,101
재정수지		-334	-310	-274	-170	-75	-34	-5
재정적자 감축 계획	절감 목표			10	20	40	40	40
	목표반영 재정수지	-334	-310	-264	-150	-35	6	45
부채		5,503	5,852	6,127	6,297	6,372	6,406	6,400
GDP 대비 비중								
총세입		14.6	14.4	14.4	14.6	14.7	14.8	14.7
프로그램 지출		14.7	14.4	14.1	13.7	13.3	13.1	12.9
이자지출		1.9	1.9	1.8	1.8	1.8	1.8	1.8
재정수지 (절감목표미반영)		-2.1	-1.8	-1.6	-0.9	-0.4	-0.2	0.0
부채		33.9	34.6	35.0	34.2	32.9	31.7	30.3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1. 11), Table 3.2 & Table 3.3

2. 예산기조(Budget 2011)

※ 2012년 예산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대신 Budget 2011의 기조로 대체함

□ Budget 2011은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 일자리창출,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 교육 및 훈련 투자 등을 예산 기조로 함

□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세계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

- 중소기업에 임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 광물탐사세액공제(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1년간 연장
- 관세 간소화
- 제조·가공업에 자본비용공제 2년간 연장
- 일부 공직 정년퇴직 기간 연장

□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 장기적인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삶과 혜택을 보장

- 가족 돌봄 세액공제(Family Caregiver Tax Credit) 도입
- 가족 부양자의 의료비세액공제(Medical Expense Tax Credit) 한도 폐지
- 어린이 예능활동비 세액공제(Children's Arts Tax Credit) 도입
- 가스세 펀드(Gas Tax Fund)에 연간 20억 캐나다달러 투자
- 임금노동자 프로그램(Wage Earner Protection Program) 제도 개선
- 자원봉사 소방관 세액공제(Volunteer Firefighters Tax Credit) 도입

- (혁신, 교육 및 훈련 투자)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교육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
 - 지방, 외진 지역 거주 신입 의사·간호사에게 대출금 면제
 - 교육비세액공제(Tuition Tax Credit)에 자격증 수수료 항목 추가 등
 -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등

3. 예산안 내용¹¹⁾

가. 세입

- FY2011-12 세입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2,435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4%)로 예측, 향후 5년간 연평균 5% 상승 전망
- (개인소득세) FY2011-12 개인소득세는 실질소득수입과 결합된 소득세제시스템의 누진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연평균 5.6% 증가 전망
- (법인세) FY2011-12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305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8%)로 예측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4.5% 증가 전망
- (비거주자 소득세) 기업이윤 성장을 반영하여 연평균 6.4% 증가 전망
- (재화 및 용역세) FY2011-12 재화 및 용역세 수입은 최근 과세소득 상승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1% 증가 전망
- (관세) FY2011-12 관세 수입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38억캐나다달러 전망
 - 2010년 10월 1일 공표된 제조업 투입자원 및 기계설비에 대한 세금 경감 혜택과 특정 수입 선박에 대해 적용되는 새로운 관세납부의무 체계를 반영
- (고용보험) FY2011-12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수입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87억캐나다달러로, 현 경기에 기초하면 고용보험계정은 2015년까지 누적균형을 회복

11) 본 장의 내용은 캐나다 재무부의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1.11)를 위주로 작성

- 보험대상소득(insurable earnings)의 증가, 2012년 고용보험료율 인상률 100 캐나다달러당 5센트로 수정된 제한조치¹²⁾를 반영

<표 II-3> 세입 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조세수입(Tax Revenues)							
개인소득세	1,135	1,195	1,244	1,331	1,421	1,492	1,563
법인세	300	305	304	330	350	361	379
기타소득세	51	54	57	63	67	71	74
총소득세(A)	1,486	1,555	1,605	1,724	1,837	1,924	2,017
소비세(Excise taxes/duties)							
재화 및 용역세	284	290	303	320	339	355	373
관세	35	38	40	42	45	48	51
기타소비세	110	108	107	106	105	105	107
총소비세(B)	429	436	449	468	489	509	531
총조세수입 (C=A+B)	1,915	1,991	2,055	2,192	2,326	2,433	2,547
고용보험(D)	175	187	202	220	237	245	240
기타세입(E)	281	257	262	276	288	305	319
총세입(F=C+D+E)	2,371	2,435	2,518	2,688	2,851	2,984	3,106
GDP 대비 비중							
개인소득세	7.0	7.1	7.1	7.2	7.3	7.4	7.4
법인세	1.8	1.8	1.7	1.8	1.8	1.8	1.8
재화 및 용역세	1.7	1.7	1.7	1.7	1.7	1.8	1.8
총조세수입	11.8	11.8	11.7	11.9	12	12	12.1
고용보험	1.1	1.1	1.2	1.2	1.2	1.2	1.1
기타세입	1.7	1.5	1.5	1.5	1.5	1.5	1.5
총세입	14.6	14.4	14.4	14.6	14.7	14.8	14.7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1. 11), Table 3.4

12) 2010년 9월 30일 연방재무부 장관은 2011년 직장인 보험료 인상폭을 보험대상소득 100캐나다 달러당 5센트로 제한하고 그 다음해부터 100달러당 10센트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2011년 11월 8일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를 통해 2012년 보험료 인상폭을 보험 대상소득 100캐나다달러당 5센트로 수정한다고 밝힘.

나. 세출

- FY2011-12 총지출은 2,430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4%)로 노인지원, 고용보험, 아동지원 등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을 삭감하지 않는 데에 집중

- (노인지원) FY2011-12 노인지원 지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378억캐나다달러 전망
 - 노인인구 증가 및 전체 인구 분포의 변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지출 증가
 - 소득보장지원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은 취약계층 노인 지원 및 캐나다 경기부양에 관한 법안¹³⁾에 의해 노인 독신가구 연간 600캐나다달러, 부부가구 840캐나다달러까지 상향 조정

- (고용보험) FY2012-13 고용보험 지출은 평균 주당 실업급여 확대로 전년 대비 2.2% 증가 전망
 - FY2011-12 고용보험지출은 181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9.0% 감소 전망
 - Budget 2011은 ‘실업급여 신청기간 중 근로 및 최고 14주 시범사업¹⁴⁾’ 마감 을 2011년 여름에서 2012년 8월로 1년 연장하고 4억 2천캐나다달러 지원

- (아동지원) FY2011-12 아동지원 지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129억 캐나다달러 로 이후 FY2016-17까지 연평균 약 1.7% 증가 전망
 - 아동지원 지출에는 아동 세제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 아동복지급여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등을 포함
 - 아동 인구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아동 세제혜택 확대를 반영

13) Supporting Vulnerable Seniors and Strengthening Canada's Economy Act, 2011.6.26. 통과

14) Best 14 Weeks and Working While on Claim EI pilot projects

- (정부부문 기타이전지출) FY2011-12 기타이전지출은 캐나다-퀘벡주 통합판매세 (Sales Tax Harmonization) 협약 내용을 반영, 22억캐나다달러 지출 전망
- 2011년 9월 30일 퀘벡주는 향후 20년간 통합판매세¹⁵⁾ 도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연방정부로부터 22억캐나다달러의 지원금을 받는 내용의 협약 체결

<표 II-4> 프로그램지출 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노인지원(Elderly benefits)	356	378	402	424	448	472	499
고용보험	199	181	185	186	188	191	194
아동지원(Children's benefits)	127	129	132	135	138	138	140
소계(A)	681	688	719	746	773	801	832
주요 정부부문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건강 및 사회복지프로그램 (Federal transfers in support of health and social programs)	372	387	407	427	447	470	494
재정협정(Fiscal Arrangements)	164	169	178	187	194	202	211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지출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31	-32	-33	-35	-37	-39	-41
캐나다 도시 및 커뮤니티 (Canada's cities and communities)	18	23	20	20	20	20	20
기타	7	22	3	2	2	2	1
소계(B)	530	569	575	602	627	655	685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368	357	349	327	306	305	305
감가상각(Capital amortization)	44	46	49	51	53	55	56
기타발생비용 (Other operating expenses)	225	230	242	250	254	261	262
운영비 동결 (Operating expenses subject to freeze)	547	540	540	550	562	575	584
소계(C)	1,185	1,174	1,180	1,178	1,176	1,196	1,207
총프로그램지출(A+B+C)	2,396	2,430	2,474	2,525	2,576	2,653	2,724

15) 통합판매세는 연방소비세(GST, the federal Goods and Services Tax)와 지방소비세(PST, regional Provincial Sales Tax), 판매세를 통합한 세금임.

<표 11-4>의 계속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GDP 대비 비중							
개인에 대한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4.2	4.1	4.1	4.1	4	4	3.9
정부부문간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3	3.4	3.3	3.3	3.2	3.2	3.2
직접프로그램비용 (Direct program expenses)	7.3	6.9	6.7	6.4	6.1	5.9	5.7
총프로그램지출	14.7	14.4	14.1	13.7	13.3	13.1	12.9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1. 11), Table 3.5

<참고 1> 캐나다 추경예산 내용

- FY2011-12 추경예산은 2011년 6월 9일 추경(A), 2011년 11월 3일 추경(B)가 상정되어 총 2회 편성
- FY2011-12 추경 (A)는 본예산의 2.2% 수준인 202억 7,300만캐나다달러 추가편성
 - 2011-14년 서민형주택투자(Investment in Affordable Housing, IAH)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서민형주택지원에 25억 3,100만캐나다달러 편성
 - 2011-14년 IAH 사업은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가 공동투자하여 서민형 주택 공급, 개보수, 임대료 등을 지원

추경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분		일반예산 (Budgetary)	투융자예산 ¹⁶⁾ (Non-Budgetary)
추경 (A)	재량지출(Voted Appropriations)	2,026.4	0.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0.9	0.0
	합계	2,027.3	0.0
추경 (B)	재량지출(Voted Appropriations)	4,321.8	0.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2,257.7	(1,442.5)
	합계	6.6	(1.4)

- FY2011-12 추경 (B)는 재량지출을 본예산 재량지출의 4.7% 수준인 약 43억캐나다달러 추가편성
 - 지방 인프라구축사업 완료를 위해 인프라건설부양펀드에 7억 860만캐나다달러 투자
 - 청정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등에 4억 7,350만캐나다달러 투자

16) 투융자예산은 투자(investment)·융자(loan)·선급금(advances)에 해당하는 지출로서 정부 금융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예산임. 박기백 외, 주요국의 예산편성 방식, 한국조세연구원 2004.12. 참고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1) 전략검토(Strategic Review)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차 전략검토가 완료되어 4년간 재정지출 총 14억 2,300만 캐나다달러 절감

- (전략검토) 2007년 예산부터 전략검토를 실시해 부처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
 - 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통해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각 부처별 본연의 역할 집중, 국민 정책수요 반영 등의 기회 제공

<표 II-5> 2007~2010년 1차 전략검토 효과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합계
2007 전략검토	199	311	386	395	403	403	403	2,500
2008 전략검토		349	449	586	598	604	604	3,190
2009 전략검토			152	248	287	288	288	1,262
2010 전략검토				194	271	569	525	1,560
소계	199	660	987	1,423	1,559	1,864	1,820	8,511
국방부					525	1,000	1,000	2,526
합계	199	660	987	1,423	2,084	2,864	2,820	11,037

출처: 캐나다재무부, Budget 2011(2011. 6), Table A1.2

- 국방부 지출 억제 조치로 인한 절감분 포함, 1차 전략검토 결과로 FY2014-15까지 총 110억캐나다달러 절감
 - Budget 2010에서는 전략검토의 일환으로 FY2012-2013부터 FY2014-2015까지 국방부 지출 약 25억캐나다달러 절감 계획

- FY2011-12 전략검토 절감분은 19억 4,500만캐나다달러로 이중 인적자원개발부 절감분이 8억 5백만캐나다달러로 전체 절감분의 41%를 차지
 - 인적자원개발부 절감분은 FY2012-13과 FY2013-14년에도 총 절감분의 40% 이상을 차지
 - 기반시설부 절감분은 FY2011-12부터 FY2013-14까지 12억 4,400만캐나다달러

<표 II-6> 전략검토 절감분 전망

(단위 : 백만캐나다달러)

	2011-12	2012-13	2013-14
절감분			
대서양경제활동촉진청 (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5.9	10.8	15.2
퀘벡경제개발청 (Canada Economic Development for Quebec Regions)	6.8	10.0	13.4
해양수산부(Fisheries and Oceans Canada)	9.1	18.9	56.8
인적자원개발부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80.5	140.7	273.9
산업부(Industry Canada)	6.1	8.2	15.8
기반시설부(Infrastructure Canada)	51.8	13.1	59.5
대서양해운공사(Marine Atlantic Inc.)		1.2	5.4
추밀원(Privy Council Office)	2.0	3.1	6.6
공공기소위원회(Public Prosecution Service of Canada)		0.5	3.6
공공사업부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24.1	49.5	98.6
재무위원회사무국(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4.9	9.7	11.5
서부경제활성화청 (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Canada)	3.2	5.7	8.9
절감분 소계	194.5	271.4	569.2
Budget 2010 규정 절감분			
국방부(National Defence)		525.0	1,000.0
절감분 합계	194.5	796.4	1,569.2

출처 : 캐나다재무부, Budget 2011(2011.6), Table A1.1

- 캐나다 정부는 1차 전략검토에 이어 적자감축계획인 전략운영검토(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를 FY2011-12 1년간 수행
 - 2차 전략검토 대신 수행되는 전략운영검토는 정부 및 정부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내각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
 - 의회가 책정한 직접프로그램비용 중 약 800억캐나다달러를 검토하고 FY2012-13 부터 FY2015-16까지 총 110억캐나다달러 절감 목표 수립
 - 전략운영검토 결과는 Budget 2012에서 발표 예정

<표 II-7> Budget 2011 절감조치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합계
2010 전략검토		194	271	569	525	534	2,094
탈세관리강화를 통한 공평세제정책 ¹⁷⁾		240	730	1,095	1,040	990	4,095
Budget 2011에 기록된 총 절감분	0	434	1,001	1,664	1,565	1,524	6,189
전략운영검토 절감 목표			1,000	2,000	4,000	4,000	11,000
총 절감분	0	434	2,001	3,664	5,565	5,524	17,189

출처: 캐나다재무부, Budget 2011(2011.6), Table 5.1

2) 지속가능한 개발전략(Feder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SDS)

- 캐나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법(Federal Sustainable Development Act)에 따라 2010년 10월 FSDS 수립

17) Tax fairness-closing tax loopholes

- FSDS는 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처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구성

□ 캐나다 재무부는 FSDS 참여의 일환으로 2011년 6월 9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FY2011-12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

- (목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장려하고 미래세대의 삶의 질 개선
- (내용) 기존 재정건전화 정책 및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조세시스템 개편

<표 II-8> 캐나다 재무부의 FY2011-12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재정건전화 계획

목표	대상	계획
재정의 지속가능성 장려	재정수지 개선, GDP 대비 정부부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예산서에서 발표한 중기적 재정 건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경제성장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의 타당성 검토
장기간의 경제 및 재정 이슈와 전망을 모니터링	국내외적인 변화에 따른 장기적 경제 및 재정의 영향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재무부에서 실시
캐나다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조세시스템을 개편하고 재무부 장관에게 분석 및 자문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법인세 우위 유지, 국제조세 시스템 개선 등 ▪ 개인소득세, 퇴직 후 저축, 가계지원, 자선활동, 교육,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타당성 자문

출처: 캐나다 재무부, Supplementary document to the department's 2011-12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2011.6), Table. Goal1

나. 경기부양책

- 경기부양 2개년 계획(Canada's Economic Action Plan : CEAP)은 FY2011-12까지 경기부양지출로 총 603억캐나다달러 투입
 - (세금부담 경감) 개인소득세 부담 경감 등 62억캐나다달러
 - (실업자 지원) 고용보험 급여 확대, 고용보험료 상승 억제 등 82억캐나다달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도로, 교량 등 전반적인 기반시설 구축, 주택수리세금환급¹⁸⁾ 포함 148억캐나다달러
 - (지식경제 발전) 인재 확보 및 육성, 연구 능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 캐나다 기업의 역량 강화 등 38억캐나다달러
 - (산업 및 지역사회지원)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타격을 입은 부문에 대한 조정 및 일자리 지원 등 132억캐나다달러

18) 주택수리세금환급(Home Renovation Tax Credit)은 2009년 1월 27일 이후부터 2010년 2월 이전까지 건축수리를 한 개인 거주용 주택에 대해 최고 1,350캐나다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

<표 11-9> 경기부양 2개년 계획 추진내역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09-10 지출규모 ¹⁾	2010-11 부양규모	2011-12 기반시설 확장 ²⁾	합계
캐나다 국민들을 위한 세금 부담 경감	3,020	3,180	0	6,200
실업자 지원	3,348	4,885	0	8,23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6,031	7,746	1,041	14,817
지식경제의 발전과 더 나은 일자리 창출	1,550	1,959	251	3,759
산업 및 지역사회 지원	10,979	2,211	0	13,191
연방정부 총경기부양지출	24,928	19,981	1,291	46,200
지방정부 경기부양지출	7,062	5,514	1,454	14,030
총경기부양지출	31,989	25,494	2,745	60,229

주: 1) 세금경감조치에 대한 추정된 수치가 포함

2) 지식경제의 발전과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건설부양펀드(Infrastructure Stimulus Fund), 캐나다건설펀드-지역단위지원(Building Canada Fund Communities Top-up), 후생인프라캐나다(Recreational Infrastructure Canada)프로그램, 지식인프라프로그램(Knowledge Infrastructure Program)에 대한 기반시설확충이 포함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1", 2011년 6월

- 동 계획은 FY2010-11까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인프라 투자 관련 약 13억캐나다 달러가 FY2011-12로 연장됨
 - 인프라 투자 관련 4개 사업 기한을 2011년 3월 31일에서 2011년 10월 31일로 연장
 - 인프라건설부양펀드(Infrastructure Stimulus Fund), 캐나다건설펀드 - 지역 단위지원(Building Canada Fund Communities Top-up), 후생인프라캐나다 (Recreational Infrastructure Canada)프로그램, 지식인프라프로그램(Knowledge Infrastructure Program)

<표 II-10> 경기부양 2개년 계획 - 기반시설확충 내역

(단위 : 백만캐나다달러)

	기존 2개년 경기부양책	수정된 경기부양책	2011-12 추정지출
인프라건설부양펀드 (Infrastructure Stimulus Fund)	4,000	3,204	796
지식인프라프로그램 (Knowledge Infrastructure Program)	2,000	1,740	251
캐나다건설펀드-지역단위지원 (Building Canada Fund Communities Component Top-up)	500	337	163
후생인프라캐나다프로그램 (Recreational Infrastructure Canada Program)	500	417	81
합계	7,000	5,698	1,291

자료: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1", 2011년 6월

- 2011년 3월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경기부양계획에서 계획한 28,500개 사업은 현재 완료 또는 일부 추진 중
- 인프라건설부양펀드 사업 4,100개, 후생인프라캐나다 사업 2,000개 등을 포함한 주, 자치령, 지방자치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 8,100여개
 - 공공주택과 캐나다 원주민 주거 지원 사업 14,000여개
 - 전문대학과 종합대학의 기반시설 개선 사업 500여개
 - 지역사회조정펀드(the Community Adjustment Fund)를 통해 경기침체로 인해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 지원 관련 약 1,900여개 사업
 - 장애인 접근가능성 향상을 위한 300개 사업을 포함하여 공기업 소유 건물의 개조 및 수리 관련 사업 2,100여개
 - 정부출연연구소 현대화 사업 200여개
 - 원주민 지역사회 내 주요 기반시설 구축 사업 100여개

Ⅲ. 일본

□ FY 2012: 2012.4 ~ 2013.3

□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 일지

- 2011. 9.20 FY2012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의 기준
- 2011. 10.5 FY2012 각부처의 예산요구 금액
- 2011. 10.12 FY2012 각부처의 예산요구서 및 정책평가 조서 공개
- 2011. 12.24 FY2012 예산 정부안 결정
- 2012. 1.24 FY2012 예산 정부안 국회 제출
- 2012. 1.24 FY2012 예산 정부안 국회 심의 개시

□ 출처:

- 概算要求組替え基準閣議決定 (2011.9.20)
- 平成24年度一般會計概算要求額等 (2011.10.5)
- 各府省の概算要求書・要望及び政策評価調書公開ページへのリンク先一覧 (2011.10.12)
- 円高への総合的対応策(2011.10.21)
- 財政の健全化に向けた考え方について(2011.12.9)
-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 (2011.12.22)
- 平成24年度予算政府案 (2011.12.24)
- 我が國の財政事情 (2011.12)
- OECD Economic Outlook 90 (20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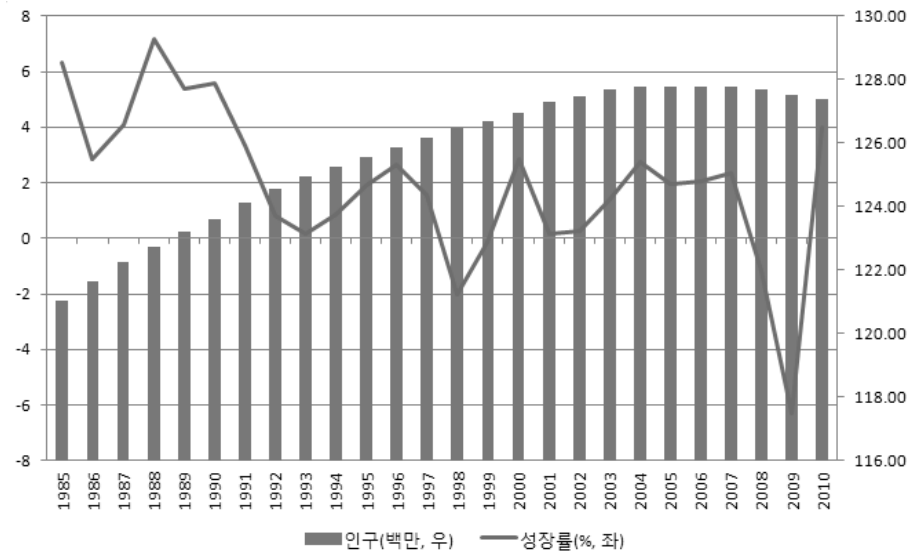
□ 환율: 100엔 = 약 1,391.31원 (2011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0년 경상GDP 4조 2,993억달러(우리나라 3.0배 수준)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2010년 기준 29.3%(우리나라 102.0%)

□ 인구: 1억 2,700만명(2011년 기준)

□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2012년도 일본 경제는 본격적으로 부흥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꾸준한 수요의 증대와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국내수요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됨
- 2012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8.4%, 국가채무 비율은 219.1%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2012년도 예산은 중기 재정 프레임을 준수하면서, 동일본 대지진 및 원자력 재해의 신속한 복구재건과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에 직면한 경제 사회의 재생에 중점을 두고 구성

◇ 예산안 내용

- FY2012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42조 3,460억엔으로 예상
- FY2011 세출은 재정건전화 및 중기재정프레임 유지를 위하여 전년 대비 2.2% 감소한 90조 3,339억엔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엔고의 종합적 대응책
 -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엔고 및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25.6조엔 규모의 대응책 수립
 - 실질GDP 0.5% 상승 및 약 3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일본재생중점화조치
 - 4개 분야(새로운 국경 및 신성장 전략, 교육·고용 등의 인재육성, 지역 활성화, 안심·안전 사회 실현)에 대한 중점화 조치 추진
- 재정건전화
 - 2010년대 중반까지 단계적인 소비세율의 인상(10%)을 통한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 도모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1.2.2	「재정운영전략」 이행 상황 검토결과 발표	재정동향 6호
2011.2.10	「新성장 전략 실현 2011」발표	
2011.4.22	FY2011 1차 추경안 발표	
2011.5.17	「정책추진지침」발표	재정동향 7호
2011.7.5	FY2011 2차 추경안 발표	
2011.9.20	FY2012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의 기준 결정	
2011.10.21	FY2011 3차 추경안 발표	
2011.10.21	「엔고의 종합적 대응책」발표	
2011.12.9	「재정건전화를 위한 생각에 대해」발표	
2011.12.20	FY2011 4차 추경안 발표	
2011.12.22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 발표	
2011.12.24	FY2012 예산안 발표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일본의 2011년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Delta 0.1\%$, 명목성장률은 $\Delta 1.9\%$ 로 전망됨
 - 2011년 일본 경제는 3월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
 -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 급속도의 경기회복을 보였으나 여름 이후 급속한 엔고 진행 및 유럽 정세 악화로 회복 둔화
 - 2011년 정부가 4차례 추경예산 편성하여 부흥을 지원함으로써 2012년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물가동향은 완만한 디플레이가 계속될 전망이며, 소비자물가는 3년 연속 하락

- 2012년도 일본경제는 본격적으로 부흥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꾸준한 수요의 증대와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국내수요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2012년도의 국내총생산의 실질성장률은 2.2%, 명목성장률은 2.0%로 예상되어 2011년 대비 국내총생산의 실질 및 명목성장률이 모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GDP 갭의 축소 등에 의해 0.1%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디플레이터는 완만하게 하락하고 실업률은 고용률의 완만한 증가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엔화 강세와 유로존 위기 등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2012년 일본의 성장률은 2% 내외로 전망
 - 일본 중앙은행(BOJ)은 FY2012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을 2.2%(2011.10)에서 2.0%로 하향 조정(2012.1)
 - 국제통화기금(IMF)은 1.7%, 세계은행(WB)는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로 전망

- 일본 내 주요경제연구소들은 2012년도 일본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전망
 - 다이와증권그룹 2.6%, 일본종합연구소 2.4%, 미즈호종합연구소 2.0%로 예측

<표 I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구분	2010 실적 (명목)	2011 추정 (명목)	2012 전망 (명목)	전년 대비증가율					
				2010		2011		2012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4792	4701	4796	1.1	3.1	△1.9	△0.1	2.0	2.2
민간최종소비 지출	2842	2827	2854	△0.0	1.6	△0.5	0.3	1.0	1.1
민간주택투자	130	135	145	2.8	2.3	4.1	2.9	7.3	6.3
민간설비투자	621	61.0	642	2.1	3.5	△1.7	△1.1	5.2	5.1
민간재고품증가(기여도)	△1.5	△2.4	△1.8	(0.8)	(0.8)	(△0.2)	(△0.2)	(0.1)	(0.1)
재화서비스수출	738	725	772	14.4	17.2	△1.8	0.0	6.6	6.5
(공제)재화서비스수입	695	769	802	15.5	12.0	10.7	4.6	4.2	3.3
내수기여도				1.1	2.4	△0.1	0.6	1.7	1.8
민간				1.1	2.3	△0.6	0.0	1.6	1.6
공공				0.0	0.1	0.6	0.6	0.1	0.2
외수기여도				△0.0	0.8	△1.8	△0.7	0.3	0.4
노동·고용	만명			%					
노동력인구	6587	6538	6551	△0.3		△0.7		0.2	
취업자수	6257	6243	6299	△0.1		△0.2		0.4	
고용자수	5469	5474	5518	0.2		0.1		0.8	
실업률	5.0	4.5	4.3						
생산	%								
광공업생산지수	8.9	△1.9	6.1						
물가	%								
생산자물가지수	0.7	1.9	0.7						
소비자물가지수	△0.4	△0.2	0.1						
GDP 디플레이터	△2.0	△1.8	△0.2						
국제수지	조엔			%					
무역서비스수지	5.2	△3.6	△1.7						
무역수지	6.5	△1.6	0.1						
수출	64.5	64.2	69.1	1.60	△0.4		7.6		
수입	58.0	65.8	69.0	1.84	1.36		4.8		
경상수지	16.1	9.9	12.2						
GDP 대비경상수지(명목, %)	3.4	2.1	2.5						

자료: 내각부,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 2011.12.22

<표 III-2> 주요 재정지표 추이

(단위 : GDP 대비 %)

구 분	실적			2011 추정	2012 전망
	2008	2009	2010		
재정수지 ¹⁾	△3.3	△9.3	△8.1	△8.8	△8.4
재정수지 ²⁾	△3.9	△10.5	△9.0	△9.7	△9.4
국채 비율	174.1	194.1	200.0	211.7	219.1
채권잔액 비율	110(546조엔)	125(594조엔)	132(636조엔)	144(676조엔) ³⁾	148(709조엔)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 비율	157(770조엔)	173(819조엔)	180(862조엔)	192(903조엔)	195(937조엔)
국채의존도 ⁴⁾	39.2	51.5	44.4	51.9	49.0

주 : 1) OECD, *Economic outlook 90*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수치

2) OECD, *Economic outlook 90*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수치

3) 3차 추경을 포함한 채권잔액 비율

4)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총재정지출

자료 : 재무성, 「平成23年度予算政府案」, 2011.12.24

2. 예산기조

□ 2012년 개선요구의 기준 및 틀 발표 (2011.9.20)

- 2012년도 예산은 재정운영에 있어 「중기 재정 프레임」을 준수하면서, 동일본 대지진 및 원자력 재해의 신속한 복구재건과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에 직면한 경제 사회의 재생에 중점을 두고 구성
 - i) 2011년도 제3차 추경 예산 등과의 일체적·연속적인 편성
 -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및 부흥 대책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제1차 및 제2차 추경 예산 등을 착실하게 집행하고, 향후 예정된 2011년도 제3차 추경 예산 등과 2012년도 예산을 일체적, 연속적으로 편성
 - ii) 일본 경제 사회의 재생을 위한 노력 (「일본 재생 중점화 조치」)
 - 일본 경제 사회의 재생을 위한 조치로서, 세출 개혁에 의해 마련되는 재원을 이용하여 재생을 위한 더 효과적인 시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

□ 일반회계 예산 프레임

- 「일본 재생 중점화 조치」에서 일본 경제 사회의 진정한 재생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을 중점 배분
- 「예산절감형 정책 분류」의 제언 등을 감안하여 기존 예산을 검토
- 공무 부문의 낭비를 철저히 삭감
- 2011년도 추경 예산에 이어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부흥에 전력으로 대응
- 시장의 신임 확보를 위해 「중기 재정 프레임」(세출 범위 약 68.4조엔, 신규 국채 발행액 약 44조엔)을 견지

3. 예산안 내용

<표 III-3> FY201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 억엔, %)

구 분	FY2011 추정(A)	FY2012 전망(B)	비교증감액 (B-A)	증감율(%)
세 입				
조세 및 인지수입	409,270	423,460	14,190	3.5
기타 수입	71,866	37,439	△ 34,427	△ 47.9
국채발행	442,980	442,440	△ 540	△ 0.1
계	924,116	903,339	△ 20,777	△ 2.2
세 출				
국채비	215,491	219,442	3,951	1.8
기초재정수지 경비	708,625	683,897	△ 24,728	△ 3.5
계	924,116	903,339	△ 20,777	△ 2.2

주: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부흥 대책에 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 회계(가칭)에 계상
 자료: 재무성, 「平成24年度予算政府案」, 2011.12.24

가. 세입

- FY2012 세입규모는 지난해 대비 2조 777억엔(2.2%) 감소한 90조 3,339억엔 수준
 - 조세 및 인지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하여 42조 3,460억엔으로 예상
 - 전년 대비 13.04% 증가한 법인세와 15.81% 증가한 담배세, 11.66% 증가한 관세가 세입증가분의 약 87%를 차지
 - 반면 기타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3조 4,427억엔(47.9%) 가량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국채 발행액은 지난해에 비해 504억엔이 감소한 44조 2,440억엔 수준

<표 III-4> FY2012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

세 목 (일반회계)	FY2011		FY2012	전년 대비			
	예산 (당초)	추경 ¹⁾	예산안	예산 (당초)		추경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11,720	109,890	110,940	△780	△0.70	1,050	0.96
신고소득세	23,180	24,110	23,970	790	3.41	△140	△0.58
(소득세 계)	(134,900)	(134,000)	(134,910)	(10)	(0.01)	(910)	(0.68)
법인세	77,920	88,070	88,080	10,160	13.04	10	0.01
상속세	14,230	14,230	14,300	70	0.49	70	0.49
소비세	101,990	101,990	104,230	2,240	2.20	2,240	2.20
주 세	13,480	13,480	13,390	△90	△0.67	△90	△0.67
담배세	8,160	9,940	9,450	1,290	15.81	△490	-4.93
휘발유세	26,340	26,340	26,110	△230	△0.87	△230	△0.87
석유가스세	120	120	110	△10	△8.33	△10	△8.33
항공기연료세	460	460	440	△20	△4.35	△20	△4.35
석유석탄세	5,120	5,120	5,460	340	6.64	340	6.64
전원개발촉진세	3,460	3,460	3,290	△170	△4.91	△170	△4.91
자동차중량세	4,280	4,280	4,170	△110	△2.57	△110	△2.57
관 세	8,150	8,150	9,100	950	11.66	950	11.66
톤 세	90	90	100	10	11.11	10	11.11
인지수입	10,570	10,570	10,320	△250	△2.37	△250	△2.37
합계	409,270	420,300	423,460	14,190	3.47	3,160	0.75

주: 1) 추경은 4차까지 포함

자료: 재무성, 「平成 24年度租税及び印紙收入概算」, 2011.12.24

나. 세출

□ FY2012 세출은 '11년에 비해 2.2% 감소한 90조 3,339억엔 편성

- 재정건전화를 강화하고 중기재정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세출은 2011년도에 비해 감소할 전망
 - 사회보장관계비(△8.1%)와 연금관계비(△11.2)의 축소가 두드러짐
 - 국채비는 1.8% 증가한 21조 9,442억엔으로 전망됨

<표 III-5> FY2012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단위: 억엔, %)

구 분	FY2011	FY2012	비교증감액	증감률
	당초(A)	전망(B)	(B-A)	(%)
사회보장관계비	287,079	263,901	△ 23,177	△ 8.1
문교 및 과학진흥비	55,100	54,057	△ 1,043	△ 1.9
국채비	215,491	219,442	3,951	1.8
연금관계비	6,434	5,712	△ 722	△ 11.2
지방교부세교부금	167,845	165,940	△ 1,905	△ 1.1
방위관계비	47,752	47,138	△ 614	△ 1.3
공공사업관계비	49,743	45,734	△ 4,009	△ 8.1
경제협력비	5,298	5,216	△ 82	△ 1.6
중소기업 산업대책비	1,969	1,802	△ 167	△ 8.5
에너지대책비	8,559	8,202	△ 357	△ 4.2
식료안정공급관계비	11,587	11,041	△ 545	△ 4.7
기타경비	55,660	62,554	6,894	12.4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 예비비	8,100	9,100	1,000	12.3
예비비	3,500	3,500	-	-
합계	924,116	903,339	△ 20,777	△ 2.2

자료: 재무성, 「平成 24年度一般會計歳入歳出概算」, 2011.12.24

<참고 1> FY2012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회계(가칭) 예산 프레임

(단위 : 억엔)

세 입	
부흥특별세	5,305
일반회계로부터의 수입금	5,507
세외수입	118
부흥채	26,823
계	37,754
세 출	
동일본대지진부흥경비	32,500
부흥채비	1,253
동일본대지진부흥예비비	4,000
계	37,754

자료 : 재무성, 「平成24年度予算政府案」, 2011.12.24

<참고 2> 중기재정프레임(재무성, 2011.12.24)

① 국채발행액

- 2012년도 신규 국채발행액(부흥채권 제외)은 2011년도 당초 예산수준(44조 엔)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

② 세입 측면

- 세제의 개혁에 대해서는 2010·2011년도 세제개정대강이나 「사회 보장·세 일체개혁방안」등을 바탕으로 다시 검토를 진행하고, 2009년도 세제개정 법률 부칙 제104조에 따라 2011년도 내에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

③ 세출 측면(2012~2014년도)

-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규모(세출 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지 않음
- 다만,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부흥 대책에 관한 경비에 있어서, 기존 세출의 삭감에 의해 충당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 중 부흥채권, 추가적인 세외 수입의 확보 및 시한적인 세제 조치로 확보 금액에 대해서는 재원과 함께 별도로 관리해 세출 범위에 가산
- 또,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경비 중 시한적인 세제 조치 등에 의해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원과 함께 별도로 관리해 세출 범위에 추가

(단위: 조엔)

	세출 범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¹⁾	71	71	71
(연금차액분 제외 금액)	68.4	68.4	68.4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예비비 ²⁾	1	1	1

주: 1) 2012년도 이후의 세출 범위는, 세제개혁에 의해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해 연금재정에 편입하는 연금차액분(기초연금국고부담비율 1/2로 36.5%의 차액)을 포함한다.

2) 2011년도 0.8조엔

자료: 재무성, 「平成24年度予算政府案」, 2011.12.24

4. 주요 재정정책

가. 「엔고의 종합적 대응책」 발표(내각부, 2011.10.21)

□ 일본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엔고 및 디플레이션 방지를 추구하기 위해 경기 하락 및 산업공동화의 위험을 초래하는 엔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발표

○ 본 대응책의 5가지 기본원칙

- i) 외환시장의 단호한 조치 및 적절한 금융 정책, 재정규율의 유지, 국제 신임 확보 등을 통한 시장의 안정 유지
- ii) 엔고와 공동화에 대처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시책을 엄선
 - 온라인 기업 등으로 엔고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강인한 경제의 구축
 - 대지진에 따른 부흥 자체가 대규모 수요이므로 부흥 수요를 조기 발현
- iii) 엔고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는 한편, 장점을 극대화
 - 엔고로 타격을 받는 기업 취업자의 불안을 해소
 - 엔고 혜택 철저 활용
- iv) 진행관리를 통한 성과 창출
- v) 새로운 성장을 위한 노력의 강화

□ 엔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 엔고에 따른 ‘고통’의 완화

- i) 신입 청년층 취업지원 확충,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의 강화 등을 통한 고용 창출 뒷받침
- ii) 엔고로 곤경에 빠져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확충
 - 모든 업종에 대해 안전망 보증 연장 요건 완화를 통한 대상 확대
 - 안전망 대출 금리 인하(최대 0.5%)·시설자금 대출 금리 인하(0.5%) 실시

- 위기 대응 업무의 일본 정책 투자 은행 등을 통한 용자 금리 인하 (0.5%) 실시
 - iii) 지진과 엔고로 고통 받는 관광 지원
 - 지진 원자력 재해 및 엔고 현상으로 인해 일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3% 감소
 - 방일 여행자 수를 지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방일 여행자 수가 많은 시장에 대한 중점적인 여행객 유치 프로모션, 국제회의 취소 방지 대책, 민간 지자체와의 방일 여행객 유치를 위한 협력 강화 등 노력 강화
 - iv) 농림 수산업의 '고통'의 완화
 - v) 부흥 수요의 조기 발현
- 위협에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경제 구축
- i) 입지 보조금의 확충 등에 의한 경쟁력 강화
 - 엔고 등에 의한 산업 공동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망에 필수적인 부품·재료 분야 및 고부가가치 분야의 생산 연구 개발 거점 입지에 대한 보조 등 5,000억엔 투입
 - ii)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도입 지원 강화에 따른 수요 확대
 - iii) 세계 온라인 기업 기술 육성
 - 비가격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일본의 강점인 중소기업 금속 가공 등의 제조 기술력 고도화 등을 지원
 - iv) 창업 기업 강력 지원
 - v)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한 세계 시장에 도전 지원
 - vi) 종합 특구 추진 등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
 - 국제 전략 종합 특구 및 지역 활성화 종합 특구지정 및 계획 수립
 - '아시아 거점화 대일 투자 촉진 프로그램(가칭)' 수립 계획

- vii) 국내 입지 기업이 직면한 고난에 대처
 -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략 강화 및 일본 재생 전략 재정비
 -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백지에서 검토하고 2012년 여름을 목표로 ‘혁신적인 에너지 환경 전략’을 책정
- o 엔고 현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해외 M&A 촉진, 자원 확보, 일본 학생의 해외파견, 고급 인력 수용 등을 통한 엔고 장점 적극 활용

□ 본 대응책으로 ① 실질GDP 0.5% 상승 및 ② 약 3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표 III-6> 대응책의 규모

(단위: 조엔)

	국비	사업비
1. 엔고에 의한 고통 완화	1.1	12.1
중점분야고용창출사업의 확충	0.2	0.2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확충	0.6	11.5
2. 위협에 강인한 경제 구축	0.9	11.4
입지보조금 확충	0.5	1.2
절전에코보조금 등	0.2	0.4
주택에코포인트의 재편·재개	0.1	9.7
3. 엔고장점의 철저한 활용	0.04	0.07
합 계	2.0	23.6

주: 국비는 일반회계임. 사업비는 현시점에서의 전망을 보여줌
 자료: 내각부, 「円高への総合的対応策」, 2011.10.21

나. 「일본재생중점화조치」(재무성, 2011.12.24)

□ FY2012 예산안의 핵심내용으로 일본의 재생을 위해 4개 분야에 대한 중점화 조치를 추진

- 세출 삭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이용하여 일본 재생을 위한 더 효과적인 정책에 예산을 중점 배분하는 노력(「일본 재생 중점화 조치」)을 실시
- 일본 경제 사회를 재생하고 국민 개개인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4개 분야에 대해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
- 개산 요구 단계 당시 7000억엔 규모였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출 삭감을 활용하여 1조엔 규모로 확대
- 「일본재생중점화조치」의 대상이 된 4개 분야
 - i) 새로운 국경 및 신성장 전략(과학 기술 에너지 해양 우주 등 인프라 정비를 포함한 성장 기반 강화)
 - 예) 위성 시스템의 정비·운용(내각부), 자원 권익 확보(경제산업성), 중소기업의 해외 전개 기술력 강화(경제산업성), 환경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대책(환경부)
 - ii) 교육(스포츠 포함)·고용 등의 인재 육성
 - 예) 새로운 스포츠 문화 창조 프로젝트에 의한 일본 재생(문부과학성)
 - iii) 지역 활성화
 - 예) 오키나와 진흥 예산(내각부), 철도에 의한 지역 활성화(국토교통성)
 - iv) 안심·안전 사회 실현
 - 예) 치안 수준의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추진(경찰청), 집중 호우 등에 의한 재해 방지 대책(농림수산성), 수해 토사 재해 해일 대책(국토교통성), 재해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국방부)

<표 III-7> 일본재생중점화조치 분야별 우선·중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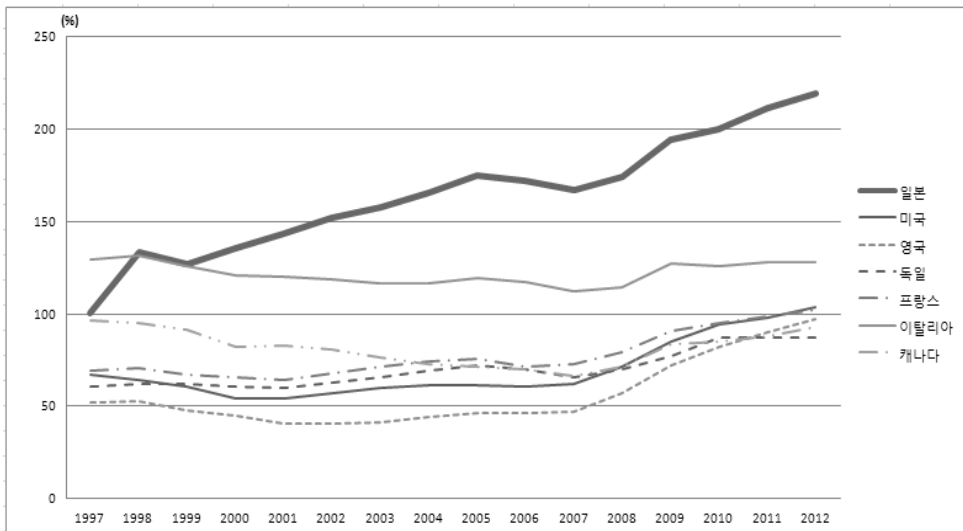
(단위: 억엔)

분야별 주요 사업	규모
새로운 국경 및 신성장전략	
위성 시스템의 정비 운용(내각부)	41
정보 통신 기술의 연구 개발·활용 촉진(총무성)	89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전개와 녹색 성장의 촉진(외무성)	301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대학 연구 기반 강화 사업(문부과학성)	483
해양 프린터어에 도전(문부과학성)	27
자원 권익 확보(경제산업성)	177
건강 관리 산업의 창출(경제산업성)	33
중소 기업 해외 전개 기술력 강화(경제산업성)	30
간선 도로 네트워크의 정비(국토교통성 등)	1,440
수도권 공항의 강화(국토교통성)	118
환경 기술을 활용한 재활용 대책 등(환경부 등)	60
교육(스포츠 포함)·고용 등의 인재육성	
새로운 스포츠 문화창조 프로젝트에 의한 일본재생(문부과학성)	35
지역활성화	
오키나와 진흥 예산(내각부)	773
철도에 의한 지역 활성화(국토교통성)	50
안심·안전 사회 실현	
정보 수집 위성의 연구 개발(내각 관방)	40
치안 수준의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추진(경찰청)	85
안심·안전 사회 실현을위한 형사 사법 기반 강화(법무부)	72
재택 의료·개호 추진(후생 노동성)	18
집중 호우 등에 의한 재해 방지 대책(농림수산성 등)	200
수해 토사 재해 해일 대책(국토교통성 등)	645
재해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국방부)	56

다. 「재정건전화에 대한 소고」 발표(재정제도분과회의, 2011.12.9)

- 일본의 재정 현황: 국제적으로 재정건전화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재정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
 - 세출과 세입이 매년 크게 괴리되는 상황이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심각한 재정 구조
 - 채권 발행액은 해마다 누증하고, 채권금 수입이 세수를 3년 연속 웃도는 적자 상황
 - 2011년 말 212%에 달하는 GDP 대비 부채(채무잔고)비율은 주요국 최악의 수준
 - 사회보장비의 자연 증가는 경제 규모의 확대를 훨씬 웃돌아, 사회 보장 관계비는 20년여 만에 2.5배 팽창
 - 150조엔을 넘는 국채 총발행액과 세수 규모의 2배를 상회하는 국채상환액

[그림 III-1] 국가별 GDP 대비 부채비율



주: 수치는 일반회계 바탕으로 작성
 자료: 재무성, 「我が國の財政事情」, 2011.12
 OECD, *Economic outlook 90*, 2011.12

□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논의

- 2010년대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세율을 10%까지 높여 재정운영전략에 정해진 2015년도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도모
- 일본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재정건전화를 계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015년도까지 매년 비슷한 속도로 기초재정수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
 - 2015년도의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은 재정 건전화를 향한 이정표이며, 2020년도의 재정건전화를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언급
- 경제상황을 의식하여 재정건전화를 미룰 경우,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건전화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재정의 건전화는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유지하며 일본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국민에게 이해시키면서, 강한 의지로 재정건전화를 실행에 옮길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

IV. 프랑스

□ FY2012: 2012년 1월 ~ 2012년 12월

- 2012년 예산법안(LF 2012 :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2)은 2011년 9월 28일에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8일 예산법(LF 2012: Loi de finance)으로 통과

□ 출처

- 2012년 예산법안(LF 2012: Loi n° 2011-1657 de finances pour 2012)
- 2012년 예산안 관련 언론공개 자료(프랑스 정부 발표)
 - Les grandes lignes, Les chiffres clés 등
- 2011-2014 중장기 예산법안(LFPF 2011 a 2014: Loi n° 2011-1645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11 a 2014)
- 2012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LFSS 2012: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 Les chiffres clés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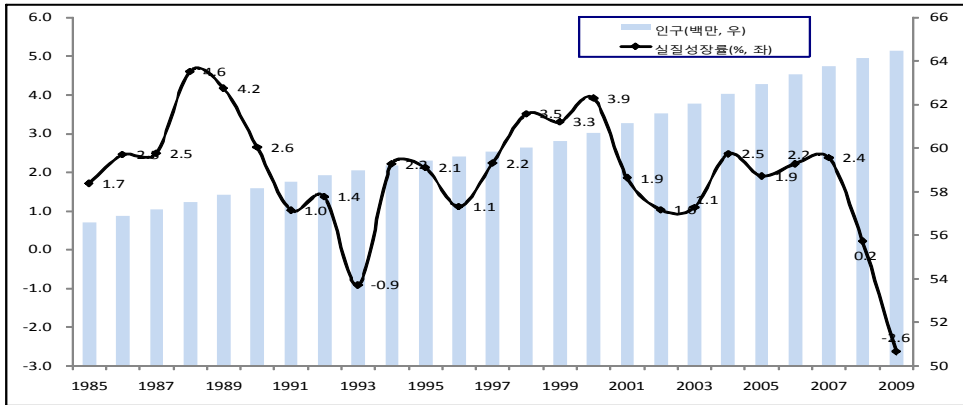
□ 환율: 1유로 = 약 1,541.42원(2011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0년 경상GDP 2조 2,144억달러(우리나라 2.2배 수준)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2010년 기준 53.3%(우리나라 102.0%)

□ 인구: 6,484만명(2010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2012년에 경제성장 전망률은 1% → 0.5%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뚜렷한 둔화세를 보임
 - 2011년에는 연초 2.0%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1.6% 그침
- 채무비율은 경기침체, 높은 재정적자와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나, 2016년까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으로 88%를 전망
- 2012년 1월 13일 금요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A → AA+'로 한 단계 강등

◇ 예산기조: 재정적자 감축 및 균형재정 달성

- 2012년 예산법안(LF 2012)은 긴축예산을 통해 지난해 GDP 대비 6.1%였던 재정적자를 올해 GDP 대비 4.5%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재정적자를 2013년에 안정 및 성장협약(SGP) 기준인 3%로 줄이고 2016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2년 세입은 2,888억유로로 201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세출) 2011년 수정 전망 대비 1.1% 증가한 3,660억유로로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

◇ 주요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2012년부터 실행되는 174억유로 규모의 세제혜택 축소
 - 채무와 연금에 관련된 지출을 제외한 지출 안정으로 연평균 0.6%의 지출 증가율을 전망
- (사회보장) 80억유로의 새로운 재원마련과 의료비 등의 지출 통제 계획
 - 2008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던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를 2012년 179억 유로까지 감소시킬 계획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1.1.6~7	Colloque Nouveau monde, nouveau Capitalisme 포럼 개최	
2011.1.31	프랑스에 대한 경제검토위원회 (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 EDRC) 개최	재정동향 5호
2011.5.11 발표 7.8 의회 통과	2011 예산수정안 발표 및 의회 통과	재정동향 6호
2011.5.25	2011년 사회보장 수정예산법 발표	
2011.8.8	제2차 수정예산안 발표	
2011.8.12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주식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	
2011.8.16	독일-프랑스 정상회담 - 유로존 회원국들의 단일경제정부 역할을 할 공동경제위원회 설립안 공식 제안 - 2013년부터 적용할 공동법인세 추진합의 - 금융거래세 신설을 추진	재정동향 7호
2011.8.24	프랑스 정부 재정긴축 계획 발표	
2011.9.6	제2차 수정예산안 의회 통과	
2011.9.23 제출 12.28 채택	2012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LFSS 2012: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11.9.28 12.28 채택	2012년 예산법안(LF 2012)	
2011.10.9	독일-프랑스 정상회담 - 유로존 모든 국가 EFSF 확대안 승인	
2011.11.7	프랑스 정부 2차 재정긴축 계획 발표	재정동향 8호
2011.12.9	EU 27개국 중 영국을 제외한 26개 회원국 정상들이 재정 통합을 강화하는 '신 재정협약'에 합의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시 경기부양책¹⁹⁾ 실시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큰 폭 증가('07년 2.8%→'10년 7.1%)
 -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A→AA+' 로 한 단계 강등('12.1.13)
 - 이러한 재정악화는 주로 정부지출의 증가에 기인(OECD, '11.11)
 -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는 '10년 56.7%로 매우 높은 수준('10년 OECD 평균 44.6%)이며,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07년 28.4%로 GIPS 국가들²⁰⁾보다 높은 수준

<표 IV-1>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단위: GDP 대비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재정수지	△3.0	△2.4	△2.8	△3.3	△7.6	△7.1	△6.1	△4.5	△3.0	△2.0	△1.0
국가채무	66.7	64	64.2	68.2	79	83.6	86.4	87	86.8	85.3	83.2

출처: INSEE(경제 및 통계연구기관) 및 예산청 자료 참조해서 작성, 2008년까지 자료는 INSEE 자료, 2009년 이후 자료는 예산안(PLF 2012) 자료임

- 2010년과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는 각각 1.5%와 1.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서서히 회복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11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률의 정체와 유럽 전역의 경기 침체를 반영해 2012년 1%→0.5%로 하향 조정함

19) 경기부양책은 '09년 383억 유로, '10년 96억 유로규모

20) '07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그리스) 21.3 (포르투갈) 22.5 (아일랜드) 16.3 (스페인) 21.6 (이탈리아) 24.9 (OECD 평균) 19.3

<표 IV-2>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단위: %)

	2009	2010	2011	2012
프랑스 GDP	-2.6	1.5	1.6	1→0.5
가정소비	0.6	1.3	1.7	1.7
기업투자	-8	2.0	5.5	4.9
수출	-12.4	9.4	7.6	5
수입	-10.7	7.1	6.7	5.4
소비자물가지수(연평균)	0.1	1.8	2.1	1.9

자료: PLF 2012, Ministère de l'Economie, de l'Industrie et de l'Emploi 취합(Agence France Trésor)

- (소비) 소비는 경기부양 정책과 사회복지 혜택으로 인해 경제위기 기간동안 감소하지 않았으나 2012년 1, 2차 재정적자 감축안(8.24, 11.7)의 소득세율 및 소비세율 인상 조치 등과 GDP 전망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변화 가능성 있음
 - 50만유로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1 → 44%로 인상
 - 담배, 주류, 청량음료, 테마파크 티켓 등 소비세율 인상
- (기업투자환경) 2012년 세금인상과 세제혜택 축소 등 재정적자 감축 방안으로 기업투자 환경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세율인상: 연매출 2.5억유로 이상 기업 법인세 5%p 한시적 인상(34.4% → 39.4%)
 - 세제혜택축소: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 (무역) 수출은 2011년 약 7.6%까지 증가하였으나 2012년 수출증가율은 5%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무역 상승률은 2011년 0.3%, 2012년 0.1%로 전망
- (물가상승) 유가 급등으로 2010년 1.8%에서 2011년 2.1%로 상승, 2012년 1.9% 정도로 전망(공공요금 및 변동이 심한 상품을 제외한 기저물가 상승률은 0.7%)

- 공산물 물가는 0.2% 하락하여 물가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서비스 물가 1.4% 인상(교통비를 제외한 공공요금 인상)
- 담배 가격은 정부의 지속 인상정책으로 5.6% 인상
- 에너지 물가는 석유제품의 가격 급등으로 12.5% 상승하여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작용
- 식료품 물가는 신선한 농산물 가격의 9.4% 인상으로 1.2% 상승
- (고용 및 실업) 실업률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2%p가 높아진 9.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 통계청(INSEE) 9월 1일 발표에 의하면, 2011 2/4분기 실업률은 9.6%로 전분기에 비해 0.1%p 감소
 - 남자 실업인구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p(9.4→9.1%)감소하였으나 여자 실업인구 증가율은 0.1%p(10.2→10.3%)증가, 50세 이상의 실업인구 증가율은 전년 대비 13.0%로 가장 높음
 - 해외속령을 제외한 본토 실업률은 전분기 9.3%에서 9.1%로 0.2%p 감소

나. 재정 전망

1) 프랑스정부 세입 및 세출 전망

- (지출) 2011년 수정예산 기준으로 3,619억유로, 2012년(확정예산)에는 이보다 1.1% 정도 증가한 3,660억유로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3,726억유로, 2014년에는 3,791억유로로 지출할 것으로 전망
- (수입) 조세수입은 2011년 2,700억유로, 2012년에는 2.1% 증가한 2,756억유로로 전망하고, 세외수입은 2011년 56억유로, 2012년은 이보다 135.7% 높은 132억유로로 전망

- 2014년까지 조세수입은 증가추세 보이며 2012년 대비 12.6%정도 증가한 3,104억유로로 전망
- 2012년에 증가세를 보이던 세외수입은 201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며 236억 유로(2012년 대비 78.8%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IV-3> 프랑스 2010-2014년 재정 전망

(단위 : 백만유로)

	2010	2011	2011 수정	2012	2012 확정예산	2013	2014
지출	4,242	3,598	3,619	3,662	3,660	3,726	3,791
수입	2,733	2,713	2,756	2,931	2,888	3,175	3,340
조세수입	2,547	2,544	2,700	2,737	2,756	2,950	3,104
세외수입	186	169	56	194	132	225	236
재정수지	1,509	885	919	731	772	551	451

2) 프랑스정부 재정수지

- 프랑스 중기재정 예산법안 2011-2014에 따르면, GDP 대비 세출은 감소하고 세입은 증가하여, 2010년 7.7%이던 재정적자가 2014년 2.0%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예산법(LF 2012)에서는 2010년 재정적자를 7.1%로 수정(2. 예산기조 참고)

<표 IV-4> 프랑스 2011-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

(단위 : 10억유로)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대비 세출	24.6	22.1	21.1	20.0	19.1
GDP 대비 세입	16.9	16.1	16.5	17	17.1
GDP 대비 재정수지	-7.7	-6.0	-4.6	-3.0	-2.0
재정수지	-150.9	-88.5	-73.1	-55.1	-45.1

자료 : LPFP 2011-2014(2010.9)

3) 프랑스정부 부채비율

- 채무비율은 경기침체, 높은 재정적자와 낮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
 - 2012년에는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힘입어 GDP 대비 실질재정수지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중기재정예산법안(LPFP) 2011-2014 : 2011년 6.0% → 2012년 4.6%
 - 2012년 예산법안(PLF 2012) : 2011년 6.1% → 2012년 4.5%
 - 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으로 국가부채가 2012년에는 87.4%에 이르며 2013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정부 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을 두고 있음

<표 IV-5> 프랑스 2009-2014년 부채비율 전망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부채율 ¹⁾	78.1	82.9	86.2	87.4	86.8	85.3
실질재정수지	-7.5	-7.7	-6	-4.6	-3	-2

주: 1)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자료: LPFP 2011-2014(2010.9)

2. 예산기조

□ 2012년 예산(LF 2012)은 재정적자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긴축예산을 통해 2010년 GDP 대비 7.1%였던 재정적자를 2012년 GDP 대비 4.5%를 목표로 감축
- 이후 2013년 안정 및 성장협약(SGP) 기준인 3%로 줄이고 2016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GDP 대비 %)

('10) 7.1 → ('11) 6.1 → ('12) 4.5 → ('13) 3.0 → ('14) 2.0 → ('15) 1.0 → ('16) 0

- 지출감축: 2011년 수정 전망 대비 1.1% 증가한 3,660억유로로 인플레이션 상승률²¹⁾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
 - 정부 채무와 연금에 대한 지출을 제외한 정부지출 삭감(2010년 GDP 대비 24.6% → 2012년 GDP 대비 21.1%)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2011년부터 3년간 동결
 - 의료비 지출 증가율을 각각 2011년 2.9%, 2012년 2.5%로 제한 등
- 세입확충: 2012년 재정수입은 2,888억유로로 2011년 수정 전망 대비 4.8% 증가
 - 2012년 및 2013년에 대해 소득세, 부유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구간 동결
 -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9% → 24%로 인상
 - 고소득자에 대해 한시적²²⁾으로 소득세 3%p 인상(2010년 40% → 2011년 41% → 2012년 44%로 인상)

21) 2012년 인플레이션 상승률 전망: 1.7%

22) 재정적자 목표치인 GDP의 3% 달성시까지 운영되며, 현재 동 재정적자 목표 달성시기는 2013년임

<표 IV-6> 중앙정부 2012 예산안

(단위 : 10억유로)

	2010년 확정치	2011년 2차 추경예산	2011 수정 전망	2012년 예산안
재정지출	422.6	361.4	361.9	366.0
재정수입	254.7	268.8	275.6	288.8

자료 : LF 2012

3. 예산안 내용(LF 2012)

- 9월 28일 재정적자 감축에 초점을 맞춘 2012회계연도('12.1~'12.12) 예산안이 발표되었고 12월 28일 의회 통과됨

가. 세입

- 2012년 조세수입은 2,888억유로로, 부유층에 대한 세수확대 및 세제혜택 축소 등에 초점을 두어 2011년 대비 4.8% 증가
 - 2012년 예산법안에서 추진된 세제개편 정책으로 174억유로 증가('12년부터 추진)

<표 IV-7> 세제개편 현황

	주요내용	비고
세율인상	연간 5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한시적 ¹⁾ 으로 소득세 3%p 인상	41 → 44%
	담배, 주류, 청량음료, 테마파크 티켓 등에 대한 소비세율 인상	
	보충 의료보험의 보험료율 인상	
	2012 ~ 2013년까지 연매출 2.5억유로 이상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5%p 한시적 인상	34.4 → 39.4%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상향조정	19 → 24%
	1박 숙박비가 200유로 이상인 숙박시설에 대해 호텔 숙박세 도입	숙박료의 2% 징수
세제혜택 축소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 제도의 혜택 축소	

주: 1) 재정적자 목표치인 GDP의 3% 달성시까지 운영되며, 현재 동 재정적자 목표 달성시기는 2013년임

나. 세출

- 재정적자 감소를 주요 목표로 지출을 통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공공보조 분야에서 가장 크게 감액된 반면, 교육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증액됨
 - 공공보조 분야는 저소득층·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지원 축소로 전년 대비 65.5% 감소 (△18억유로)

- 교육 분야에서는 사회(고용)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 특히 취약분야인 농업 기술 교육 분야에 12만 2천명 지원으로 전년 대비 36.6%증가(167억유로)
- 분야별 지출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
 - 농업·임업·수산업: 2011년부터 시작된 농업 근대화 투자 정책을 통해 경쟁력 확보 초점(2억 4천유로)
 - 국방: 항공 우주 연구 및 연구를 위한 국립 연구 시설, 항공 우주 박물관, 해군 및 육군 박물관 설립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55억유로)
 - 법무부: 청소년 사법제도 개혁(미성년자 보호 강화) 및 교도소 환경 개선, 청소년의 경우 출소 후 고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21억유로)
 - R&D 및 고등교육: R&D 및 고등교육 예산은 5년간 40% 증가, 증가 원인은 에이즈와 바이러스성 간염 관련 국가연구기구(ANRS) 지원 및 국립학교와 국립연구소간의 통합화 과정 지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10억유로)
 - 은퇴자 지원: 새로 진입한 은퇴자를 위한 연금 증가(6억유로)
 - 치안: 국가 보안을 위한 경찰 및 헌병 강화 및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으로 49.0% 증가(57억유로)

<표 IV-8> 2011-2012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 10억유로)

미션	2011 본(수정)예산 (A)	2012 예산법안 (B)	B-A (%)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83	2.93	0.1 (3.5)
일반공공행정 (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2.07	2.74	0.67 (32.4)
농업, 임업, 수산업 (Agriculture, pêch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3.53	3.77	0.24 (6.8)
공공보조 - 저소득층 지원, 외국인 이민자 지원 감소 (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4.55	2.75	△1.8 (△39.6)
퇴역군인 지원 (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3.28	3.19	△0.09 (△2.7)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 (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50	0.60	0.1 (20.0)
문화(Culture)	2.53	2.60	0.07 (2.8)
국방(Défense)	34.72	40.24	5.52 (15.9)
국가정책방향 - 정책통합, 자유 및 권리보호, EU내 프랑스 지위 확보(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1.47	1.10	△0.37 (△25.2)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Ecologie, développement et aménagement durables)	9.10	9.81	0.71 (7.8)
경제 - 산업 및 기업 지원(Economie)	1.83	2.00	0.17 (9.3)
국가의 재정 의무	48.12	49.92	1.8 (3.7)
교육(Enseignement scolaire)	45.65	62.34	16.69 (36.6)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9.27	11.64	2.37 (25.6)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0.56	0.63	0.07 (12.5)

<표 IV-8>의 계속

(단위 : 10억유로)

미션	2011 본(수정)예산 (A)	2012 예산범안 (B)	B-A (%)
법무부(Justice)	7.66	9.80	2.14 (27.9)
언론(Médias)	1.45	1.27	△0.18 (△12.4)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2.12	2.18	0.06 (2.8)
균형발전정책(Politique des territoires)	0.35	0.33	△0.02 (△5.7)
R&D 및 고등교육 (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4.79	25.79	1 (4.0)
복지 및 은퇴자 지원 (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03	6.62	0.59 (9.8)
지방재정지원 (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55	2.54	△0.01 (△0.4)
환급과 리베이트 (Remboursements et dégrèvements)	55.10	22.44	△32.66 (△59.3)
건강 복지(Santé)	1.22	1.38	0.16 (13.1)
치안(Sécurité)	11.52	17.17	5.65 (49.0)
시민안정 - 자연재해 및 화재등 (Sécurité civile)	0.42	0.42	0 (0.0)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2.17	12.79	0.62 (5.1)
체육 및 건강, 청소년 지원 (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0.42	0.48	0.06 (14.3)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2.19	10.16	△2.03 (△16.7)
건설 및 주택(Ville et logement)	7.67	7.85	0.18 (2.3)
정부재정관리 - 부채 관리, 국채발행등 (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45.38	48.77	3.39 (7.5)

<표 IV-8> 계속

(단위 : 10억유로)

미션	2011 본(수정)예산 (A)	2012 예산법안 (B)	B-A (%)
예비비(Provisions)	0.34	-	-
경제위기대응정책 (Plan de relance de l'économie)	-	-	-
의회, 헌법위원회 등 (Pouvoirs publics)	0.49	0.59	0.1 (20.0)
합계	361.9	366.0	4.1 (1.1)

자료 : LF 2012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프랑스 예산안은 '11년과 마찬가지로 지출통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12년도 예산에서는 제로증가를 원칙*에 따라 지방 정부·EU 보조금을 거의 동결하는 등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

* 연금 및 채무상환비용을 제외한 정부지출 증가율을 0으로 제한

- 총 174억유로 규모의 이번 긴축방안은, 2011 및 2012 회계연도에 대해 각각 10억유로와 174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계획

- 2011년 하반기 추가세입으로 10억유로, 2012년 세입확대와 지출축소 방안으로 174억유로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1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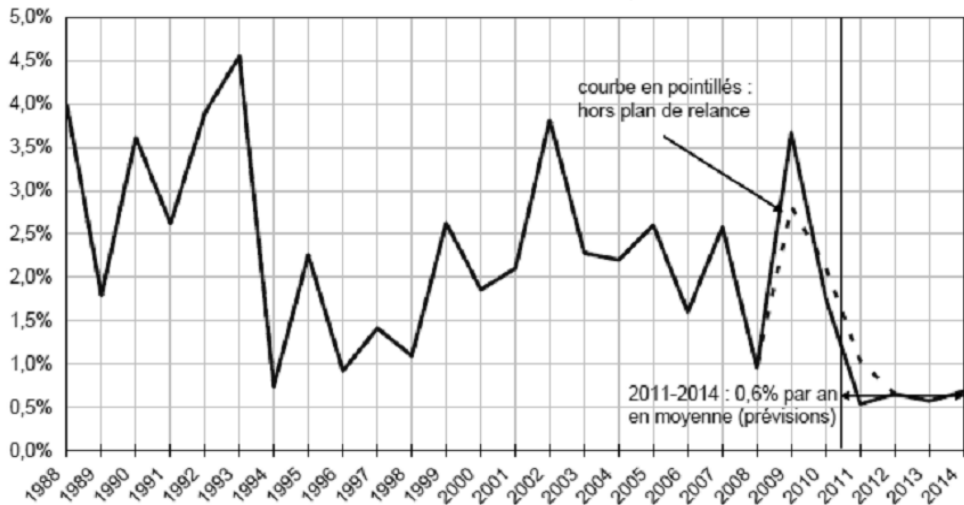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2011년부터 3년간 동결

- 의료보험비 지출 증가율*을 2011년 2.9%, 2012년 2.5%로 제한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5%로 동결

- 은퇴연령 상향조정 조기시행('18→'17년)

[그림 IV-1] 재정지출 추이



자료: LPFP 2011-2014

- 174억유로에 달하는 세제지원 철폐 및 조세감면 축소 정책을 2012년부터 본격 실행
 - 중소기업 관련 소득 및 투자에 대한 감세제도 개혁 (제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 현 소득세의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10% 감세와 세금공제
 -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
 -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 제도의 혜택 축소

- IMF는 프랑스 재정적자가 2012년 GDP 대비 4.5%로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감축 속도가 둔화돼 2013년에는 3.9%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IMF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소세와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가 2012년 GDP 대비 4.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IMF와 견해를 같이했으나 2013년에는 유로존 합의기준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2011년 12월 26일)

나. 복지지출 관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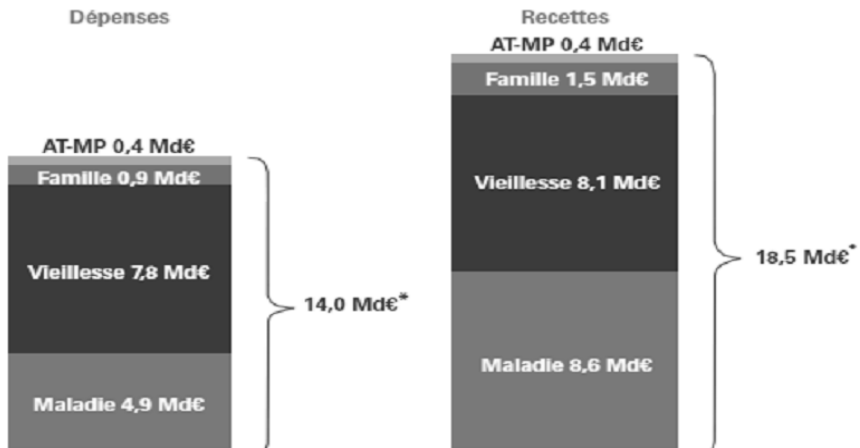
- 복지 관련 지출과 수입 추이
 - [그림 IV-2]를 보면 2011년과 2012년 사이 복지관련 지출은 140억유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이보다 32% 많은 185억유로 증가

<표 IV-9> 복지 관련 지출과 수입

분야	재정 지출	재정 수입
노령관련(vieillesse)	78억유로 증가	81억유로 증가
의료관련(maladie)	49억유로 증가	86억유로 증가
산재보험(AT-MP) 관련	4억유로 증가	4억유로 증가
가족관련(Famille)	9억유로 증가	15억유로 증가

자료: LFSS 2012 (2011.12.28)

[그림 IV-2] 2011-2012 복지 재정 지출과 수입 추이



자료 : LFSS 2012 en chiffres

- 사회보장부문 예산(2011년 9월 23일에 제출, 12월 28일에 채택)
 - 80억유로의 새로운 자원마련과 지출 통제를 통해 2008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던 재정적자를 2012년 179억유로까지 감소할 것을 목표로 설정
 - 세입확대 및 세제혜택 축소와 사회보장 채무를 사회보장 감채기금(CADES : la Caisse d'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²³)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자원 마련

23) 프랑스 사회보장채무의 재정수지 회복을 위해 채무상환을 목표로 함.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가까운 구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증을 제공하는 파산이 불가능한 공공기금

<표 IV-10> 2012년 사회보장부문 예산

(단위 : 10억유로)

	2011 결산	2012 예산
의료보험 (CNAM)	-9.5	-5.9
산재보험 (CNAM AT/MP)	0.0	0.0
노후연대기금(FSV) ¹⁾	-3.8	-4.1
가족지원금(CNAF) ²⁾	-2.6	-2.0
일반 제도 수지(Regime General) ³⁾	-15.9	
법정연금기금 (CNAV)	-6.0	-5.9
총액	-21.9	-17.9

주 : 1) 노후연대기금(FSV)은 보충성 급여로서 현재의 소득수준과 법정 최저생활수준의 차이만큼 지급(임춘식 외 6인,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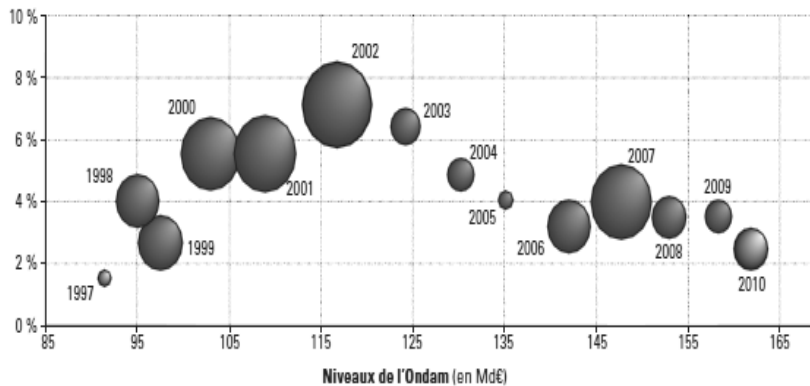
2) 가족지원금(CNAF)은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당 및 보조금을 지급, 대부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수당이 대부분임

3)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제도, 특별제도, 자영업자 제도, 농업노동자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제도는 전체 피보험자의 7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중심적 제도임(박찬영, 1997)

□ 의료 관련 지출 통제 정책

- 의료비 지출의 통제 강화(의료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고가 진료환자의 보험료 반환)를 통해 2012년 의료비 지출 증가율 목표(ONDAM)를 2.5%로 전망

[그림 IV-3] 의료비 지출 증가율 목표 추이와 전망



자료 : LFSS 2012

- 고령인구 관련 정책 강화
 - 장애인구와 고령인구를 위한 지출목표(ONDAM)는 2011년 대비 6.1%로 의료관련 지출 중 가장 큰 폭 인상('11년 76억유로 → 80억유로)
- 각종 보조금 및 사회보장수당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통제 강화

V. 독일

□ FY2012: 2012년 1월 ~ 2012년 12월

□ 2012년도 독일 예산안:

- 2011년 3월 16일 예산편성지침 내각 결의
- 2011년 7월 6일 정부 2012년 예산안 및 2011-2015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 2011년 9월 6일 의회 심의 시작
- 2011년 11월 25일 하원 통과

□ 출처:

- Bundeshaushalt 2012, Finanzplan des Bundes 2011 bis 2015(2011.7)
- Monatsbericht des BMF(2011.12)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www.bmas.de)
- Statistisches Bundesamt(www.destatis.de)
-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2011.12)
-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2011.11)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1.9)
- OECD, Economic Outlook(2010.11)
-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www.cesifo-group.de)
- Kiel Institute(www.ifw-kiel.de)
-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deu.mofat.go.kr)
- KOTRA(www.globalwindow.org)

□ 환율: 1유로 = 약 1541.42원(2011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0년 경상GDP 3조 586억달러(우리나라 2.15배 수준)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2011년 기준 95.1%(우리나라 102.0%)

□ 인구: 8,178만명(2011년 기준)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독일중앙은행 발표 기준 2012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0.6%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 실업률은 7.0%이며 물가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재정 전망) 2012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3,062억유로이며, 신규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2,801억유로, 신규차입은 약 261억유로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

◇ 예산기조

- 부채제한법에 명시된 GDP 대비 0.35% 미만의 신규부채 규모 달성(2016년)을 위해 2011년에 이어 긴축정책을 유지하며, 신규차입 감소를 위해 Top-down 예산 방식을 도입
- 중·소 소득층 중심의 세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성장지향적 측면을 가미하며,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예산안 내용

- 2012년도 신규차입금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하여, 총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
- 총재정지출은 3,062억유로로, 전년 대비 0.1% 증가한 규모이며,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41.3%)이 가장 큼

◇ 주요정책

- (재정건전화) 대내적으로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의 제4차 회의 결과, 2012~2016년 적용될 재정 평가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신(新)재정협약 초안이 타결됨
- (에너지정책)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로 연간 약 33억유로의 수입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원전폐쇄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할 예정
- (감세) 2013~2014년에 걸쳐 소득세 면세점을 8,354유로로 인상하고 부유세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1.1.13	FY2010 결산 잠정완료	재정동향 5호
2011.2.2	세제간소화법 발표	재정동향 5호
2011.3.2	은행세 관련 법령 개정	재정동향 6호
2011.3.16	FY2012 예산편성 지침 내각 결의	재정동향 6호
2011.4.3	수정된 안정화 프로그램 승인	재정동향 6호
2011.5.30	FY2010 결산 보고서 발표	재정동향 7호
2011.7.6	독일 정부 FY2010 예산안 및 2011-2015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재정동향 7호
2011.7.21	독일 내각 은행세 법령 승인	재정동향 7호
2011.9.6	FY2012 예산 의회 심의 시작	
2011.11.25	FY2012 예산 하원 통과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2012년도 독일경제는 2011년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 하락과 실업률 감소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률) 2012년도 독일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2 예산안 및 2011~2015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1.8%의 GDP 증가를 예상함²⁴⁾
 - EU 집행위원회와 독일중앙은행은 2012년 1% 이하의 GDP 성장률 전망
 - (실업률) 실업률은 2011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연방정부는 2012년 한해 총 고용인구가 4,13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독일 역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함
 - 2011년 12월 독일 실업률은 20년 이래 최저치인 6.8%를 기록해 독일 소비경기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 (수출) EU 집행위원회와 IMF는 3.9%, 독일중앙은행은 3.2% 등 2011년 대비 수출 성장둔화세를 전망함 7.3%의 실업률을 예상함

24) 거시경제 봄 예측(2011.4), 독일정부 2012년 경제성장률 0.7%로 수정 발표함(2012.1)

<표 V-1> 독일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 %)

	EU 집행위원회		IMF		독일중앙은행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GDP 성장률	2.9	0.8	2.7	1.3	3.0	0.6
CPI ¹⁾	2.4	1.7	2.2	1.3	2.5	1.8
실업률	6.1	5.9	6.0	6.2	7.1	7.0
수출 ²⁾	7.8	3.9	8.6	3.9	8.3	3.2
수입 ²⁾	7.9	5.8	9.0	3.7	7.4	4.3

주 : 1) CPI :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2) 수출 / 수입 : 재화 및 용역에 해당

자료 : EU 집행위원회 : Economic Forecast, 2011.11

IMF : Economic Outlook, 2011.9

독일중앙은행 :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2011.12

나. 재정 전망

1) 세입 및 세출 전망

□ 2011년 7월 독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2015년도 중기재정 계획이 의회 심의를 거쳐 당초 정부안(3,060억)에 비해 2억유로 증가된 3,062억유로로 확정

- (재정수입) 2012년 신규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2,801억유로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8.8% 증가한 규모
 - 이 중 조세수입은 약 2,492억유로이며, 전년 대비 200억유로 증가
- (재정지출) 2012년 재정지출은 3,062억유로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0.1% 증가한 규모

- (신규차입) 2012년도 신규차입은 약 261억유로로 예상되며, 이는 2011년의 484억유로는 물론, 당초 정부안 272억유로에 비해 줄어든 규모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신규차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중기재정계획상 2015년까지 약 147억유로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

<표 V-2>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201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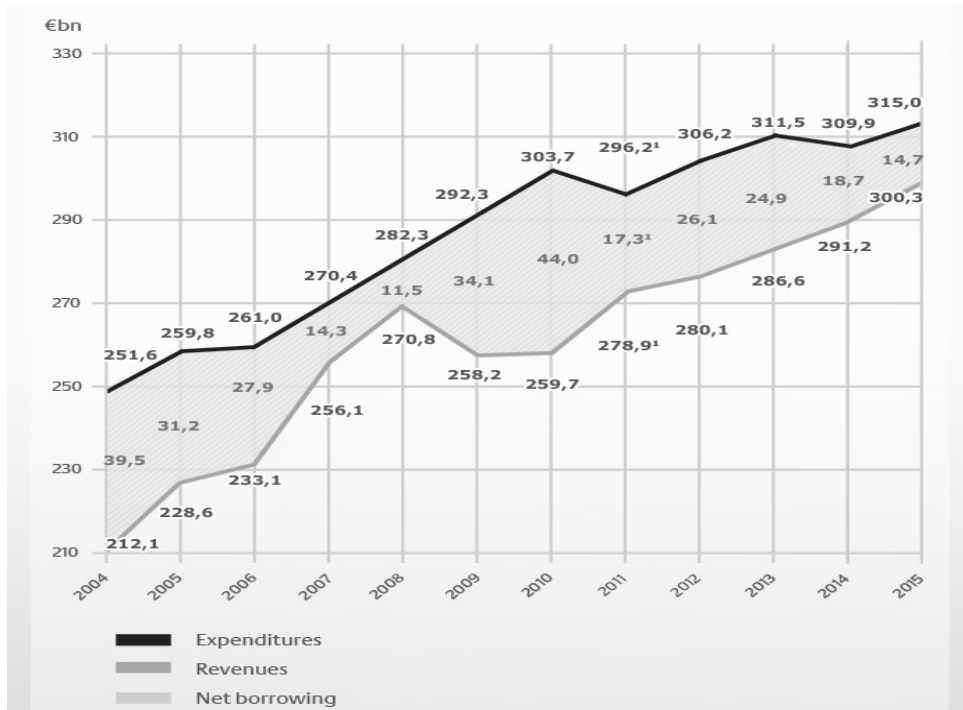
(단위: 10억유로, %)

	2010	2011 (추정치)	2012 (예산안)	2012 (확정예산)	중기재정계획		
					2013	2014	2015
I. 재정지출	303.7	305.8	306.0	306.2	311.5	309.9	315.0
전년 대비 증가율(%)	+3.9	+0.7	+0.1	+0.1	+1.8	-0.5	+1.6
II. 재정수입	303.7	305.8	306.0	306.2	311.5	309.0	315.0
조세 수입	226.2	229.2	247.4	249.2	256.4	265.8	275.7
세외 수입	33.4	28.2	31.5	30.9	30.2	25.4	24.6
신규 차입	44.0	48.4	27.2	26.1	24.9	18.7	14.7
III. 투자지출	26.1	32.3	26.4	26.9	29.7	29.5	29.3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11 bis 2015, 2011.7
 BMF 월간보고서 2011.12

[그림 V-1] 독일 연방정부 재정수입 및 지출 추이

(단위 : 십억유로)



자료: 독일 재무부, 2011.12

2) 독일정부 재정수지

-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독일 연방정부의 2012년 재정수지는 2011년과 비슷한 GDP 대비 -1.0% 내외 수준
 - EU 집행위원회는 물론, 자국 내 경제연구소(IFO, KIEL) 모두 당분간 적자재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2010년까지 GDP 대비 -4%대까지 악화되던 재정수지는 2011년 -1%대 수준으로 진입한 이후 점차 개선되는 추세

<표 V-3>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IFO	-3.2	-4.3	-1.1	-0.9	-
KIEL	-3.2	-4.3	-1.1	-1.1	-1.0
EU 집행위원회	-3.2	-4.3	-1.3	-1.0	-0.7

자료 : IFO :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2011.12

KIEL :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2011.12

EU 집행위원회 : Economic Forecast, 2011.11

3) 독일정부의 부채비율

- 독일정부가 예상한 2011년도 부채비율은 GDP 대비 82%였으며, 2012년에는 81%로 1%p 하락할 것으로 전망

<표 V-4> 독일정부 총부채 규모(독일 재무부 전망)

(단위 : GDP 대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독일 재무부	83.2	82	81	79.5	77.5	75.5

자료 : 수정된 안정화 프로그램(Deutschen Stabilitätsprogramms), 2011.4

- 독일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국외 기관들의 전망치 역시 2011년에 비해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IMF의 2011년 가을 전망에 따를 경우, 2012년 부채비율은 GDP 대비 81.9%로 독일정부의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며, 2016년에는 75.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표 V-5> 독일정부 총부채 규모(IMF / EU 전망)

(단위 :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6
IMF	66.5	74.1	85.0	82.6	81.9	81.0	75.0
EU집행위	66.7	74.4	83.2	81.7	81.2	79.9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9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1.11

2. 예산기조

- 성장친화적 재정강화계획 실시: 재정건전화를 넘어 경제성장과 재정안정의 두 가지 목표 동시 추구

- 2016년부터 부채제한법으로 인해 GDP의 0.35% 미만의 신규부채만 허용되므로, 계속된 긴축이 필요
 - 재정적자 감축 계획하에 재정지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전년 대비 0.1% 증가), 재정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시켜(전년 대비 8.8% 증가) 재정적자를 전년 대비 대폭 감소시킴
 - 구조적 신규차입 규모 감소를 위해 Top-down 예산 방식을 도입
 - 추가 수입 발생 시 우선적으로 신규부채를 감소시키는 새로운 부채제한 규정 마련

<표 V-6> 재정적자 감축계획

(단위: 억유로, %)

		2011	2012	2013	2014	누계		비중	
지출 감축	복지	30	70	94	109	303	531	37.1	64.9
	일반행정	23	33	39	39	134		16.4	
	기타(국방)	6	11	27	50	94		11.5	
세입 증대	감면축소	20	25	25	25	95	287	11.6	35.1
	항공세등 신설	33	53	53	53	192		23.5	
적자감축계획		112	192	237	276	817		100.0	

자료: 독일재무부, 2010.6

- 보조금 감축, 인센티브 강화 등 성장지향적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세원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부문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중·소기업 및 중·소 소득층 중심의 세금감면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원전연료세를 부과하고 담배세의 점진적 인상 등 방안 마련
 -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설계하여 미래의 성장 잠재력 제고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2012년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신규차입은 대폭 감소하여 총 재정수입은 3,062유로로 전년 대비 0.1% 증가
 -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2,801유로로 전년 대비 8.8% 증가
 - 조세수입은 총 2,492억유로로 200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309억유로로 전년 대비 27억유로 증가
 -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와 함께 은행부과금, 항공세 부과 등을 통한 수입 증대로 인해 재정수입 증가
 - 신규차입은 261억유로로 '11년 대비 46% 감소

<표 V-7> 연방정부 2012년도 예산

(단위 : 10억유로, %)

	2010	2011 (추정치)	2012 (예산안)	2012 (확정예산)
I. 재정지출	303.7	305.8	306.0	306.2
전년 대비 증가율(%)	+3.9	+0.7	+0.1	+0.1
II. 재정수입	303.7	305.8	306.0	306.2
조세 수입	226.2	229.2	247.4	249.2
세외 수입	33.4	28.2	31.5	30.9
신규 차입	44.0	48.4	27.2	26.1
III. 투자지출	26.1	32.3	26.4	26.9

자료 :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11 bis 2015, 2011.7
 BMF 월간보고서, 2011.12

나. 세출

<표 V-8> 2012년 독일연방 부처별 예산현황

(단위: 10억유로, %)

부처	2011	2012	증감률(%)
총리실	1.8	1.9	5.2
외교부	3.1	3.3	7.1
내무부	5.4	5.5	1.6
법무부	0.5	0.5	3.1
재무부	4.5	4.6	3.3
경제기술부	6.1	6.1	-0.1
농업/소비자보호부	5.5	5.3	-3.9
노동/복지부	131.3	126.5	-3.7
교통건설부	25.2	25.9	2.7
국방부	31.5	31.9	1.0
보건부	15.8	14.5	-8.2
환경부	1.6	1.6	-2.8
가족부	6.5	6.8	4.9
후진국지원부	6.2	6.4	2.6
교육부	11.6	12.9	11.1
연방부채	37.2	38.3	3.1
기타	11.0	13.3	20.7
합계	305.8	306.2	0.1

자료: 독일재무부, Gesamtplan des Bundeshaushaltsplans 2012

- 이번 예산안은 투자, 사회안정, 교육 그리고 연구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는 연방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었는데 사회안정을 위해 총 2,300만유로, 특히 특수 비행감시장비 설치를 위해 1,640만유로 투자 예정

- (노동 및 복지) 독일 연간 예산에서 중 가장 큰 비중(41.3%)을 차지하는 분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1270억유로를 배정함
 - 연금공단에 8백억유로 지원

- (연방부채)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12.5%)로 전년 대비 3.1% 증액된 383억유로 책정
 - 1조 3천억유로의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로 8백억유로가 지출될 예정

- (국방부) 총 320억유로가 배당되어 애초 예상보다 1억 9천만유로가 늘어났으며 이는 2011년 지출과 비교하면 3억 유로가 증가
 - 의병제 중단을 포함한 국방개혁을 통해 2011~2015 83억유로를 긴축할 예정

- (교육 및 연구) 2012년 예산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30억유로로 책정되었으며, 2013년까지 총 120억유로가 증가할 예정
 - 연방 경제기술부의 주도 하에 에너지 연구와 효율성 증진에 대해 각각 1억 5500만유로, 300만유로를 책정
 - 중소기업 혁신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 2011년보다 1억유로가 증가한 약 5억 유로를 책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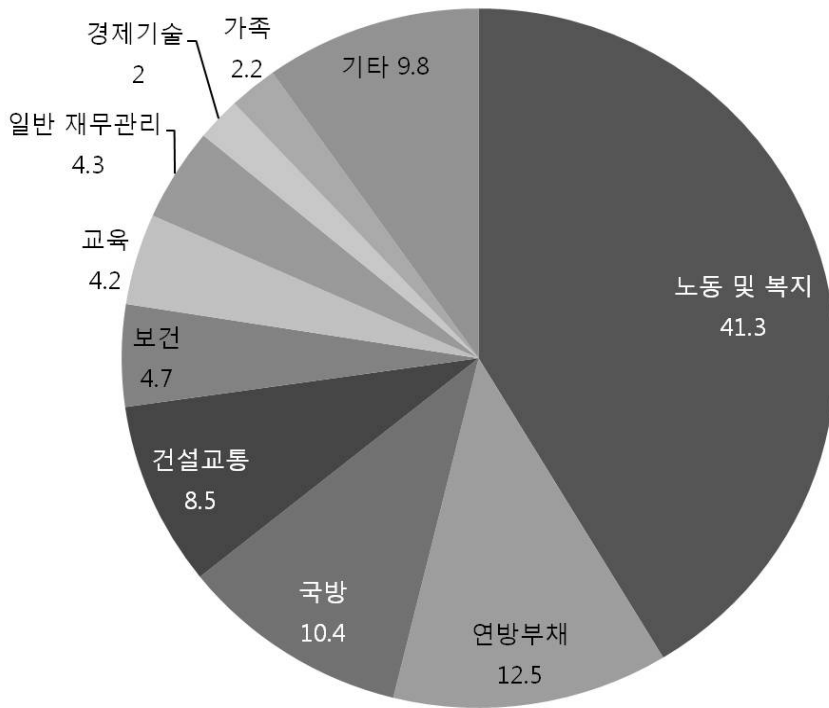
- (건설교통) 교통부로 건설 및 도시계획에 260억유로의 예산을 집행
 - 인프라구조 투자에 10억유로를 그리고 연방도로 보수 및 개설에 6억유로를, 철도사업에 1억유로를 증액

- (내무) 2012 내무부 예산은 총 55억유로가 배정
 - 사이버 IT 보안 프로그램, 아프간 경찰 훈련 및 테러 위협 방지책 등에서 추가로 4,750만유로가 지출될 예정

□ (환경) 예산계획보다 1억 1600만유로 적은 약 16억유로가 배정되었으며, 환경, 자연 보호 및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위한 기금이 15억 7,800만유로로 책정됨

[그림 V-2] 독일 연방정부 2012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자료: 독일 재무부, 2011.11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관련

- 연방재무장관 및 각 주 경제장관으로 구성된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는 2011년 12월 1일 예산평가와 관련 제4차 회의를 개최함
 - 안정화위원회는 부채제한법 준수와 영구적인 신규 차입 감소를 위해 재정건전화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필수 요소로 안정적인 세금 정책을 언급함
 - 정기적인 예산 감시의 일환으로 안정성위원회는 연방의 예산 상황과 평가지표분석을 통해 각 주의 재정 상태를 평가함
 - 안정화위원회의 평가위원회가 제공한 평가기준에 재정위기 경고를 받은 4개 주(베를린, 브레멘, 자를란트와 쉘레스비히 홀스타)가 동의함
 - 프로그램은 재정 회복을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되며, 대상이 되는 주는 매년 신규차입 감소 규모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나. 특별예산: 에너지 및 기후 기금

- 에너지 및 기후 기금: 당초 원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의 수익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원 및 재생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
- 독일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전력 실질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에너지 전환’ 진행중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폐쇄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정 및 제정 법안 8개가 최종 승인됨(2011.6.30)
- ‘환경 친화적이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구’라는 제목의 제6차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이 채택됨(2011.8.3)

□ 현재는 원전연료세의 수입으로 운영되나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연간 약 33억유로의 수입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원전폐쇄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할 예정

- 현재 운영 중단중인 8기의 원전은 즉시 폐쇄하고, 이외 나머지 9개의 원전 역시 2015 ~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
- 에너지효율이 높고 탄력적 가동이 가능한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향후 4년간(2013 ~ 2016) 기금 연간 지출의 5% 한도 내에서 지원함(2011.7.13) - 2013년에는 1.67억유로, 2014년에는 1.64억유로를 지원
- 재생에너지 개선정책을 통해 ‘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현 17%에서 35%, ’50년 80%로 확대
- 기후보호 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 대비 80-95% 감축

<표 V-9>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출	3	7.8	33.3	32.7	32.2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11 bis 2015, 2011.7

다. 기타

- 기민연(CDU), 기독교사회당(CSU), 자민당(FDP)이 세금인하, 양육지원금 인상, 사회 보장보험 분담금 인상, 고능력 취업 이민의 간소화 및 교통 시설 투자 등에 관해 합의

- 2013~2014년에 걸쳐 소득세 면세점을 8,354유로로 인상하는 동시에 부유세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
 -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2014년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매달 20유로에서 25유로 플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자민당 당비서 린드너와 연방 경제장관 뢰슬러는 조세감면으로 인해 늘어난 가계수입은 국내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
 - 총조세감면 규모는 2013년 20억유로, 2014년 약 40억유로로 추정되며, 유로존 위기와 더불어 높은 국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양육지원금 인상, 사회보장보험 분담금 인상, 고능력 취업 이민의 간소화에 관해 합의
 - (보험료율 인상) 치매환자 간병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보험율이 0.1%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약 10억유로의 수입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양육지원금 인상) 2013년부터 만2세 유아를 탁아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돌볼 경우 100유로의 보조비를 그리고 2014년에는 3세 아동도 150유로의 보조비를 지원
 - (이민자 지원) 이민자들의 독일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지원기준을 소득액 66,000유로에서 48,000유로로 인하
 - (교통시설 투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조 개선에 약 10억유로의 신규투자 계획

VI. 영 국

□ FY2012-13: 2012년 4월~2013년 3월

□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2*²⁵⁾, Cm 8231, 2011. 11. 29 OBR²⁶⁾,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 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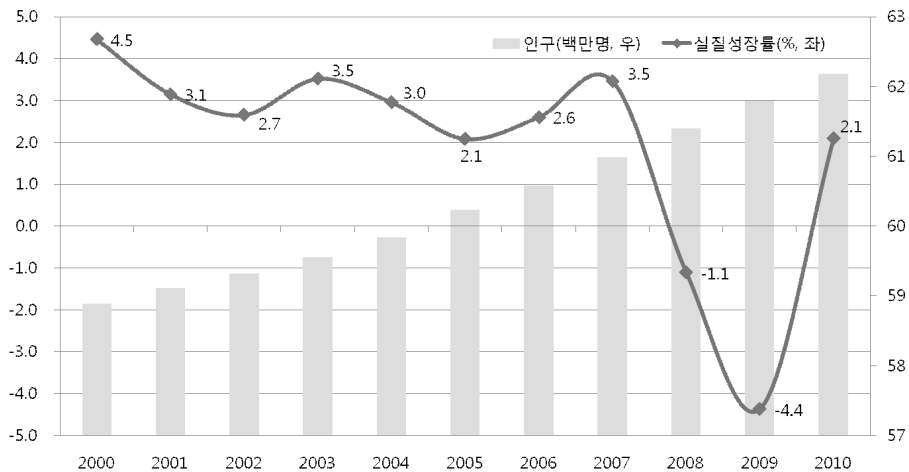
□ 환율: 1파운드 = 약 1,775.9원 (2011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0년 경상GDP 2조 2,208억달러(우리나라 약 1.6배 수준)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2010년 기준 62.8%(우리나라 102.0%)

□ 인구: 6,218만명(2010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25) 사전예산안(Pre-Budget Report)을 대체하여 2011년부터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 Report)와 예산책임청(OBR)의 경제·재정 전망보고서(Economic and fiscal outlook)를 함께 발표함. 이하 예산기조 및 예산안 내용 등은 가을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26)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성장) 지속되는 유로존의 위기와 세계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내수 침체로 인해 2012년 경제성장률을 당초('11.3월) 2.5%에서 0.7%로 하향 조정
- (재정수지) FY2012-13의 공공부문 재정적자(순차입)는 GDP 대비 7.6%로 전년 대비 0.8%p 개선될 전망
- (국가채무) 2013.3월 기준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 PSND) 규모는 GDP 대비 73.3%로 전년보다 5.8%p 증가

◇ 예산기조

- FY2012-13의 예산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Protecting the economy)를 비롯하여 경제성장(Building a stronger economy for the future)과 공정성(Fairness)을 기조로 함

◇ 세입 및 지출

- (세입) FY2012-13 경상세입은 GDP 대비 37.7%로 전년보다 0.1%p 감소
- 경제성장률 하락, 소비침체 및 소득감소, 유가하락 전망 등으로 2011.3월 예산안 시점에 비해 253억파운드 감소한 5,944억파운드로 전망
- (지출) FY2012-13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은 전년보다 약 0.9%p 하락한 45.3%로 전망
- '11.3월 예산안 전망보다 약 57억파운드 감소한 7,145억파운드 규모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FY2011-12 ~ FY2016-17까지 총 5,29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건전화 추진
-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근로소득보전세제 물가연동계획 취소, 해외개발 원조금 축소로 FY2012-13에 약 17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절감
- (경제성장) FY2012-13 ~ FY2014-15까지 약 47억파운드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도입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1.3.22	예산책임 및 감사법 2011 승인	재정동향 6호
2011.3.23	FY2011-12 예산안	재정동향 6호
2011.3.23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보고서	재정동향 6호
2011.4.26	FY2011-12 본세출예산안	재정동향 6호
2011.7.13	FY2009-10 결산요약보고서	재정동향 7호
2011.7.13	예산책임청(OBR) 장기재정 전망보고서	재정동향 7호
2011.11.29	FY2012-13 가을보고서	
2010.11.29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보고서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지속되는 유로존의 위기와 세계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내수 침체로 인해 2011~2012년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
 - 2013년 이후에는 민간투자 상승 등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표 VI-1> 2011년 3월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안 (2011.3)	1.7%	2.5%	2.9%	2.9%	2.8%
가을보고서 (2011.11)	0.9%	0.7%	2.1%	2.7%	3.0%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1년 4분기에 4.6%까지 상승하였다가 상대적인 부가가치세(VAT) 상승 둔화 등으로 2012년 2.4%로 감소
 - 2013년 4분기부터 목표치인 2.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실업) 2011년 실업률은 8.1%로 3월(8.9%)에 비해 감소했으나 2012년 전망은 8.7%로 3월 전망(8.1%)에 비해 다소 증가함
 - 경제성장과 민간부문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청년실업이 상승하여 2013년까지 8.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4년부터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 6.2%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함

<표 VI-2> 영국 경제 전망

경제 전망	실적치	전망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실질GDP 성장률(%)	1.8	0.9	0.7	2.1	2.7	3.0	3.0
- 민간소비	0.7	-0.7	0.1	0.7	1.4	1.7	1.8
- 민간투자	0.1	-0.1	0.6	0.8	0.9	1.3	1.4
- 정부소비 및 투자	0.4	0.3	-0.3	-0.5	-0.5	-0.7	-0.7
- 순무역	-0.8	1.2	0.3	0.6	0.3	0.2	0.1
소비자물가(CPI Q4)	3.4	4.6	2.4	2.0	2.0	2.0	2.0
실업률(ILO)	7.9	8.1	8.7	8.6	8.0	7.2	6.2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 Report(2011.11), Table 1.1, C.1에서 발췌

나. 재정 전망

- (세입, 세출) FY2015-16까지 경상세입의 GDP 비중은 약 38% 수준을 유지하고, 총 관리지출(TME)²⁷⁾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16-17에 GDP의 39%를 기록할 전망
- FY2012-13 경상세입은 GDP 대비 37.7%로 전년보다 약 0.1%p 감소하였으나 전망기간(~FY2016-17)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
 - FY2016-17까지 경상세입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꾸준히 증가
 - 특히 민간투자 활성화 등 경기회복으로 2014년 이후 인지세 증가 전망
 - FY2012-13 64억파운드에서 FY2016-17에 114억파운드까지 증가
 - 재정건전화 계획 등으로 FY2012-13의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은 전년보다 약 0.9%p 하락한 45.3%로 전망

27)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TME)은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과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DEL)로 구성. AME는 고정비적 성격의 지출로 크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DEL은 재량적 성격의 지출로 AME와 마찬가지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 총관리지출(TME)의 감소는 대체로 부처별 지출한도(DEL) 중 경상지출 감축에 기인함
- 다만 FY2013-14부터 경상 연간관리지출(AME) 중 사회보장지출이 감소하여 FY2016-17에는 FY2012-13보다 GDP 대비 약 1.4%p 감소 전망
 - 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 등 2010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지출 감축계획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자) FY2012-13의 공공부문 재정적자(순차입)는 GDP 대비 7.6%로 전년 대비 0.8%p 개선될 전망이며, FY2016-17까지 GDP 대비 1.2%로 감소
- FY2012-13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1.3월 전망치에 비해 약 1.4%p 상승하였으며, FY2013-14와 FY2014-15의 경우 2%p 상향 전망
 -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²⁸⁾의 기준지표인 경기조정 경상수지는 FY2012-13에 GDP 대비 3.9% 적자로 예측
 - 목표기간(five rolling year)인 FY2016-17에 GDP 대비 0.5% 흑자로 전환될 전망
 - 2011.3월 예산책임청(OBR)은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시점을 목표기간보다 1년 앞당긴 FY2014-15로 전망한바 있음
 -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FY2012-13년 GDP 대비 7.6%로 전년 대비 0.8%p 감소
 - 재정적자는 꾸준히 감소하며 FY2015-16에 협약 기준인 3% 달성 전망
 - FY2012-13 재정적자는 2011.3월 예산안 전망치에 비해 약 1.4%p 상승

28)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는 2010.5월 연립정부 수립 이후 긴급예산안(2010.6)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책임 및 감사법 2011(2011.3월 승인)의 규정에 의거한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명시되어 있음.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준 목표: 향후 5년 이내에 경기조정 경상수지(cyclically-adjusted current balance) 균형 달성
- 보조 목표: FY2015-16에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PSND) 추세가 감소로 전환되도록 함

□ (국가채무) 2013년 3월 기준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 PSND) 규모는 GDP 대비 73.3%로 전년보다 5.8%p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공공부문 순부채(PSND)는 2015년 3월 기준 GDP 대비 78.0%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의 보조 목표를 충족함
- 안정 및 성장협약 기준인 일반정부 총채무는 FY2012-13에 GDP 대비 90.1%이며, FY2014-15에 최고치인 93.9%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할 전망
- (참고) 2011년 11월 현재 영국은 유럽국가 중 유일하게 신용 등급이 개선되었으며 국채금리는 2%대의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표 VI-3> 영국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단위 : GDP 대비 %)

	실적	전망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경상세입	37.3	37.8	37.7	37.7	37.7	37.7	37.8
총관리지출(TME)	46.6	46.2	45.3	43.7	42.2	40.5	39.0
공공부문 순차입	9.3	8.4	7.6	6.0	4.5	2.9	1.2
경기조정 순차입	7.1	6.4	5.5	4.0	2.8	1.7	0.6
기초수지	-6.5	-5.4	-4.9	-3.2	-1.7	0.0	1.6
경상수지	-6.7	-6.5	-6.0	-4.7	-3.3	-1.8	-0.1
경기조정 경상수지 ¹⁾	-4.5	-4.6	-3.9	-2.7	-1.6	-0.6	0.5
공공부문 순부채 ²⁾	60.5	67.5	73.3	76.6	78.0	77.7	75.8
재정적자 ³⁾	9.5	8.4	7.6	6.1	4.6	3.0	1.3
경기조정 재정적자 ³⁾	7.3	6.4	5.5	4.0	2.9	1.8	0.7
국가채무 ⁴⁾	76.5	84.2	90.1	93.1	93.9	92.6	89.7

주: 1)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 기준지표

2) 3월 말 기준. 재정건전화 목표의 보조지표

3)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순차입

4)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총채무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 Report(2011.11), Table C.6에서 발췌

2. 예산기조

- FY2012-13의 예산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Protecting the economy)를 비롯하여 경제성장(Building a stronger economy for the future)과 공정성(Fairness)을 기조로 함
 - (재정건전화) 금융·유로 위기와 물가상승충격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도모
 -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등 추진
 - (경제성장) 인프라 투자와 기업활동 지원, 교육 투자 확대와 주택경기 부양 등 성장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공정성)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금융부문 규제 강화, 청년 취업 장려 등의 정책 시행

- 가을보고서에서 도입한 정부정책의 총재정효과는 FY2012-13에 약 5,500만파운드 확대
 - 경상지출에서 약 9억파운드의 재정절감 효과를 예측하고 있으나, 세입정책으로 약 3억파운드의 세수가 감소하고 인프라 투자 등 자본지출은 6억 6,000파운드 확대
 - FY2015-16과 FY2016-17에는 각각 약 83억파운드, 151억파운드의 재정감축 효과 예상
 - 2010년 중기재정계획 기간의 지출감축 비율을 적용한 예측치

<표 VI-4> 2011년 가을보고서 정책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조세정책	-35	-305	+145	+130	+20	+15
지출정책	0	+250	-280	+90	+8,290	+15,105
경상지출	0	+910	+1,175	+1,735	+8,290	+15,105
자본지출	0	-660	-1,455	-1,645	0	0
총정책효과	-35	-55	-135	+220	+8,310	+15,120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2011.11), Table 1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가계 및 기업 지원 세제정책 등으로 FY2012-13에 총 3억파운드의 세수 감소
 - 세입감소는 대부분 연료세 인상 연기에 따른 것으로 FY2012-13에 약 10억파운드 감소효과가 나타남
 - 2012년 1월부터 리터당 3.02펜스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인상시점을 8월로 연기하고, 동년 8월에 계획된 연료세 인상분을 취소
 - 소규모기업의 비거주재산세 감면제도(Small business rate relief)를 2012년 10월부터 6개월간 연장 적용하여 FY2012-13에 약 2억파운드의 세입 감소
 - 한편 고용주들의 연금기여금 공제 제한과 은행세(Bank Levy) 세율 인상을 통해 FY2012-13에 약 7억파운드의 세입 증가 전망
 - 은행세(Bank Levy) 세율은 0.075%에서 2012.1.1부터 0.088%로 인상
 - 고용주들의 자산담보부 연금기여금(Asset-backed pensions contributions)에도 적용되던 공제를 실제 지출액을 근거로 엄격히 적용

<표 VI-5> 가을보고서 세입정책 효과

(단위 : 백만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연료세: 1월 인상 연기, 8월 인상 취소	-375	-975	-825	-850	-875	-925
자산담보부 연금기여금 공제제한	+340	+450	+450	+450	+450	+450
은행세(Bank Levy)	0	+280	+310	+310	+315	+325
자본취득세 공제한도 동결	0	0	+25	+25	+25	+30
항공여객세 인상	0	0	+5	+5	+5	+5
소규모기업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 감면 확대	0	-210	+5	0	0	0
비거주재산세 납부연기	0	-85	+45	+40	0	0
기후변화세 감면 확대	0	0	-15	-20	-20	-20
기업투자촉진 세제감면제도 등	0	0	-50	-25	-20	-20
공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0	-25	-50	-75	-100	-125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자본공제	0	-25	-40	-25	-5	-
예술·역사 사업 등에 대한 공제 확대	0	-15	-15	-15	-15	-15
총세입정책 효과 ¹⁾	-35	-305	145	130	20	15

주: 1) 세액공제의 소득보전요소(negative tax element)를 포함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2011.11), Table 2.1에서 발췌

□ 2011년 3월 예산안 시점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락, 소비침체 및 소득감소, 유가 하락 전망 등으로 FY2011-12 이후의 경상세입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됨

○ FY2012-13의 총경상세입은 253억파운드 감소한 5,944억파운드로 전망

- FY2015-16의 경우 410억파운드 감소한 6,935억파운드 규모

- FY2012-13 세입 전망은 2011년 3월 전망에 비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감소가 두드러짐
 - 법인세 67억파운드, 소득세 59억파운드, 부가가치세 33억파운드 감소
 - 그 외 연료세 9억파운드, 인지세 5억파운드 등 감소

<표 VI-6> 경상세입 전망

(단위 :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소득세(세액공제 포함)	153.2	155.5	159.8	170.3	181.7	194.8	208.3
pay as you earn	130.5	132.1	134.5	142.8	152.7	163.9	175.9
self assessment	22.1	23.8	25.8	26.7	28.3	30.4	31.7
소득보전세제 (negative income tax)	-5.5	-4.8	-4.2	-4.3	-4.3	-4.3	-4.2
NICs	97.7	102.4	106.2	110.6	117.0	124.5	132.4
VAT	86.2	97.1	100.2	104.1	108.8	113.6	118.6
법인세	43.0	44.1	43.6	43.1	43.8	44.9	48.6
onshore	35.7	34.7	34.9	35.3	36.7	38.9	42.3
offshore	7.3	9.4	8.7	7.8	7.2	6.0	6.3
법인세 세액공제	-0.9	-0.9	-0.9	-1.0	-1.0	-1.0	-1.1
석유세	1.5	1.8	1.7	1.6	1.5	1.2	1.0
연료세	27.3	27.0	27.3	28.4	29.4	30.7	31.9
비거주재산세	23.6	24.5	26.3	28.0	29.1	29.5	31.1
카운슬세	25.7	25.9	26.1	27.6	28.7	29.8	31.0
VAT 환급(refunds)	13.3	14.0	14.5	14.5	14.3	13.9	13.6
자본취득세	3.6	4.6	4.1	4.4	5.2	6.1	7.0
상속세	2.7	2.9	2.9	3.0	3.1	3.3	3.5
인지세	6.0	6.0	6.4	7.5	9.0	10.2	11.4
인지세(on shares)	3.0	3.0	3.1	3.3	3.5	3.8	4.1
담배세	9.1	9.6	9.8	10.0	10.1	10.3	10.6
산업용주정(spirits)세	2.7	2.8	2.9	3.0	3.2	3.3	3.5
와인세	3.1	3.3	3.6	3.9	4.2	4.5	4.9
맥주 및 과일주(cider)세	3.7	3.8	3.9	3.9	4.0	4.0	4.1
항공여객세	2.2	2.6	2.8	2.9	3.2	3.4	3.8
보험료세	2.5	2.9	2.9	3.0	3.0	3.1	3.2

<표 VI-6>의 계속

(단위 : 십억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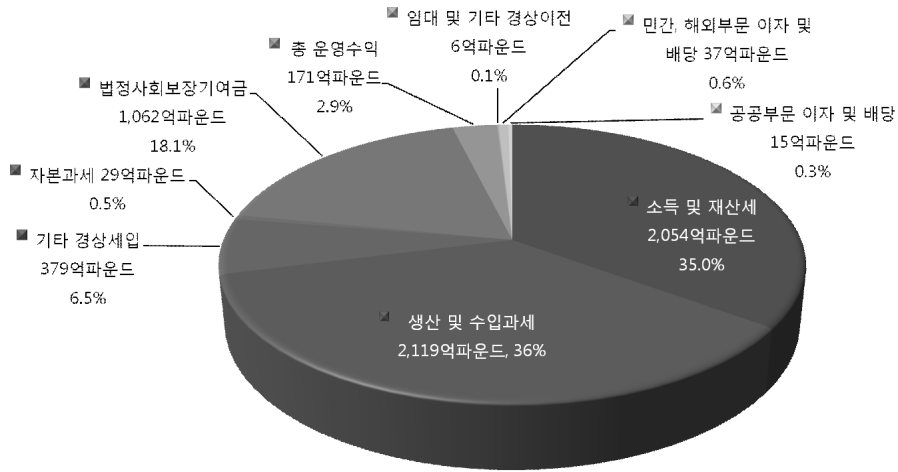
	실적	전망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기후변화세	0.7	0.7	0.8	1.4	1.8	2.1	2.5
기타 국세(HMRC taxes)	5.9	6.1	6.4	6.7	7.0	7.2	7.5
자동차세	5.8	5.8	5.9	5.9	5.9	5.9	5.9
은행원천세 (bank payroll tax)	3.5	0.0	0.0	0.0	0.0	0.0	0.0
은행세(bank levy)	0.0	2.1	2.7	2.7	2.8	2.8	2.9
Licence fee receipts	3.1	3.1	3.1	3.2	3.2	3.2	3.2
환경부담금	0.5	1.7	2.0	2.6	2.9	3.2	3.6
EU ETS 경매세	0.0	0.3	0.7	1.8	1.9	1.9	2.0
기타 조세	6.0	6.4	6.8	6.9	7.4	7.4	7.4
National Accounts taxes	528.9	554.1	571.3	599.0	630.5	663.6	702.4
EU 부담금 공제	-5.3	-5.3	-5.6	-5.9	-6.2	-6.4	-6.7
이자 및 배당	2.4	3.1	4.2	5.1	6.8	9.0	11.3
총운영수지	25.1	24.4	25.5	26.4	27.4	28.3	29.3
기타수입	0.2	-0.8	-0.9	-1.0	-1.0	-1.1	-1.1
총경상수입	551.4	575.5	594.4	623.6	657.4	693.5	735.2
UK 석유가스 세입	8.8	11.1	10.5	9.4	8.7	7.2	7.3

출처 :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1. 11), Table 4.7

□ FY2012-13 일반정부 기준의 경제유형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생산 및 수입과세가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총경상세입 중 소득 및 재산세 35%,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18.1%로 예측

[그림 VI-1] FY2012-13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규모



자료 : OBR, Fiscal Supplementary Table AS11(2011.11.29), Table 2.23

나. 세출

- 가을보고서의 지출정책으로 FY2012-13 약 2억 5,000만파운드의 재정절감 효과 예상
 - FY2012-13의 경우 경상지출에서 약 9억파운드의 재정절감이 예상되며, 자본 지출은 약 7억파운드 확대
 - FY2013-14~FY2014-15까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FY2013-14에는 약 3억파운드의 재정확대효과가 나타나고, FY2014-15에는 약 1억파운드의 재정절감에 그침
 - FY2015-16과 FY2016-17의 경우 FY2014-15까지 적용된 지출감축 비율 0.9%를 가정하여 FY2015-16에 약 83억파운드, FY2016-17에 약 151억파운드 규모의 지출절감 예상

□ 지출정책별 재정효과

- (재정건전화)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근로소득보전세제 물가연동계획 취소, 해외개발원조금 축소로 FY2012-13에 약 17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절감
 - 각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4. 주요 재정정책' 참고
- (청년취업) FY2014-15까지 총 9억 4,000만파운드 규모의 청년층 훈련계약제도(Youth Contract) 도입
 - 18~24세까지 청년층에 대한 민간부문의 고용유인을 제공
 - 연간 5,000만파운드를 16~17세의 취업 취약(disadvantaged) 청소년의 교육·훈련에 투자
- (영유아보호) FY2014-15까지 2세 이하의 취약 아동에 대해 주 15시간의 무상교육 및 보호 제공
 - FY2014-15에 3억 8,000만파운드 규모로 지원되며, 권한이양지역에는 바넷(Barnett) 공식²⁹⁾에 따라 재정지원
- (가계지원) 2012년부터 철도운임의 연간 인상률을 소매물가지수(Retail Prices Index) 초과 1% 이내로 제한하여 FY2012-13~FY2014-15까지 약 3억파운드의 재정지원 효과 예상
- (에너지) 최저탄소가격제(Carbon price floor)의 간접비용에 대해 FY2014-15까지 총 1억파운드 추가 지원
 - 전기비용 등에 대해 지원되며, 보상기준은 국가보조(state aid) 규칙에 의함
- (과학)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지원 등 연간 3,000만파운드의 재정지원
- (인프라) FY2012-13에 약 7억 6,000만파운드, FY2014-15에 약 21억 4500만파운드 투자
 -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내용은 '4. 주요 재정정책' 참고

29) 바넷 공식은 (인구비율) × (중앙부처 계획지출 변화량) × (권한이양행정부가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처기능 비율)으로 각 권한이양행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산출. 인구비율의 반영 기준은 중앙정부 부처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범위에 따라 잉글랜드 인구대비 비율, 잉글랜드와 웨일즈 인구대비 비율, 영국 전체 인구대비 비율 적용

<표 VI-7>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효과

(단위 : 백만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경상지출	0	+910	+1,175	+1,735	+8,290	+15,105
자녀세액공제 인상계획 철회	0	+975	+955	+1,020	+995	+995
근로세액공제 동결	0	+265	+290	+275	+275	+280
공공부문 임금인상 제한	0	+75	+600	+1,075	-	-
해외개발원조 축소	0	+380	+265	+525	-	-
청년층 훈련계약제도 도입	0	-365	-310	-265	-	-
영유아 보호지원	0	-85	-240	-455	-	-
철도요금 인상률 제한	0	-105	-105	-135	-	-
최저탄소가격제 비용 지원	0	0	-40	-60	-	-
과학분야 지원	0	-30	-30	-30	-	-
자본지출	0	-660	-1,455	-1,645	0	0
인프라 투자재원 ¹⁾	0	-760	-1,785	-2,145	-	-
Reserve reprofiling	0	+100	+330	+500	-	-
총 지출정책 효과	0	+250	-280	+90	+8,290	+15,105

주: 1) 인프라 투자재원의 세부내역은 <표 VI-10> 참고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2011.11), Table 2.1에서 발췌

□ FY2012-13의 총관리지출은 2011년 3월 예산안 전망보다 약 57억파운드 감소한 7,145억파운드 규모로 예측

- OBR은 2011년 3월에 비해 물가상승률(CPI) 및 실업률, 인구 증가 전망 등으로 정부지출이 약 30억파운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반면 국채수익률 감소와 기타 부처별 지출감축 등으로 약 84억파운드, 가을 보고서 정책 도입으로 약 2억파운드의 지출이 감소함
- FY2011-12에 비해서는 약 120억파운드(1.7%) 증가
 - 전년에 비해 자본지출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경상지출 중 부처별지출한도 (DEL) 약 15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 약 128억파운드 증가

<표 VI-8> 총관리지출 전망

(단위 :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경상지출							
자원 DEL	326.3	326.7	328.2	330.9	329.7	326.1	325.2
자원 AME	303.2	325.7	338.5	346.8	360.5	374.8	386.7
사회보장급여 ¹⁾	168.5	175.0	182.8	183.6	187.6	193.1	198.3
세액공제 ¹⁾	25.2	27.0	27.8	28.4	28.8	29.6	30.3
순공공서비스연금	5.6	8.4	9.9	10.5	11.6	12.5	13.5
국가복권	0.8	0.9	0.9	0.9	0.9	1.0	1.1
BEC 내국 서비스	3.4	3.7	3.5	3.4	3.7	3.6	3.7
금융시장 개입 관련 수수료	-2.5	-2.2	-0.7	-0.3	-0.2	0.0	0.0
기타부처지출	0.3	0.6	0.8	0.6	0.4	0.5	0.5
EU분담금	6.8	5.5	6.5	7.0	7.8	7.0	6.1
지방재정(Locally-financed) 지출	22.4	26.2	26.8	28.1	29.1	30.0	30.6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42.8	47.6	47.1	50.5	56.1	61.7	65.5
경상 부가가치세 환급	15.2	16.3	17.1	17.8	18.5	19.2	19.8
단용(single use) 군사지출	5.4	6.4	5.8	5.7	5.2	5.4	5.7
환경부담금	0.6	1.0	1.4	1.8	2.2	2.6	3.3
기타 회계 조정	-2.5	-2.4	-3.8	-3.7	-3.6	-3.4	-3.4
공공부문 경상지출	629.5	652.4	666.7	677.7	690.2	701.0	711.9
자본지출							
자본 DEL	43.9	36.7	35.7	34.0	35.6	35.8	37.3
자본 AME	15.1	13.4	12.1	11.4	10.6	9.8	9.5
국가복권	0.4	0.5	0.6	0.6	0.6	0.6	0.6
기타 자본지출	0.5	-8.3	0.0	0.4	0.4	0.4	0.4
지방재정 지출	6.5	14.2	4.9	4.5	4.1	3.3	3.0
공기업 지출	8.0	8.3	8.0	8.0	7.8	7.8	7.7
회계 조정	-0.2	-1.4	-1.4	-2.1	-2.2	-2.3	-2.3
공공부문 총투자	59.0	50.2	47.9	45.4	46.2	45.7	46.8
감가상각 공제	-20.4	-21.5	-22.6	-23.5	-24.4	-25.2	-26.1
공공부문 순투자	38.6	28.6	25.2	21.9	21.8	20.4	20.7
총관리지출 ²⁾	688.5	702.6	714.5	723.1	736.4	746.6	7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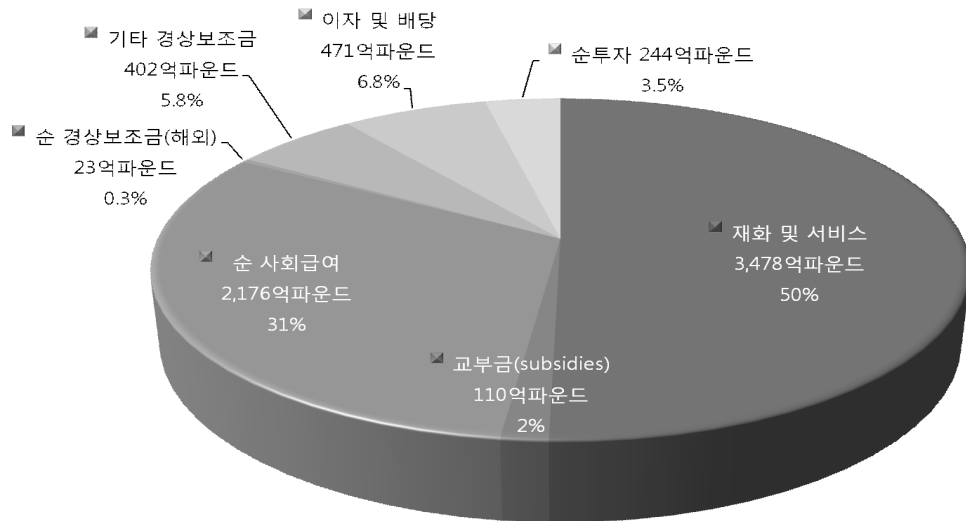
주: 1) FY2010-11~FY2014-15까지 아동수당과 구직수당은 사회보장급여에서 제외하고 세액 공제에 포함

2) 총관리지출은 공공부문 경상지출, 공공부문 순투자, 공공부문 감가상각의 합계(한시적 금융시장개입 효과 제외)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1.11), Table 4.18

- FY2012-13의 일반정부 기준의 지출규모를 비교하면 경상지출 중 재화 및 서비스 지출과 순 사회급여(social benefit) 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자본지출인 순투자 규모는 244억파운드로 전체 지출의 3.5%에 불과

[그림 VI-2] FY2012-13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지출규모



자료: OBR, Fiscal Supplementary Table AS11(2011.11.29), Table 2.23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FY2011-12 ~ FY2016-17까지 총 5,29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건전화 추진
 - FY2012-13에만 60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절감 예상
 - 600억파운드 중 370억파운드는 지출삭감에서, 230억파운드는 세수확대를 통해 달성할 계획
 - 재정건전화 규모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12-13에 약 60% 수준
 - FY2016-17에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현 정부(보수·자민 연립정부)는 집권초기에 재정건전화 규모에서 세입과 지출의 비중을 2:8로 설정하겠다고 표명한바 있음

<표 VI-9> 2010년 이후 재정건전화 총규모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재정건전화 총 규모	42	60	85	107	130	147
지출	22	37	56	77	100	116
세입	20	23	29	30	30	31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53	62	66	72	77	79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2011.11), Table 1.4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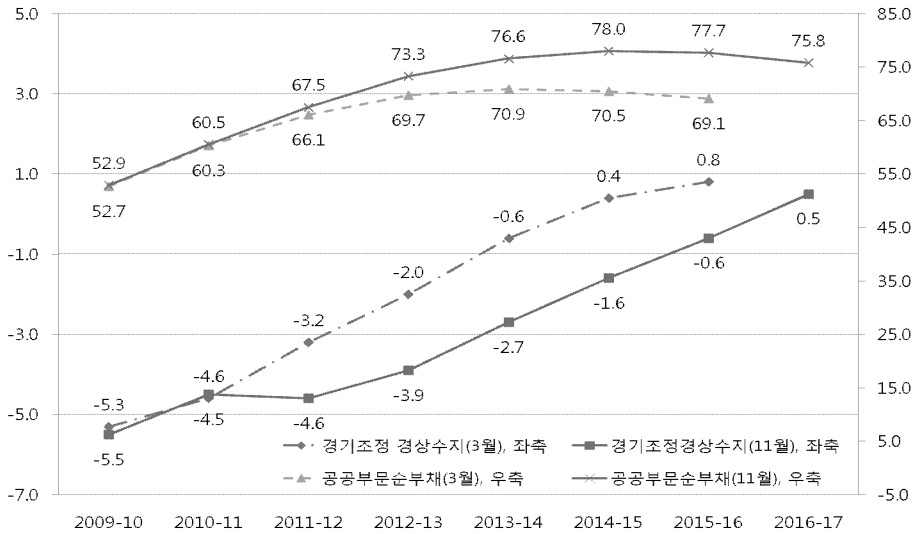
- 가을보고서에서 도입된 주요 재정건전화 정책
 - (연금) 2026.4~2028.4까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
 - FY2026-27~FY2035-36까지 현재가치로 600억파운드 절감
 - 2010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6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함

- (공공부문 임금) 공공부문 임금동결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 2년 동안 공공부문 임금인상을 평균 1%로 억제
 - FY2014-15까지 임금상승률을 총 2%로 제한하여 총 17.5억파운드 절감
- (세액공제) FY2012-13부터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계획 취소
 - 자녀세액공제의 자녀요건(child element)에 적용될 예정이던 물가상승 초과 110파운드 지급계획 철회
 - 부부 및 편부모요건에 대한 근로세액공제 동결
 - FY2012-13 ~ FY2016-17까지 연간 12 ~ 13억파운드 절감
- (해외원조) 해외개발원조 규모를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에 따라 축소
 - 2012년 총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의 0.56%, 2013년 이후 0.7%

□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에 따라 균형재정 목표 달성은 2011.3월 전망 시점에 비해 2년 후인 FY2016-17로 예측

- 재정건전화 목표달성 기준시점인 FY2016-17에 경기조정 경상수지가 GDP 대비 0.5% 흑자로 전환될 전망
- 2011.3 전망과 2011.11 전망의 차이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VI-3] 2011 예산안과 2011 가을보고서의 재정건전화 목표 전망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3 & 2011.11

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FY2012-13 ~ FY2014-15까지 약 47억파운드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도입
 - FY2015-16부터 적용되는 중기재정계획(Spending Review) 기간에 국가 인프라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 2011) 중 50억파운드의 자본투자 추진
 - 영국(UK) 연기금에서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재원에 대한 협약 체결
 - 잉글랜드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 10억파운드 증액, 권한이양 지역(devolved administrations)에는 바넷(Barnett) 공식에 따라 재정지원
 - 2012년 4월부터 투자지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제공하는 기업투자촉진 세제감면제도(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개시
 - 2013년에 대규모 기업의 R&D 투자 장려를 위한 추가 세액공제('above the line' tax credit) 도입

- 국가대출보증제도(National Loan Guarantee Scheme)를 도입하여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제공
- 노동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학교 및 교육환경 개선에 추가 재원 배정
- 신축 주거시설에 대한 모기지 금융 지원 확대 등

<표 VI-10> 인프라 투자 지출 규모

(단위 : 백만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교육	0	-345	-565	-515
추가 100개의 무상학교	0	0	-355	-355
학교시설에 대한 추가재원투입	0	-345	-210	-160
환경(Green Deal)	0	-30	-175	0
성장	-110	-295	-605	-865
지역성장기금 추가 재원 투입	0	-70	-400	-720
과학 재원	0	-100	-60	-40
R&D 투자 등 개혁 재원	0	-25	-25	-25
부동산	-500	-310	-210	25
철도	-185	-15	-15	-60
도로	-100	-75	-500	-775
교통	-25	0	0	0
총인프라 투자 지출	-920	-1,070	-2,070	-2,195
가을보고서 정책 지출	0	-760	-1,785	-2,145

출처 :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2011.11), Table 2.3에서 발췌

Ⅶ. 호 주

□ FY2011-12: 2011년 7월 ~ 2012년 6월

□ 출처:

- Budget overview 2011.5.10
- Budget Paper No.1 ~ No. 2 2011-12, 2011.5.10
- Final Budget Outcome 2010-11, 2011.9
-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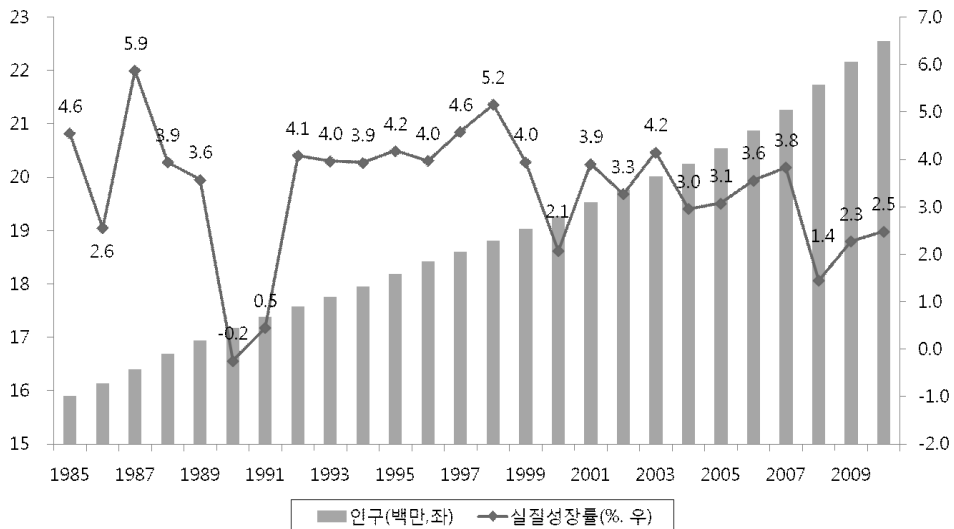
□ 환율: 1호주달러 = 약 1143.2원(2011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0년 경상GDP 918,371백만달러(우리나라 0.66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10년 기준 40.7%(우리나라 102%)

□ 인구: 22,554만명(2010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실업률 하락과 소득증가 등으로 호주경제는 견고하게 성장
-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5월 발표된 예산안(Budget)보다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예산기조: '전 호주 국민을 위한 견실한 경제(A Stronger Economy for All Australians)'라는 기조 아래 6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 호주 미래를 위한 노동력 양성
- 인프라 구축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장벽 제거)
- 건강 증진 (주정부의 병원 증설 지원)
-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 지원 확대 (1년간 저소득층 세액공제)
- 지역사회 및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예산안 내용 (세입·세출 내역)

- FFY2011-12 예산안의 총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
- Y2011-12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호주정부는 미래를 위한 노동력 양성계획을 발표
 - 기술에 대한 투자와 노동참여율의 제고가 포함
- 재정건전화
 -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재정규율 강화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1.1.27	퀸즐랜드와 빅토리아 등 대규모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를 위해 연방예산 투입 계획 발표	재정동향 5호
2011.2.10	수해복구 재원마련을 위해 한시적 특별세(Temporary Flood Replacement Levy)도입 법안 발의	
2011.2.24	길라드 연방총리, 탄소세 및 탄소배출거래제 FY2012-13부터 도입 발표	재정동향 6호
2011.3.22	수해복구를 위한 특별세(Flood Levy) 도입 법안 상원 통과	
2011.4.6	호주 연방총리, 생산성 및 노동참여율 제고를 위해 장애지원연금개혁 수행 발표	
2011.4.10	FY2010-11 연방정부 조세수입 감소 예상	
2011.4.21	효율성배당(efficiency dividend)제도 비율 상향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예산 절감 유도	
2011.5.10	FY2011-12 예산안 보고서 발표	재정동향 7호
2011.6.24	연방의회의 2011-12 예산안 승인	
2011.7.1	호주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10가지 정책 시행	
2011.9.24	FY2010-11 결산보고서 발표	
2011.11.9	FY2011-12 반기경제·재정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발표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최근 자연 재해로 2011년 호주 경제와 정부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하락과 소득증가 등으로 호주의 중기 재정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성장) 경제성장률은 2011-12년과 2012-13년에는 3.2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5월 발표된 Budget 이후 MYEFO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
 - 경제 성장의 주요 성장동력은 기업 투자와 상품 수출로 예상함
 - (고용) 실업률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Budget에 비해 하락한 고용률과 더불어 실업률은 전보다 약간 증가한 5.5%로 예측
 - (경상성장률) FY2011-12 6.25%대에서 FY2012-13까지 5.75%로 전망됨

<표 VII-1> 주요 경제 변수

(단위 : %)

	전망(Forecasts)					예측(Projections)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경제성장률 ¹⁾	2.25	4.00	3.25	3.75	3.25	3.00	3.00	3.00	3.00
고용률	2.75	1.75	1.00	1.75	1.50	1.50	1.50	1.50	1.50
실업률	5.00	4.75	5.50	4.50	5.50	5.00	5.00	5.00	5.00
소비자물가지수(CPI)	3.25	2.75	2.25	3.00	3.25	2.50	2.50	2.50	2.50
경상성장률	8.00	6.25	6.25	5.75	5.00	5.25	5.25	5.25	5.25

주: 1) 경제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자료: Budget 2011-12, 2011.5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 11

나. 재정 전망

-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지출증가와 단기의 경제여건 둔화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로 FY2011-12의 예산수지는 적자를 예상
 - (예산수지) FY2011-12의 예산수지는 371억호주달러(GDP 대비 2.5%)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폭이 감소하여 FY2012-13에는 15억호주달러로 예산수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 예산수지 흑자는 FY2017-18년 GDP 대비 1%로 예상됨
 - (순채무) FY2011-12의 순채무는 1326억호주달러(GDP 대비 8.9%)로 전망
 - FY2011-12 예산안 전망보다 채무수준이 다소 높아진 것은 CGS(Commonwealth Government Securities)의 이자율 인하에 의한 주식의 시장가치 증가와 CGS의 발행증가에 기인
 - 순채무는 자연재해와 세수감소 영향을 반영하여 이전의 예상보다 높아짐. 그러나, G7 국가의 평균 순채무는 2016년 GDP 대비 92.9%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호주의 FY2011-12의 순채무 수준보다 10배 이상의 값임

- 재정여건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
 - 예산수지는 FY2017-18에 GDP 대비 1%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순채무는 FY2011-12에 GDP 대비 8.9% 수준에서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하락하여 FY2020-21에는 0%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VI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추이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11-12		2012-13		2013-14		2014-15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재정수입 ¹⁾ (Revenue)	309.9	350.0	344.1	383.1	382.8	405.2	407.5	425.8	428.2
GDP 대비 비율	22.3	23.7	23.1	24.6	24.5	24.7	24.7	24.6	24.6
재정지출 ²⁾ (Expenses)	356.1	365.8	371.7	380.5	379.9	399.0	400.6	414.1	418.9
GDP 대비 비율	25.6	24.8	25.0	24.4	24.3	24.3	24.3	23.9	24.1
재정수지 (Fiscal balance)	-51.5	-20.3	-32.4	4.0	4.7	3.2	4.2	8.5	6.4
GDP 대비 비율	-3.7	-1.4	-2.2	0.3	0.3	0.2	0.3	0.5	0.4
예산수지 ³⁾ (Underlying cash balance)	-47.7	-22.6	-37.1	3.5	1.5	3.7	1.9	5.8	3.1
GDP 대비 비율	-3.4	-1.5	-2.5	0.2	0.1	0.2	0.1	0.3	0.2
순채무 (Net debt)	84.6	106.6	132.6	104.6	133.3	105.3	135.7	100.9	134.1
GDP 대비 비율	6.1	7.2	8.9	6.7	8.5	6.4	8.2	5.8	7.7

주: 1) 발생주의 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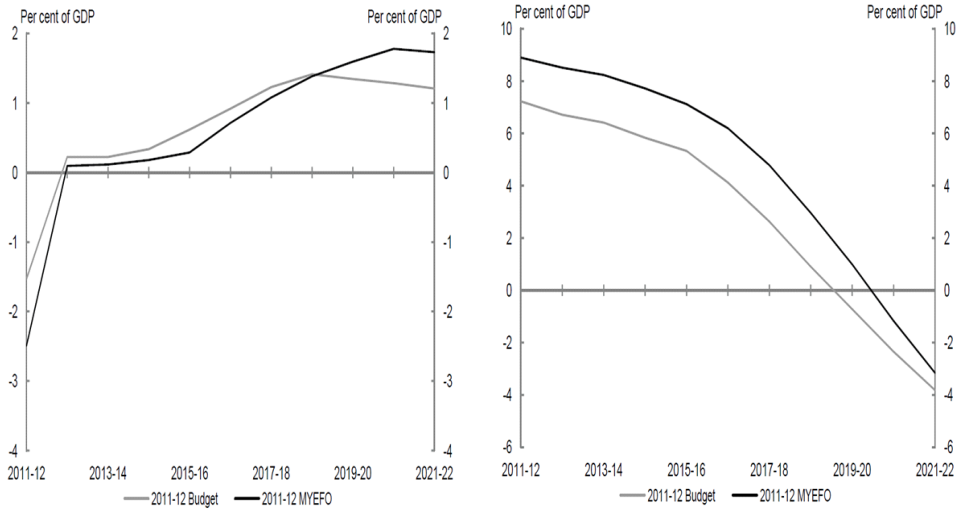
3)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자료: Budget 2011-12, 2011.5

Final Budget Outcome 2010-11, 2011.9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11

[그림 VII-1] FY2021-22까지의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자료 :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11

- 호주정부는 FY2008-09부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고안된 중기 재정전략을 유지
 - (중기재정전략) ① 예산 흑자 달성, ② FY2007-08(GDP 대비 23.5%) 수준 이하로 조세부담을 유지, ③ 중기적(media term)으로 순금융가치(net financial worth) 증가
 - UEFO(Updated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년 2월)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현금징수액(tax receipts)이 증가할 수 있도록 주력

2. FY2011-12 예산기조

□ FY2012-13년도 예산은 계획대로 흑자전환할 것이고, 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를 계획하며 다음의 6가지 요소에 중점을 둔³⁰⁾

- 미래를 위한 노동력 양성(Building Australia's Future Workforce)
 - 국가노동력양성펀드(National Workforce Development Fund)를 통해 5억 5,800만호주달러 지원
 - 직업 교육 및 훈련제도 개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17억 5000만호주달러 제공
- 인프라 구축
 - 태평양 고속도로 제건에 10억호주달러 투자를 포함하여, 도로·철도·항만 등에 360억호주달러를 투자
 -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장벽 제거
- 건강 증진
 - 2014-15년부터 2019-20년까지 병원 기금을 추가적으로 164억호주달러를 제공
 - 국민 정신 건강(national mental health reform)에 5년간 22억호주달러 지원
 - 진단 영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장하고 의약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7억 1700만호주달러 지원
 -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치과 서비스에 53백만호주달러를 지원
- 좋은 학교 만들기
 - 실력이 우수한 교사에게 4억 2500만호주달러 보상
 - 장애 학생 지원에 2억호주달러 지원
 - 국립 학교 Chaplaincy 프로그램 확장에 2억 2200만호주달러 지원
- 가구과 저소득자 지원 확대
 - 저소득 근로자 세액공제로 연 300호주달러까지 지원
 - 10대를 부양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세제혜택 A(Family Tax Benefit Part A)를 연 4,208호주달러까지 증가시킴

30) 자료: Budget Overview, 2011.5.10

- 지역사회 및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건강기금(Health and Hospitals Fund:HHF)으로 중요한 지역 인프라에 6년간 전례없는 금액인 18억호주달러 지원
 - 교육투자기금(Education Investment Fund:EIF)으로 지역 교육투자에 5년간 5억호주달러를 투자

<표 VII-3> FY2011-12부터 FY2014-15까지 예산의 주요 지출 계획

\$million	2011-12	2012-13	2013-14	2014-15
<i>Health</i>				
National Healthcare SPP	12,696	-	-	-
National Health Reform funding	-	13,522	14,395	15,999
National Partnerships	2,930	2,096	2,123	1,374
<i>Education</i>				
National Schools SPP	11,337	12,173	13,107	14,129
National Partnerships	2,397	1,675	1,226	1,135
<i>Skills and workforce development</i>				
National Skills and Workforce Development SPP	1,363	1,392	1,418	1,446
National Partnerships	505	318	357	276
<i>Community services</i>				
National Disability SPP(a)	1,204	1,260	1,318	1,397
National Partnerships	2,088	928	974	1,032
<i>Affordable housing</i>				
National Affordable Housing SPP	1,243	1,267	1,290	1,315
National Partnerships	1,111	495	546	456
<i>Infrastructure</i>				
National Partnerships	7,112	4,666	5,590	1,949
<i>Environment</i>				
National Partnerships	947	285	103	35
<i>Contingent payments</i>				
National Partnerships	528	88	90	36
<i>Other</i>				
National Partnerships(b)	2,114	2,730	2,544	2,640
Total payments for specific purposes	47,574	42,895	45,081	43,220

(a) Includes adjustment to the National Disability SPP to achieve budget neutrality under National Health Reform (see footnote to Table A.4 in Annex A for details).

(b) Includes financial assistance grants for local government.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11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1-12 예산안의 총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수준인 3,500억호주달러(GDP 대비 23.7%)로 전망
 - 조세수입은 호진된 경제상황에 따라 세입여력이 회복되어 전년 대비 13.4%로 크게 증가한 수준
 - FY2010-11에 비해 개인소득세, 법인세, 연금세 등의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은 FY2011-12에 1.1%(205억호주달러 → 207억호주달러) 증가된 207억호주달러로 전망
 - 높아진 가격과 생산량 증가로부터 기인한 해양석유 로열티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VII-4> FY2011-12 예산안 재정수입 전망

(단위 : 십억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 재정수입(Total Revenue)	292.8	310.8	350.0	383.1	405.2	425.8
전년 대비 증가율	-2.1	6.2	12.6	9.5	5.8	5.1
GDP 대비 비율	22.8	22.4	23.7	24.6	24.7	24.6
- 조세수입	268.0	290.3	329.2	362.1	383.9	404.9
전년 대비 증가율	-3.8	8.3	13.4	10.0	6.0	5.5
GDP 대비 비율	20.9	20.9	22.3	23.2	23.4	23.4
- 세외수입	24.8	20.5	20.7	21.0	21.2	21.0
전년 대비 증가율	22.1	-17.3	1.1	1.5	1.0	-1.3
GDP 대비 비율	1.9	1.5	1.4	1.3	1.3	1.2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Budget Paper No. 1 2011-12, 2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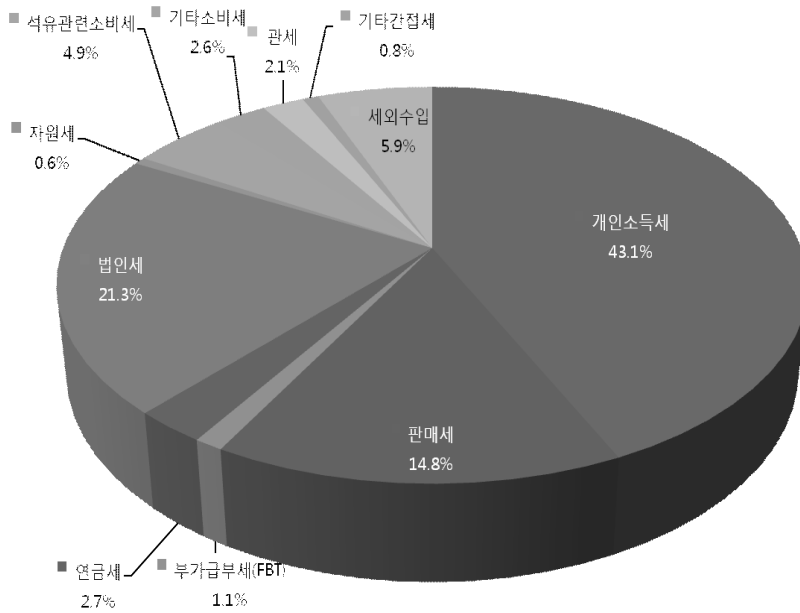
<표 VII-5> FY2011-12 예산안의 재정수입 전망

(단위 : 백만호주달러)

	2010-11	2011-12	2012-13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290,298	329,247	362,095
개인소득세 (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ation)	136,330	150,890	167,600
판매세(Total sales taxes)	49,400	51,900	55,570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3,670	3,760	4,220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7,220	9,330	10,490
법인세(Company tax)	57,880	74,600	78,140
자원세(Resource rent taxes)	940	2,050	8,090
석유관련소비세(Fuel excise)	16,230	17,180	17,580
기타소비세(other excise)	9,830	9,150	9,330
관세(Total customs duty)	6,040	7,520	8,110
기타간접세(Total other indirect taxation revenue)	2,758	2,867	2,965
세외수입(Non-taxation revenue)	20,480	20,714	21,026
총재정수입(Total Revenue)	310,779	349,961	383,121

자료 : Budget Paper No. 1 2011-12, 2011.5

[그림 VII-2] FY2011-12 예산안의 재정수입 내역



- FY2011-12 반기재정보고서 재정수입은 예산안에 비해 59억호주달러 감소를 전망
 - 조세수입은 소비세를 제외하고 모두 예산안에 비해 56억호주달러 감소를 예상하여 3,236억호주달러로 전망
 - FY2011-12 예산안보다 간접급여세와 법인세 및 관세의 하락이 두드러짐
 - 세외수입은 FY2011-12 예산안에 비해 약간 감소한 205억호주달러로 전망

<표 VII-6> FY2011-12 반기 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 전망

(단위 : 십억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재정수입(Total Revenue)	309.9	344.1	382.8	407.5	428.2
GDP 대비 비율	22.3	23.1	24.5	24.7	24.6

자료 :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11

<표 VII-7> 반기 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 전망

(단위 : 백만호주달러, %)

	FY2011-12		증감	
	Budget	MYEFO	(\$m)	(%)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329,247	323,631	-5,616	-1.7
개인소득세(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ation)	150,890	149,830	-1,060	-0.7
판매세(Total sales taxes)	51,900	50,980	-920	-1.8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3,760	3,530	-230	-6.1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9,330	8,990	-340	-3.6
법인세(Company tax)	74,600	71,800	-2,800	-3.8
자원세(Resource rent taxes(a))	2,050	2,030	-20	-1
소비세(Total excise duty)	26,330	26,960	630	2.4
관세(Total customs duty)	7,520	6,740	-780	-10.4
기타조세 (Total ther indirect taxation revenue)	2,867	2,771	-96	-3.3
세외수입(Non-taxation evenue)	20,714	20,479	-235	-1.1
총재정수입(Total evenue)	349,961	344,110	-5,851	-1.7

자료 :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11

나. 세출

□ FY2011-12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2%³¹⁾ 증가한 수준인 3,658억호주 달러(GDP 대비 24.8%)로 전망

<표 VII-8> FY2011-12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기능별 지출 전망 비교
(단위: 십억호주달러)

	201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15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일반공공서비스	21.1	20.9	21.8	21.5	21.8	22.3	22.7	23.1	23.5
국방	20.1	21.3	21.1	20.7	20.6	21.9	21.8	22.8	22.6
공공질서 및 안전	3.9	4.0	4.0	4.0	4.0	4.0	4.0	4.0	4.0
교육	32.6	29.9	30.0	30.3	30.3	31.4	31.2	32.7	32.7
보건	57.2	59.9	60.9	61.6	60.9	64.7	64.0	67.7	67.2
사회보장 및 복지	116.7	121.9	124.9	127.7	130.0	133.3	135.2	139.2	141.6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5.7	4.6	5.9	4.7	7.2	4.6	8.9	4.1	9.1
문화	3.3	3.4	3.4	3.4	3.4	3.3	3.3	3.3	3.2
에너지·연료	6.3	6.3	7.0	6.5	6.5	6.6	8.0	6.6	8.1
농림수산	3.1	3.4	3.6	2.5	2.6	2.2	2.4	2.4	2.5
광업, 건설·제조	2.0	2.0	2.1	2.0	2.1	2.0	2.1	2.0	2.2
교통·통신	4.7	6.9	8.3	7.1	5.9	6.7	6.8	6.3	6.2
경제	9.1	9.4	9.6	8.7	9.0	8.2	8.8	8.2	8.8
기타 지출	64.7	71.9	69.1	79.8	75.6	87.6	81.5	91.8	87.4
총지출	350.8	365.8	371.7	380.5	380.0	399.0	400.6	414.1	418.9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 11

31) 증가율은 CPI를 이용해 계산됨

□ FY2011-12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이하 MYEFO)의 주요 기능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교육) FY2011-12 교육분야 지출은 299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8.3% 감소하였고, MYEFO에서는 300억호주달러로 예산안보다 약간 증가
 - 교육혁명 패키지 구축(Building the Education Revolution:BER)에 따른 파트너십 지출에 기인
- (보건) FY2011-12 보건분야 지출은 599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고, MYEFO에서는 609억호주달러로 예산안보다 증가
 - 공공의료(Commonwealth's contribution)의 증가에 따른 보건 및 병원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지출 증가에 기인
- (사회보장 및 복지)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지출은 1,219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고, MYEFO에서는 1,249억호주달러로 예산안보다 증가
 -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령연금 및 소득보조지급 등의 증가에 주로 기인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FY2011-12의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분야 지출은 46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19.3% 감소하였고, MYEFO에서는 59억호주달러로 작년 예산안 수준보다 증가
 - 예산안의 감소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도입된 공공주택 건설투자가 단계적으로 감소한데 기인
- (교통 및 통신) FY2011-12의 교통 및 통신 분야 지출은 69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46.8% 증가하였고, MYEFO에서는 83억호주달러로 예산안보다 크게 증가
 - 철도와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의 증가에 기인
- (기타 지출) 자연재해(2010-11년의 홍수 및 사이클론)로 인해 기타지출이 증가하여 719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고, MYEFO에서는 691억호주달러로 예산안보다는 감소

□ FY2011-12 예산안 발표 이후 정책결정 및 거시경제변수 변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은 증가

- FY2011-12 반기재정보고서 재정지출은 예산안의 재정지출에 비해 159억호주달러 증가를 전망

<표 VII-9>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단위 : 백만호주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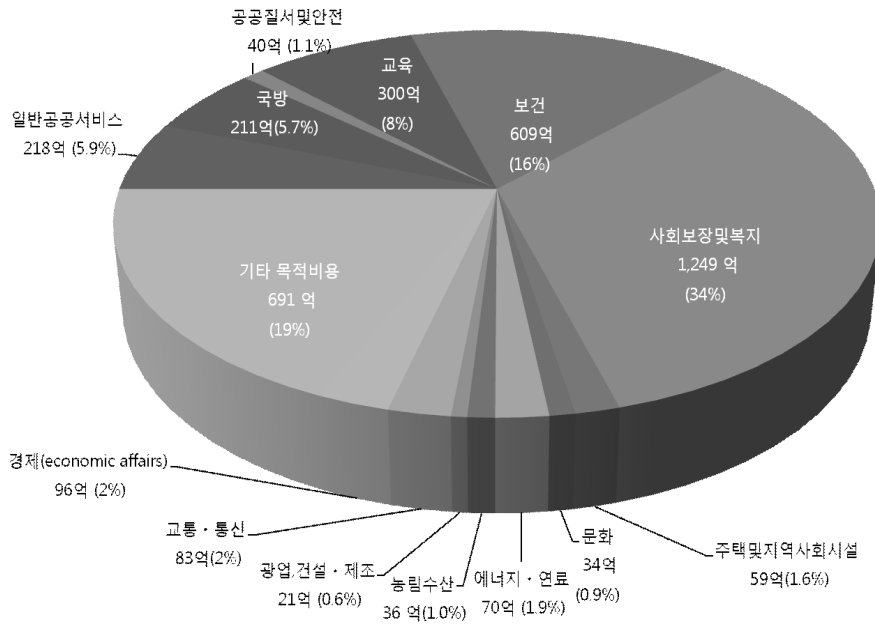
	2011-12	2012-13	2013-14	2014-15
▪ 2011-12예산안 재정지출	365,817	380,523	398,974	414,137
예산안과 MYEFO와의 차이	5,929	-587	1,649	4,726
- 정책결정효과 ¹⁾	4,805	1,166	6,269	6,468
- 거시경제변수 및 기타 변화효과 ²⁾	1,124	-1,753	-4,621	-1,741
▪ 2011-12 MYEFO 재정지출	371,747	379,935	400,623	418,863

주: 1) 정책결정으로 인한 공공채무 이자지급의 영향은 제외하고 결정된 정책을 위한 응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는 차감계산

2) 경제적 요인에 의한 변동(실업급여, 가격지수 및 임금, 이자 및 환율, 주정부에 대한 GST 지급 등) 및 공공채무 이자, 기타 변동분 등이 포함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11

[그림 VII-3] FY2011-12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자원 배분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호주 정부는 강건한 경제를 위하여 “호주 미래를 위한 노동력 양성 계획(Building Australia’s Future Workforce Package)”을 발표
 - 동 계획은 크게 ‘기술에 대한 투자’와 ‘노동참여율 제고’에 중점
 - 기술(skill)에 대한 투자: 각 산업의 기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향후 6년간 30억호주달러를 투자하여 기술인력 양성
 - 국가 및 지역, 기업이 원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5억 5,800만호주달러를 투입하여 국가노동력양성펀드(National Workforce Development Fund)를 조성
 - 더 나은 직업훈련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턴제도(apprenticeship system) 개선을 위하여 2억호주달러를 투자
 - 직업교육 및 훈련 제도의 대규모 개혁을 위하여 FY2012-13부터 향후 5년간 17억 5,000만호주달러를 제공
 - 노동참여율 제고: 복지수당에 의존하는 실업자의 취업을 유도하고 취업이 어려운 그룹에 대한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세액공제액을 즉각 환급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40세 미만의 배우자 소득공제(dependent spouse tax offset)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피부양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인
 - 15~24세 청년층 대상으로 가족세제혜택 A 지급액을 인상조치하여 교육과정 이수율 제고하고, 학교중퇴자(early school leavers)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6,760만호주달러를 제공
 - 한부모(single parents) 가정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상당지원에 370만호주달러, 지역사회 아동프로그램 확대에 1,910만호주달러, 십대부모에 대한 지원에 8,000만호주달러를 제공

- 장애지원연금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을 구직시장으로 복귀
-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

나. 재정건전화

- 호주 정부는 재정규율 강화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통해 FY2012-13에 흑자전환 달성을 목표
 - 정부는 FY2010-11부터 FY2014-15까지 실질지출증가율을 2% 내로 유지 계획
 - 정부지출은 FY2014-15년까지 GDP의 23.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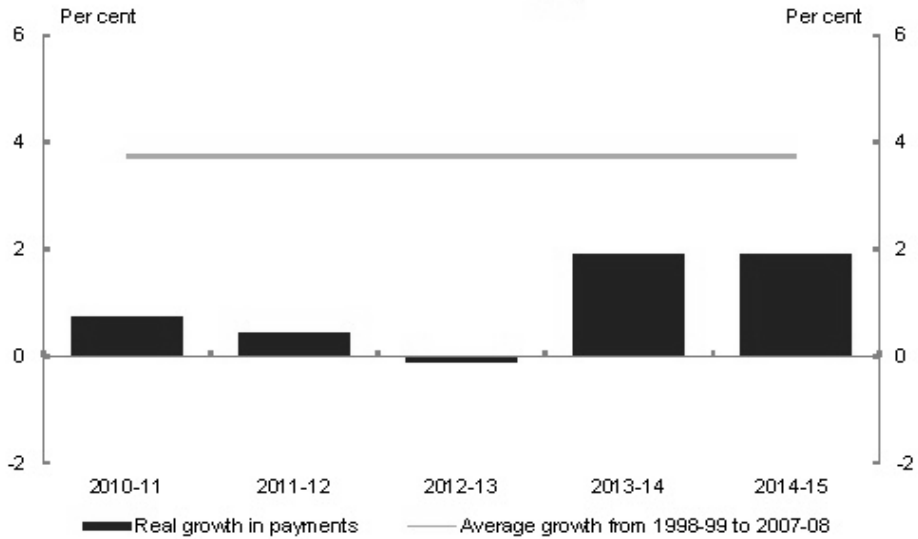
<표 VII-10>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실질지출증가율 전망

(단위: %)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FY2014-15
실질지출증가율	0.7	0.5	-0.1	1.9	1.9

주: 실질지출증가율은 현금주의기준의 지출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FY2011-12 Budget Paper No.1, 2011.5

[그림 VII-4] 실질지출증가율



자료: FY2011-12 Budget Paper No.1, 2011.5

- 그러나, 반기경제재정보고서에서는 FY2011-12에 실질지출증가율을 3.7%로 전망하였고 평균증가율은 1.5%로 전망
 - 이것은 FY2010-11의 실질지출증가율이 -0.4%로 축소되었기 때문

<표 VII-11> FY2011-12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실질지출증가율

(단위: %)

	FY2011-12	FY2012-13	FY2013-14	FY2014-15
실질지출증가율	3.7	-3.0	3.3	2.0
평균증가율	1.5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12, 2011.11

- 정부는 재정흑자 달성을 위하여 향후 추계기간 동안 약 220억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
- 지출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등 긴축 예산 편성

<표 VII-12> 주요 예산절감 계획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Total
	\$m	\$m	\$m	\$m	\$m	\$m
Natural disaster recovery and rebuilding						
Temporary flood and cyclone reconstruction levy	-3.8	1,492.6	218.1	-2.9	0.0	1,704.0
Deferral of infrastructure projects	122.5	400.3	644.2	104.7	-326.3	945.4
Cessation of the Green Car Innovation Fund	40.9	7.5	102.3	102.9	180.6	434.2
Priority Regional Infrastructure Program – reallocation	0.0	50.0	125.0	125.0	50.0	350.0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11.6	60.9	70.2	89.1	113.3	345.1
Capital Development Pool – cessation	0.0	55.0	78.0	81.0	84.0	298.0
Reduction and deferral of funding for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Flagships program	0.0	109.6	18.2	0.0	122.2	250.0
Tax reform and integrity						
Fringe benefits tax — reform of the car fringe benefit rules	5.0	26.4	135.4	331.2	455.9	953.9
Dependent Spouse Tax Offset - phase out	0.0	60.0	220.0	230.0	245.0	755.0
Removing minors' eligibility for low income tax offset on unearned income	0.0	0.0	240.0	250.0	250.0	740.0
Tax compliance — reporting taxable payments	0.0	-3.6	-10.3	183.3	255.5	425.0
Abolish the Entrepreneurs' Tax Offset	0.0	0.0	0.0	180.0	185.0	365.0
Sustainability of family payments						
Pause indexation of upper limits and thresholds for a further two years	0.0	-0.1	231.4	475.1	495.5	1,201.9
Pause indexation of Family Tax Benefit supplements for three years	-0.2	76.8	179.1	268.1	279.3	803.2
Reprioritising spending						
Defence - Capital Investment Reprogramming	0.0	-69.8	158.9	323.8	868.0	1,280.8
Defence - Increased efficiencies	0.0	226.6	320.7	318.7	319.1	1,185.0
Efficiency dividend – temporary increase in the rate	0.0	126.0	250.4	309.0	371.1	1,056.5
Building Australia's Future Workforce — Productivity Places Program — redirection of funding	0.0	83.8	255.7	257.0	257.4	853.9
Carbon Capture and Storage Flagships – reduction and deferral of funding	100.0	17.1	97.1	90.7	116.0	420.9
Medicare Benefits Schedule – pathology services	0.0	64.0	90.5	109.3	142.1	405.9
National Mental Health Reform – Better Access Initiative – rationalisation of GP mental health services	0.0	50.1	80.5	85.4	90.9	306.9
Green Start program – cessation	121.2	41.2	0.6	0.0	0.0	163.0
Other	71.0	973.6	1,680.7	1,631.1	2,622.3	6,978.7
Total saves^(a)	468.2	3,847.9	5,186.8	5,542.5	7,176.9	22,222.4

(a) In underlying cash terms, the Budget delivers savings of \$21.7 billion over five years.

자료: Budget Overview, 2011-12 2011.5.10